

별 간 등 록 번 호

11-8553554-000003-01

2023년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인천 섬 발전 정책 비교분석 연구

2023. 12.

인천 섬 발전 정책 비교분석 연구

2023.12.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제출문

인천관광공사 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천 섬 발전 정책 비교분석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프로젝트이안 대표 김준호

목차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3
3. 연구의 체계 및 방법	4
II. 정부 정책 동향	5
1. 관련 법령	7
2. 관련 계획	12
3. 관련 사업	42
4. 시사점	55
III. 지역 정책 분석	59
1. 관련 조례	61
2. 관련 계획	71
3. 관련 사업	92
4. 시사점	98
IV. 사례 검토	103
1. 전라남도 관련 정책	105
2. 경상남도 관련 정책	111
3. 충청남도 관련 정책	116
4. 시사점	121
V. 의견수렴	125
1. 주민 의견수렴	127
2. 관계자 의견수렴	129
VI. 제언	135
■ 부록	147

I .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체계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섬의 가치 보존 및 지역 위기 극복 차원에서 섬 관련 정책 중요성 부각

- 오늘날 섬의 가치 보존과 함께 지역 위기(인구소멸위험, 고령화 등) 극복을 위한 섬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개발대상섬 32개와 관리섬 8개 등을 포함한 다수의 군소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섬발전지원조례」에 의거 지난 2020년 ‘인천섬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였음

[인천 섬 현황]

- ☞ 섬 개수¹⁾: 168개 (유인섬 40개, 무인섬 128개) * 전국의 섬 3,382개(유인섬 464개, 무인섬 2,918개)
- ☞ 섬 면적: 713.82km² (인천 전체 면적의 67.18%)
- ☞ 특정 섬 개수: 31개 (전국 특정 섬의 12.85%)

□ 관련 정책 분석 및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인천광역시의 섬 발전 방향 도출

- <섬 종합분석을 통한 섬발전기본계획>(2022), <인천 섬 여건 및 실태조사>(2023) 등 기 수립된 계획의 현실성 제고를 위한 ‘현황 기반 기초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실효성 높은 인천 섬 정책의 발굴 및 실행을 목적으로 섬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인천 섬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 섬 지역 전체 및 사례 지역(전남, 경남, 충남)

□ 시간적 범위

- 정책 검토 시점 : 2023년
- 계획 기간 : 2024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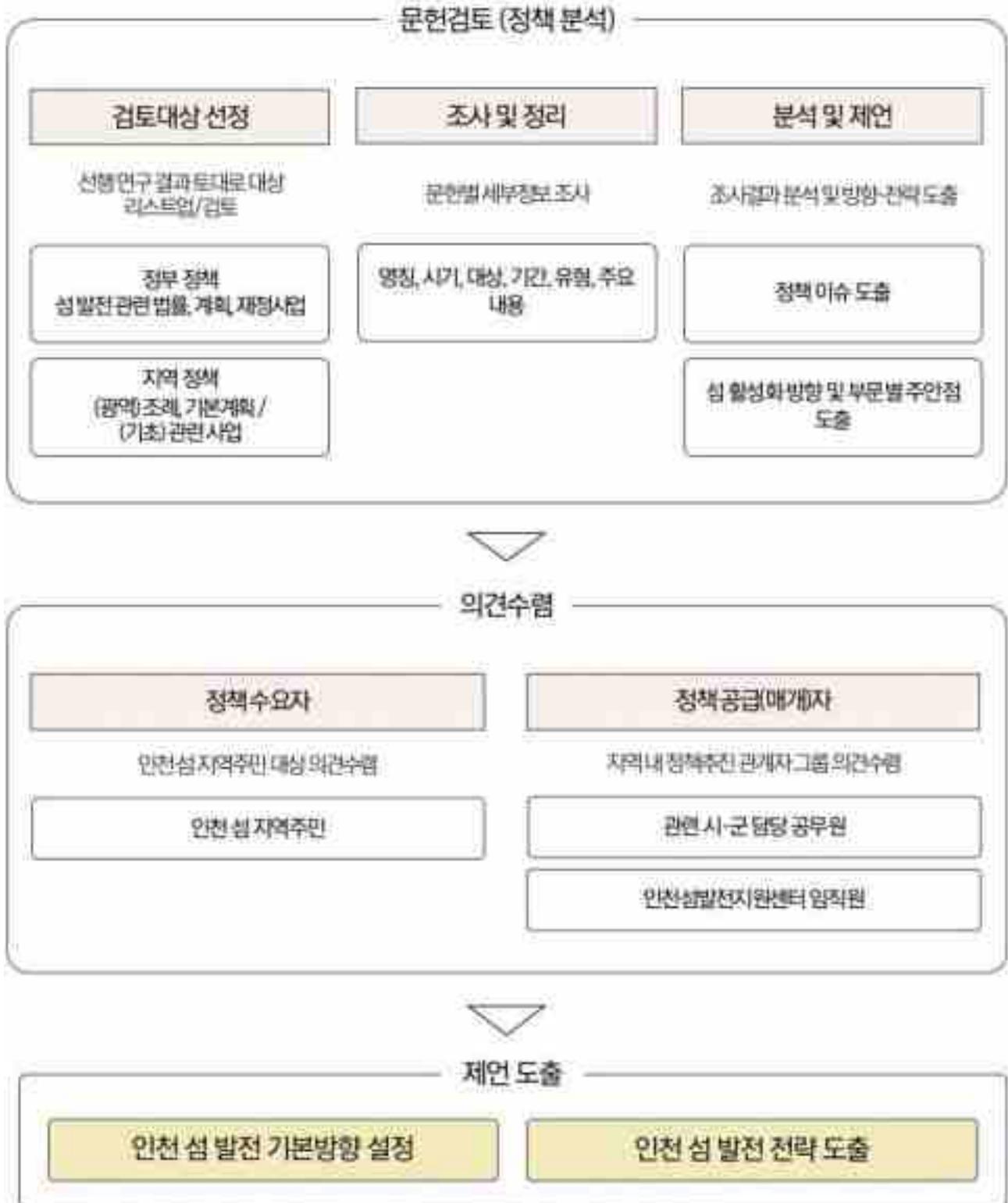
□ 내용적 범위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섬 지원 정책 비교 조사] 섬 관련 법·제도·계획·재정사업 조사, 정부 정책 자료, 연구보고서·논문, 세미나·워크숍 발표자료 등 2차 자료 활용
- [인천의 섬 정책 및 관련 계획조사] 인천의 섬 정책 및 관련 계획 조사, 인천 기초자치단체별 섬 관련 재정사업 정리
- [인천 섬 정책 관련 의견수렴] 섬 지원 정책 관련 주민·공무원 의견수렴
- [국내 섬 정책 분석을 통한 인천 섬 발전방향 제시] 인천 섬 정책 종합 진단, 인천 섬 발전방향 및 주요 전략과제 도출

1)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공공데이터포털)로, 해양수산부 집계 수치와 상이함

3. 연구의 체계 및 방법

[그림 1-1] 연구의 체계 및 방법



* 인천 섬발전기본계획(2022-2026)과의 연속성 확보 / 타 지자체 사례조사 결과 반영

II. 정부 정책 동향

1. 관련 법령
2. 관련 계획
3. 관련 사업
4. 시사점

1. 관련 법령²⁾

[검토 대상 선정 기준]

- ☞ 조사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제한 (고시, 규정, 규칙 등 행정규칙 제외)
-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섬’, ‘도서’ 단어 검색(법률명, 조문) → (인천광역시 이외 지역의) 특정 섬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제외 +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 법률 제외 (관련 법률 중 섬 지원 관련 내용은 필요에 따라 부분 발췌 및 분석)

[표 2-1] 섬 발전 관련 법률

주관 부처	법률	제정 연도
행안부(4)	섬 발전 촉진법	1986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20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202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011
해수부(1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
	낙시 관리 및 육성법	2011
	어업자원보호법	1953
	수산업법	1953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
	연안관리법	1999
	어촌·어항법	2005
	해양 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200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0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201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14
농림부(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방조제 관리법	1991
해수부&농림부(2)	농어촌정비법	1963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1994
복지부(1)	농어촌 등 보건요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2011
국토부(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1980
교육부(1)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2008
산자부(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1967
환경부(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96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97
해양경찰청(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017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961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내용을 참조해 연구자 작성

□ 10개 부처에서 27개 섬 지원에 관한 (특화) 법률 제정 및 시행 중

- 중앙행정부처 중 법조문에 ‘섬’과 관련된 법령의 소관부처는 10개로, 해양수산부가 관련 법령 12개로 가장 많이 소관하고 있으며, 그 외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등이 관련 법률을 소관함

2) 한국섬진흥원(2022)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및 보완

- **해양수산부**는 해양정책·수산·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등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임에 따라 섬에 대한 지원 근거인 법률을 다수 소관, 섬의 발전과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관하는 법률의 경우, 주로 섬의 개발이나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
- **보건복지부·교육부**가 주관하는 법률은 섬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법률은 섬 주민의 행정에 관한 법률적 지원 등을 규정함

□ 「**섬 발전 촉진법**」, 「**무인도서법**」, 「**도서생태계법**」은 ‘**섬**’을 규율 대상으로 함

- 국내 법령 중 ‘섬(도서)’를 규율 대상화 하고 있는 법률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섬 발전 촉진법」, 해양수산부 소관 「무인도서법」, 환경부 소관 「도서생태계법」이 있으며 특정 섬(도서)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은 해양수산부 소관 「독도이용법」,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소관 「제주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음
- 「섬 발전 촉진법」은 “섬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을 명시, 섬의 날 지정·개발대상섬의 지정·지정섬의 고시·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세제 지원·교통편의 증진지원·섬발전심의위원회 설치·한국섬진흥원 설립 등에 대한 사항 등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섬 발전 촉진법」의 주요 규정은 개발대상섬의 지정과 이에 따른 개발대상섬의 사업계획·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대상섬의 지정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목표·개발범위·사업개요·사업시행기간에 대한 사항을 행안부장관이 고시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0호에 따르면 2018~2027년까지 8개 시·도 36개 시·군·구의 371개 도서가 개발대상섬으로 지정되어 있음 (인천32개, 경기4개, 충남24개, 전북23개, 전남215개, 경북2개, 경남63개, 제주8개)

「섬 발전 촉진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2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조 (개발대상섬의 지정)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지정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5조 (지정섬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목표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무인도서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인도서·주변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 정의·국가의 책무·타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한 총칙(제1장), 무인도서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제2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제3장), 무인도서의 점검·토지매수 등을 포함한 보칙(제4장), 양벌규정·과태료 규정을 포함한 벌칙(제5장)으로 총 3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무인도서법」은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구분하여 관리유형별 무인도서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섬 발전 촉진법」과 달리 지정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비정기적으로 관리유형에 대해 변경·고시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기준 총 2,918개의 무인도서가 고시되어 있음(전남 1,743개, 경남 475개, 충남 252개, 인천 153개, 전북 105개, 제주 59개, 부산 42개, 기타 89개)³⁾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무인도서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유형별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2.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3.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4. 개발가능무인도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무인도서의 위치·면적 및 육지와의 거리
 2.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3. 무인도서의 역사적 가치
 4. 무인도서의 시설물 및 이용현황
 5. 과거 주민거주 여부 및 향후 거주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7. 영해의 설정과 관련한 무인도서의 의의
 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여부
 9. 그 밖에 관리유형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2개 이상의 무인도서가 밀집되어 있고 그 동질성 등으로 인하여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고, 1개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에 대하여 구역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도서생태계법」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지형·지질을 비롯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쾌적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용범위·특정도서의 지정·기본계획·기초조사·행위제한·출입금지·허가·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총16개 규정으로 구성함

- 「도서생태계법」은 무인 도서 중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와 같은 섬을 특정 도서로 지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는데, 특정도서 지정 시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고시, 2022년 12월 기준 257개소가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음(경기2개, 경남62개, 경북1개, 부산3개, 인천31개, 전남106개, 전북16개, 제주6개 충남30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서생태계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1. 화산, 기생화산(寄生火山), 계곡, 하천, 호소, 폭포,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水資源), 화석,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4. 자연림(自然林)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서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변경할 수 없다.
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存置)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정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3)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통계에 고시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집계 수치와는 상이함 (부처 간 기준 차이)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추진 (2024년 1월 국회 본회의 통과)

-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해양산업의 국민총생산 기여도가 9% 이상을 차지하고 지속 증가할 전망임에도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관광자원의 활동도가 낮아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있음
- 해양수산부는 해양 레저관광에 관한 정책을 주관하고, 국내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등이 담당해왔으나, 해양관광산업 육성 등에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함 ('21년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총 1조5천억 원,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소관 예산은 총 556억 원 수준으로 약 27배 수준의 차이, '14년~ '20년 관광사업 투입 예산 약 11조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해양관광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약 700억원으로 6.4%에 불과⁴⁾)
-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에서의 안전 및 해양자원 보존과 해양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육상관광·도시관광과 차별된 종합정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해양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법안임
 - 발의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관광정책의 기본방향·시책에 대한 사항 및 해양관광 활성화 지원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양관광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양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관광 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활성화 실시계획 수립, 해양관광 교육, 전문인력 양성, 협회 구성 등의 내용을 명시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처별 '섬(도서)' 관련 법률은 소관 정책과 관련된 섬 주민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우선지원 및 예외적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부처별 '섬'이 언급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육지와 분리되어 불리한 조건을 가진 섬에 대해 각종 기준이나 규정 적용의 예외를 두거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경우가 다수임
- 「경찰공무원법」이 '섬'을 언급하고 있는 규정은 신규채용(제10조)규정으로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할 경우"(제3항 제5호)에는 경력·응시요건을 따로 정하여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음을 명시, 이 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은 섬(도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평가·승진·전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제9조) 규정에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서산간(섬)을 포함한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의무를 규정함
- 「지방분권균형발전법」(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정의(제2조) 규정에 "특수상황지역이란 「섬 발전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섬"이라 규정함과 동시에 성장촉진지역개발(제20조) 규정에 특수상황지역·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함
-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조직(제18조) 구성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라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거주하는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섬(도서)'를 언급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대체적으로 일반적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섬 주민에 대한 우선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4) 주철현의원(더불어민주당)실 해양관광진흥법안 발의 관련 자료

[표 2-2] 기타 섬 발전 관련 법률 (관련 조문 포함)

주관 부처	법률
경찰청(2)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찰공무원법
고용부(3)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과기부(5)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우편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교육부(11)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사립학교법, 영재교육진흥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국방부(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군무원인사법, 예비군법, 통합방위법, 병역법
병무청(1)	병역법
국토부(11)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로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유료도로법, 자동차 관리법, 주차장법
기재부(6)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농림부(4)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문화부(1)	지역문화진흥법
방송위(3)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복지부(14)	건강검진기본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산림청(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자부(6)	광업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소방청(1)	소방공무원법
식약처(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인사혁신처(1)	국가공무원법
조달청(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기부(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앙선관위(2)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특허청(3)	발명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표법, 특허법
해수부(4)	선박안전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어선안전조업법, 해운법
행안부(9)	조세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방위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원순환기본법, 지하수법,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자료: 한국섬진흥원(2022)의 내용을 참조해 연구자 작성

2. 관련 계획

[검토 대상 선정 기준]

- ☞ '섬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계획'과 '섬을 일부분 포함하면서 섬(혹은 섬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계획'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 (인천광역시 소재 섬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제외)
- ☞ 2023년 현재 시행 중인 계획으로 제한 (계획 기간이 2023년까지인 경우 제한적으로 검토)

[표 2-3] 섬 발전 관련 정부 계획

주관 부처	계획명	계획 기간
행안부(2)	1-가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 (구 도서종합개발계획)	2018-2027
	1-나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⁵⁾	2011-2025
해수부(9)	2-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	2019-2028
	2-나 제3차 해양수산업발전기본계획	2021-2030
	2-다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2014-2023
	2-라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
	2-마 제3차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	2020-2024
	2-바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2021-2025
	2-사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2020-2029
	2-아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2019-2028
	2-자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2020-2029
해수부&농림부(1)	2-차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2020-2024
국토부(2)	3-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3-나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2021-2030
문화부(2)	4-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2024
	4-나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22-2031
환경부(2)	5-가 제2차 특정도서기본계획	2015-2024
	5-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20-2040

1) 행정안전부 주요 계획

가.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 (2018-2027)

□ 「섬 발전 촉진법」을 근거로 10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함

- 섬종합발전계획은 유인 섬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계획으로 「섬 발전 촉진법」을 근거로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해 낙후된 섬 지역의 생활 및 생산, 소득 기반, 복지시설을 정비·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수립·추진됨
- 현재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우리 국토, 섬의 가치 재발견!'이라는 비전을 제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교통 개선·관광 활성화', '규제 완화', '주민 기본 생활 지원'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함

5) 최초 계획은 2011년~2020년이었으나 2020년 7월 5년 연장(2011-2025)되었으며, 현재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2026-2035)> 수립 중임

[그림 2-1]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지속가능한 우리 국토, 섬의 가치 재발견	품격 높은 삶의 터전으로서 섬	① 소득 증대·일자리 확충으로 섬 활력 제고 ② 복지문화 등 삶의 질 증진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섬	③ 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통 여건 개선 ④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 기반 육성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영토로서 섬	⑤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창출 ⑥ 중심마을 육성을 통한 주민생활 개선

자료: 한국섬진흥원(2022), 「섬종합발전계획 성과분석」

□ “지속가능한 우리 국토, 섬의 가치 재발견”이라는 비전 아래 3개의 목표와 6개 전략과제 제시

- 첫 번째 발전 목표로 제시한 “품격 높은 삶의 터전으로서 섬”에서는 주민소득 증대·일자리·복지·의료 등 삶의 질의 선진화를 공표, 모도-자도를 연계한 섬 간 협력·범부처의 섬 발전사업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통한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세부 전략과제로 제시함
- 두 번째 발전 목표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섬”으로,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여 섬의 특색있는 문화·환경의 극대화, 섬의 특수성이 반영된 관광 기반시설, 섬 관광 프로그램 개발, 주민이 참여하는 친환경 관광사업 육성이라는 세부 전략과제로 제시함
- 세 번째 발전 목표는 “영토수호 거점으로서 섬”으로 국토 공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 거주할 수 있는 기본생활 인프라 구축, 도서주민이 지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주권 강화라는 세부 전략과제로 제시함

나.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2011-2025)

□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10년 단위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시행,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은 5년 연장되어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추진

-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국토 최서북단에 위치한 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주민 생활의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립되는 종합발전계획임
-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당초 계획이었으나, 2025년까지 종합계획이 연장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5도’를 비전으로 ①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우선 반영, ② 당초 약속한 국비 투자 약속 이행, ③ 효과성이 높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을 핵심추진 방향으로 설정함⁶⁾
- 종합발전계획의 연장에 따라 정부는 국비 투자 규모를 당초 4,599억에서 5,557억으로 958억의 투자를 확대하여 2025년 120% 목표 달성 계획을 세움

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0.07.20.),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 국비투자 규모 확대하고 지역주민 맞춤형 계획으로 개편”

[그림 2-2]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비전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 5도						
목표	살기 좋고 안전하며 활력있는 서해 5도						
3대 전략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정주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 </div>						
민중계비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등 정주여건 지속 개선 • 일자리 창출, 꽃게 수산물가 생산시설 구축 등 주민소득 증대 • 용기포신항 개발, 하수도 건설 등 대형 SOC사업 기반시설 확충 • 백령 문화체육시설 건립, 평화관광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체육 관광분야 지원 • 백령공화연평도항 예타 추진, 서해 5도 통신망 품질 개선사업 등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여 주민숙원사업 차관방안 마련 <p>☞ 당초 약속한 국비 규모를 준수하고, 서해 5도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으로 내실화</p>						
세부추진 전략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 background-color: #d9ead3; text-align: center;">정주 여건 개선</td> <td style="padding-left: 10px;"> <input type="checkbox"/>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input type="checkbox"/>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ext-align: center;">안전 및 편의</td> <td style="padding-left: 10px;"> <input type="checkbox"/> 주민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 <input type="checkbox"/> 편리한 해상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ext-align: center;">주민 체감형</td> <td style="padding-left: 10px;"> <input type="checkbox"/> 경쟁력 있는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기반 구축 <input type="checkbox"/> 주민 체감형 문화 체육 관광 기반 확충 </td> </tr> </table>	정주 여건 개선	<input type="checkbox"/>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input type="checkbox"/>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안전 및 편의	<input type="checkbox"/> 주민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 <input type="checkbox"/> 편리한 해상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주민 체감형	<input type="checkbox"/> 경쟁력 있는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기반 구축 <input type="checkbox"/> 주민 체감형 문화 체육 관광 기반 확충
정주 여건 개선	<input type="checkbox"/>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input type="checkbox"/>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안전 및 편의	<input type="checkbox"/> 주민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 <input type="checkbox"/> 편리한 해상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주민 체감형	<input type="checkbox"/> 경쟁력 있는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기반 구축 <input type="checkbox"/> 주민 체감형 문화 체육 관광 기반 확충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0.07.20.),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 국비투자 규모확대하고 지역주민 맞춤형 계획으로 개편”

□ 비전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5도”, 3대 전략 및 6개 추진전략 제시

- 첫 번째 전략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과제로 설정, 노후주택 개량사업 및 정주생활지원금 지원·해상운송비 지원·슬레이트 지붕개선·방과후 돌봄학교 운영 등을 세부 전략과제로 제시함
- 두 번째 전략은 ‘안전 및 편의’로 주민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 편리한 해상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과제로 설정, 공공하수도 건설, 소각시설 증설, 생활자원 화수센터 설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등 SOC 사업 적극 추진을 전략과제로 제시함

- 세 번째 전략은 ‘주민체감형’으로 경쟁력 있는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기반 구축 및 주민 체감형 문화 체육관광 기반 확충을 추진과제로 설정,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시설 건립, 노후 체육시설 개선, 평화관광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시설 기반 확충을 추진을 전략과제로 제시함

2) 해양수산부 주요 계획

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 (2019-2028)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0년 단위 발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

- 해양공간 기본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함
-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지속되는 기본계획으로 2030 해양공간 비전(미래상)에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를 제시, 해양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해양생태계 가치 기반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 지자체 책임관리를 통한 해역별 맞춤형 해양공간관리 실현을 목표로 설정함
-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은 해양공간 관리자원의 합리적 배분, 해양생태계 혜택 기반 정책결정, 통합과 포용의 동반자적 협력 관리, 해양공간관리와 국가경제 발전 연계, 장래 관리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함

□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 3개 목표 및 5대 추진전략 제시

- 첫 번째 추진전략은 ‘능동적 적응형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으로 해역별로 점진적 공간관리계획 수립 추진, 관할 해역의 공간 및 자원관리 체제 혁신, 발전잠재력지수, 지속가능성 지수 등 해양관리평가 종합체계의 개발 및 해역별 공간관리 정책방향 개선에 활용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함
- 두 번째 추진전략은 ‘과학적·통합적 해양공간관리 기반 구축’으로 공간특성평가 방법의 개선과 고도화 지속적 추진, 환경영향평가, 준조세, 해양보호구역제도, 연안관리제도 등 타 법률의 이행수단 해양공간관리에 연계활용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함
- 세 번째 추진전략은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고도화’로 해양공간정보 통합 및 공동 활용 플랫폼 조기 구축 및 지속적 갱신, 해양공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함
- 네 번째 추진전략은 ‘참여협력의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으로 부처·지자체·이해관계자 참여·협력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소통수단 개발·교류기반 구축, 지역협의회 기능 강화, 한·중·일 해양공간계획 공동수립 추진 및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 다섯 번째 추진전략은 ‘해양공간관리 이행 지원 인프라 강화’로 중앙부처·지자체 업무수행체계 조기 정비·개선, 지역 해양공간관리 역량확충을 위한 인력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그림 2-3]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 해양수산부(2019),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

[그림 2-4]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의 서해중부권(인천·경기·충남) 해양공간관리 현안



자료: 해양수산부(2019),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

□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은 인천을 포괄한 서해중부해역의 현안점검·추진방향을 제시함

- 기본계획은 인천·경기·충남을 포괄하는 서해중부해역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 입지공간 확보의 한계, 인천·충남 연안 및 서해 EEZ 바닷모래 채취 지속에 따른 어업활동과 상층 심화 예상, 갯벌·물범 보호 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용개발 주체와 갈등 잠재 등을 주요 현안으로 진단함
- 서해중부해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로는 조력 및 조류발전 건설수요(인천만조력, 강화조력, 덕적조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 시화호 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강화남단 갯벌을 대상으로 갯벌국립공원(인천시) 및 백령도 일원을 대상으로 점박이 물범의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대중국 물류 거점 확보 및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천항 개발 추진, 인천형 명품섬 육성, 서해5도 특화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나.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21-2030)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근거로 10년 단위의 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근거로 10년마다 해양수산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 및 관할해역, 나아가 글로벌 해양개발 전진기지 개념을 포함하며 필요시 연안지역까지 동 계획의 범위로 설정함
- 현재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정책 수립의 기본계획으로서 활용되며, “2030 해양한국 비전: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를 비전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 3대 목표 · 6대 추진전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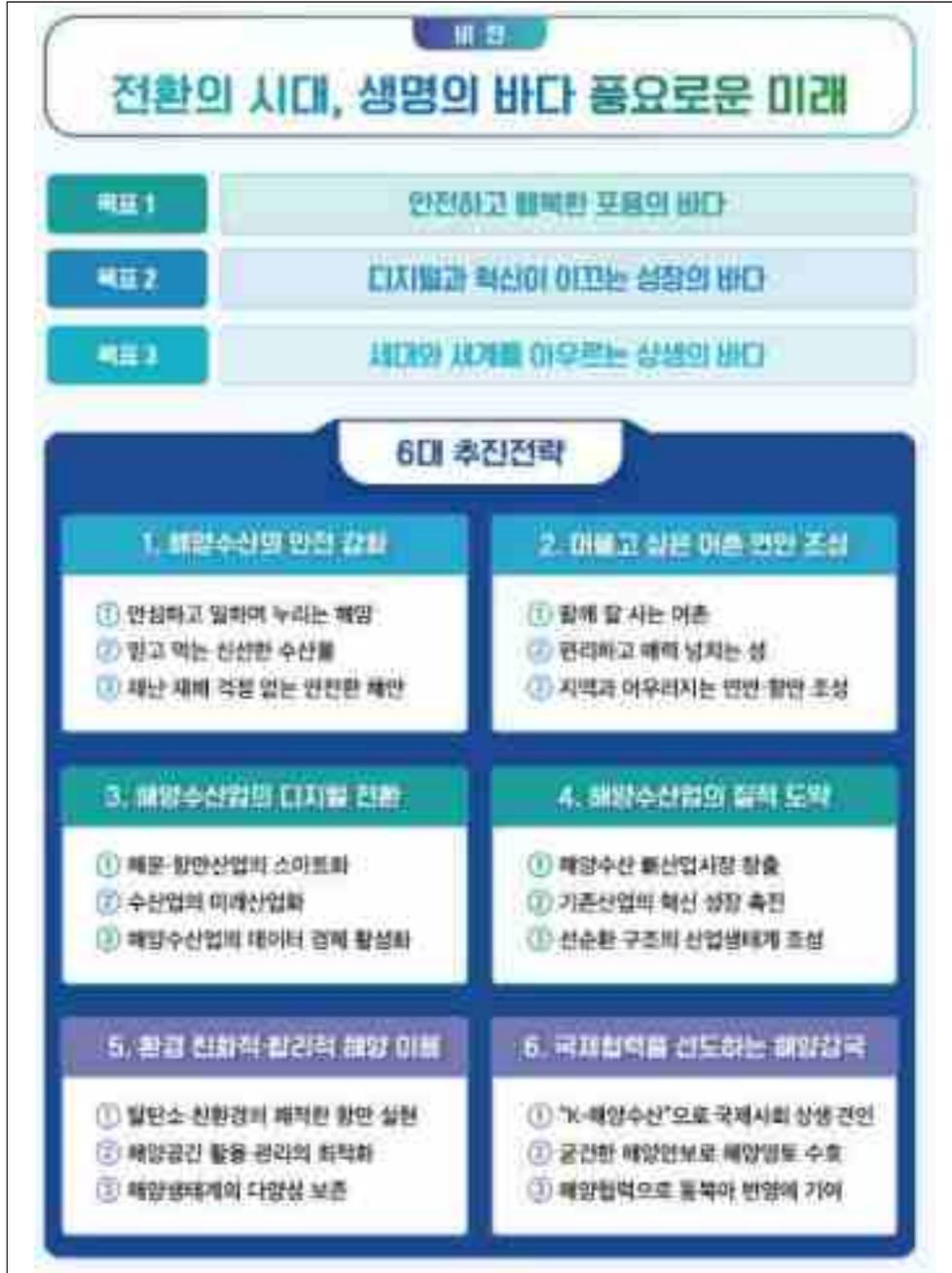
- 첫 번째 목표는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로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업 종사자 작업환경·국민의 해양레저활동 안전기준 강화, 수산물 양식·유통 과정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제공, 재난·재해 예방에 AI,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연안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함
- 두 번째 목표는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로 디지털과 해양수산업의 융합, 해양수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항만, 차세대 해상교통통신 등 신기술을 해운·항만 산업에 적극 도입, 수산업 전주기 디지털화, 기업의 규모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기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 분석·전망 및 정책수립 체계 마련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함
- 세 번째 목표는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로 해양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바다를 위해 탈탄소·친환경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쾌적한 연안·항만 구현, 불법어획·남획 예방, 해양보호구역의 실효성 제고로 수산자원 회복·해양생태계 보존, 국제해양수산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양모범국가로의 위상 제고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함

□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국내 주요 무역항인 인천에 대한 발전계획을 계획함

-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안보항만 확대 및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2030년까지 인천·군

산·여수·울산·포항·제주 6개 무역항에 해경부두 확충 등 서해·동해권 해양안보 확보를 위한 관리부두·국가어업지도선부두 및 해경·해군 부두 지원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그림 2-5]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 대한민국정부(2021),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23)」

- 동아시아 경제부상에 따른 해운항만 산업의 선진화의 근거로 국내 주요항만인 부산·인천·광양의 컨테이너 물동량 현안을 점검하고, 지속 발전을 위한 인천·부산·광양·포항 등 7개소의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항만의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 항만시설 재해 안정성 강화 및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군산·목포 등 주요 항만에 내진 성능 확보를 보강한 항만시설 성능 보강 및 항만지진 감시 전파 체계 자동화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을 제시함

- 지역별 항만생산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항만 물류시스템 개선과제에 인천항·광양항 등 권역별 특화 개발을 통한 성장기반 확보를 목표로 인천항에 본격적인 대형 컨테이너 부두를 확보하여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항로 중심으로 준설 추진계획을 구축하고 있음

다.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2014-2023)

□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은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되 5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검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해 및 관할 해역·바다 인접 연안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해양관광·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콘텐츠 확충 및 이를 위한 법·제도·정보기반 조성 및 권역별 발전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함
- 현재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동북아 해양관광허브 실현’을 비전으로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과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을 정책목표로 설정함
- 기본계획의 해양관광자원 관리·개발의 기본방향은 ①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부합하는 개발 및 활용, ②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구분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 ③ 해양관광자원의 적극적 관리체계 구축, ④ 해양레저·관광활동의 활성화 촉진, ⑤ 산업화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 마련으로 설정하고 전국 연안과 인접해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동북아 해양관광허브 실현”, 5개 목표 및 14개 추진과제 제시

- 첫 번째 전략과제인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은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촉진, 해양치유 관광 육성, 해양휴양공간 조성·정비, 노후항만의 해양친수공간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두 번째 전략과제는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마리나산업 고도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세 번째 전략과제는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으로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해양문화시설 확충,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개발을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네 번째 전략과제는 ‘생활 속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으로 어촌의 관광자원화, 테마가 있는 연안 조성, 섬관광 활성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다섯 번째 전략과제는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바다관광’으로 동북아 크루즈 허브 실현,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여수박람회장의 국제해양관광허브화, 국제대회 및 행사 참여·유치를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은 특화된 권역개발 추진계획 구상,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도시위락형 국제 해양관광거점으로서의 육성계획을 제시함

-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은 전국 연안과 인접해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자연·인문·사회적 여건에 따라 특화된 권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권역별 해양관광 육성계획을 수립함
-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도시위락형 국제 해양관광거점으로서 육성’을 목표로 국제크루즈선 유치를 통한 해양도시관광 활성화, 도시근교 마리나 확충으로 요트·보트 등 해양레저 확산, 관광·문화·

힐링이 어우러진 복합휴양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제시함

- 권역개발 추진계획 이외에도 인천항을 포함한 국내 주요 항구 대상 '국가미항프로젝트'를 통해 노후·유 휴 항만공간을 시민친화적 워터프론트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 인천 영종도의 준설토 투기장을 영종·청라지구, 인천공항 등과 연계한 종합레저·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설계함
- 동북아 크루즈 허브 구축 추진과제는 크루즈 국내 기항 유치기반 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인천·부산·제주에 10만톤급 이상 크루즈 전용부두 4개 선석 건설 등 '20년까지 전국 9개 항만에 총 12선석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그림 2-6]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 해양수산부(2014),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2014~2023)」

[그림 2-7]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권역 구상도



자료: 해양수산부(2014),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2014~2023)」

라.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
 -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0년 단위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해당 계획은 해양환경 분야를 종합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환경분야·해양수산 분야 총괄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임
 - 현재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이 수립·시행중이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를 비전으로 생태적으로 거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목표로 성정하고 있음
-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 3대 실천목표 · 6대 전략을 제시
 -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의 목표는 해양환경 매체별 관리 강화, 해양활동의 활용도 제고, 녹색산업의

영역으로 확대해 해양 가치 향상을 위한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리, 쾌적한 해양환경의 수월한 접근·향유, 해양환경 보전·활용의 산업적 특성 발굴 지원으로 설정함

[그림 2-8]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비전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
정책 목표	<p>① (보전)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환경 생태관리 1등급 해역비율 : (19) 54% → (30) 73% 해양보호구역(멸종위기종) : (20) 9.2% → (30) 20%</p> <p>② (이용) 쾌적한 해양환경의 조성 및 이용도 증진 해양플라스틱쓰레기 현존량 : (18) 13.8만톤 → (30) 5.9만톤 양면 미세먼지 배출량(PM2.5) : (17) 7,958톤 → (30) 1,266톤</p> <p>③ (성장) 친환경적 해양 경제활동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성장 해양바이오 기술수준 : (19) 78.6% → (30) 85% 2050년 해양수산 부문 탄소중립 실현 * 간속 목표는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 부속 종합계획(20에서 제시)</p>
추진 전략	추진 과제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	① 참여형 스마트 해역환경 관리기반 조성 ② 육상기인 오염물질 저감 ③ 해역별 맞춤형 관리 강화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① 해양생태계 상태·변화 과학적 평가 ②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와 개선 ③ 해양생태계의 복원과 개선 ④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확장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① 생활밀착형 해양쓰레기 관리 ② 해안이 제공하는 다양한 친수기회 확대 ③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④ 배우며 즐기는 해양환경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① 해양오염사고 대비체계 재정비 ②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③ 해양·양면 대기환경 분석·예측 고도화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①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 고도화 ② 친환경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 ③ 융합형 해양환경 보전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	① 해양 기후변화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②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관리 ③ 생태기반 해양공간관리 지원체계 구축 ④ 해양환경영향 평가체계 전문성 강화 ⑤ 해양환경 분야 국제협력 선도

자료: 해양수산부(2021),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

- 첫 번째 추진전략은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로 참여형 스마트 해역환경 관리기반 조성, 육상 기인 오염물질 저감, 해역별 맞춤형 관리 강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함
- 두 번째 추진전략은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로 해양생태계 상태·변화 과학적 평가,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와 개선, 해양생태계의 복원과 개선,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확장을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함

- 세 번째 추진전략은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로 생활밀착형 해양쓰레기 관리, 해안이 제공하는 다양한 친수기회 확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배우며 즐기는 해양환경을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함
- 네 번째 추진전략은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로 해양오염사고 대비체계 재정비,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해양·항만 대기환경 분석·예측 고도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함
- 다섯 번째 추진전략은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로 해양바이오 산업의 기반 고도화, 친환경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 융합형 해양환경 보전산업 육성을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함
- 여섯 번째 추진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로 해양 기후변화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관리, 생태기반 해양공간관리 지원체계 구축, 해양환경영향평가체계 전문성 강화, 해양환경 분야 국제협력 선도를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

□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국내 주요항만·연안인 인천에 대한 발전계획을 포함함

- 종합계획은 연안오염총량관리 확대 방안으로 특별관리해역인 인천 연안 및 광양만에 대한 연안오염총량관리 확대 추진을 계획함
- 국민 대상 해양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활용하여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해양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운영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항만·해양 배출저감 관리 업무표준 개발을 통한 항만 기인대기환경 관리 강화 과제는 인천항·부산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관리활동 및 관리업무별 표준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분석·예측 플랫폼을 개발하여 주용 항만인 인천항 등에 플랫폼의 시범 구축·적용을 계획함

마. 제3차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 (2020-2024)

□ 「어촌·어항법」을 근거로 5년 단위의 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을 근거로 어촌 시군구 74개, 읍면동 492개소를 대상으로 5년마다 어촌 어항의 종합적,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어촌 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 및 어촌 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현재 제3차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어촌을 신명나는 삶터로, 어항을 활력있는 경제거점으로'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통합재생과 균형발전, 특화개발과 지역혁신을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4대 정책방향 및 12대 추진전략을 제시함

□ “어촌을 신명나는 삶터로, 어항을 활력있는 경제거점으로”, 4대 정책방향 · 12대 추진전략 제시

- 첫 번째 정책방향은 '가고싶고 살고싶은 어촌·어항 재생'으로 어촌·어항 통합 재생 인프라 확충, 어촌·어항 유휴자원 재생, 모두가 살기 좋은 어촌·어항 조성을 추진계획으로 설정함
- 두 번째 정책방향은 '고르게 발전하는 어촌·어항 개발'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어촌·어항 조성, 더불어 잘사는 어촌 기반 구축,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어항의 기능 강화를 추진계획으로 설정함
- 세 번째 정책방향은 '특색있고 활력있는 어촌·어항 조성'으로 특색있는 어촌경제 활성화, 새로운 활력

을 창출하는 어항개발, 매력있는 어촌·어항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주요 추진계획으로 설정함

- 네 번째 정책방향은 ‘안전하고 스마트한 어촌·어항 혁신’으로 안전한 어촌·어항 기반구축, 깨끗한 어촌·어항 만들기, 편리한 어촌·어항 개발을 추진계획으로 설정함

[그림 2-9] 제3차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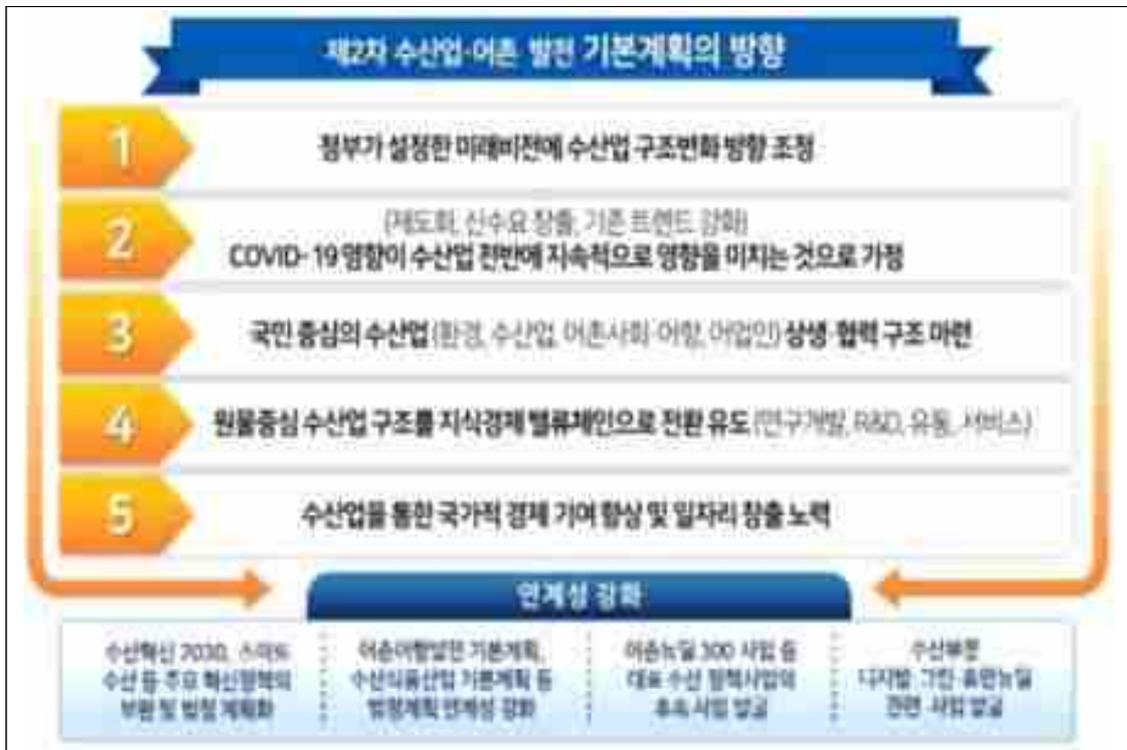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2019), 「제3차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2020~2024)」

바.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2021-2025)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5년 단위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수산업 어촌의 정책 방향 및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수립·추진하고 있음
- 현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의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시행 중이며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어촌’을 비전으로 5대 목표 10대 전략을 제시함

[그림 2-10]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방향



자료: 해양수산부(2021),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어촌”, 5대 목표 · 10대 추진전략 제시

- 첫 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비한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 생산 환경 조성을 추진계획으로 설정함
- 두 번째 목표는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으로 지속가능 수산물 먹거리시스템 구축,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 강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함
- 세 번째 목표는 ‘활력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으로 활력있는 일터 마련,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터 조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함
- 네 번째 목표는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로 K-브랜드 활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제규범 이행, 협력 강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함
- 다섯 번째 목표는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으로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수산업 신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함

[그림 2-11]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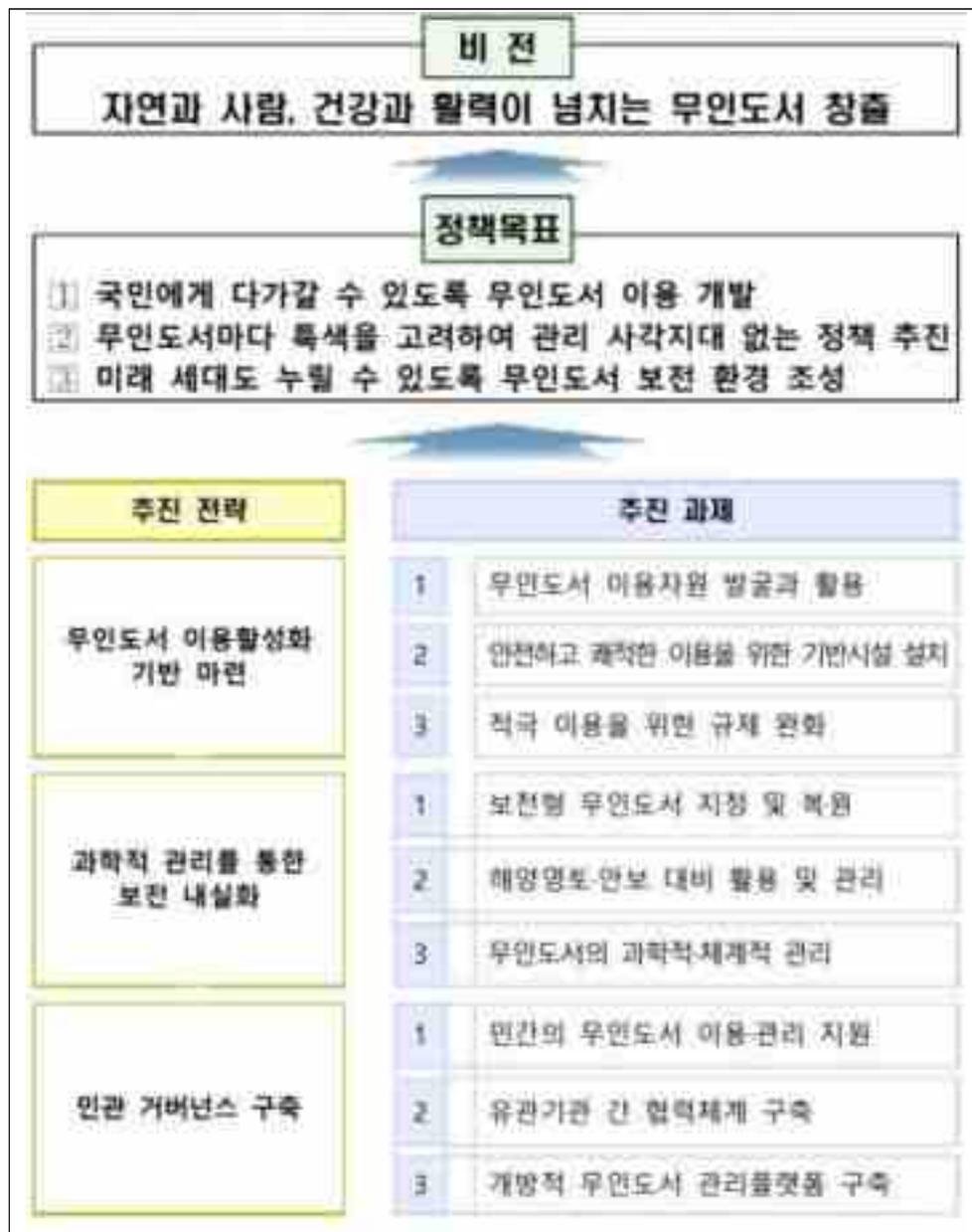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2021),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

사.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2020-2029)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0년 마다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함
 -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립하는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자, 지속가능한 무인도서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으로 10년 주기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함
 - 현재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에 대한 기본정책방향 등을 제시,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을 비전으로 설정함
-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 3대 목표 및 추진전략, 9대 추진과제 제시
 -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무인도서 이용개발, 무인도서 특색을 고려하

- 여 관리 사각지대 없는 정책추진, 미래세대로 누릴 수 있는 무인도서 보전환경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함
- 첫 번째 추진전략은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무인도서 이용자원 발굴·활용,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적극 이용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과제로 설정함
 - 두 번째 추진전략은 '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로 보전형 무인도서 지정 및 복원, 해양영토·안보 대비 활용 및 관리, 무인도서의 과학적·체계적 관리를 추진과제로 설정함
 - 세 번째 추진전략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민간의 무인도서 이용·관리 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개방적 무인도서 관리플랫폼 구축을 추진과제로 설정함

[그림 2-12]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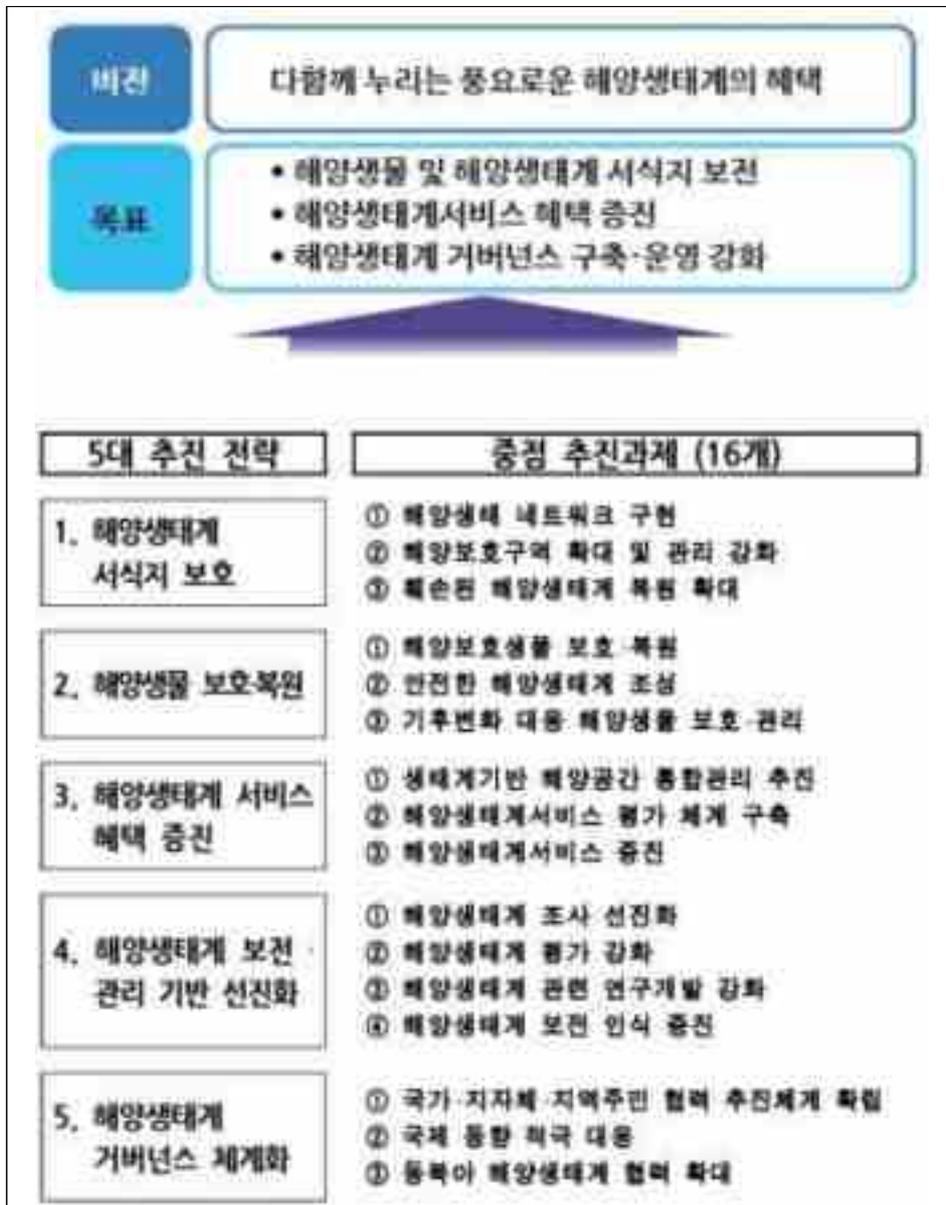
자료: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영토과(2020),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안)」

아.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2019-2028)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 10년 단위의 발전계획 수립·시행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법」을 근거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임
- 현재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다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해양생태계의 혜택’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 및 16개 중점 추진과제가 추진됨

[그림 2-13]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 해양수산부(2019),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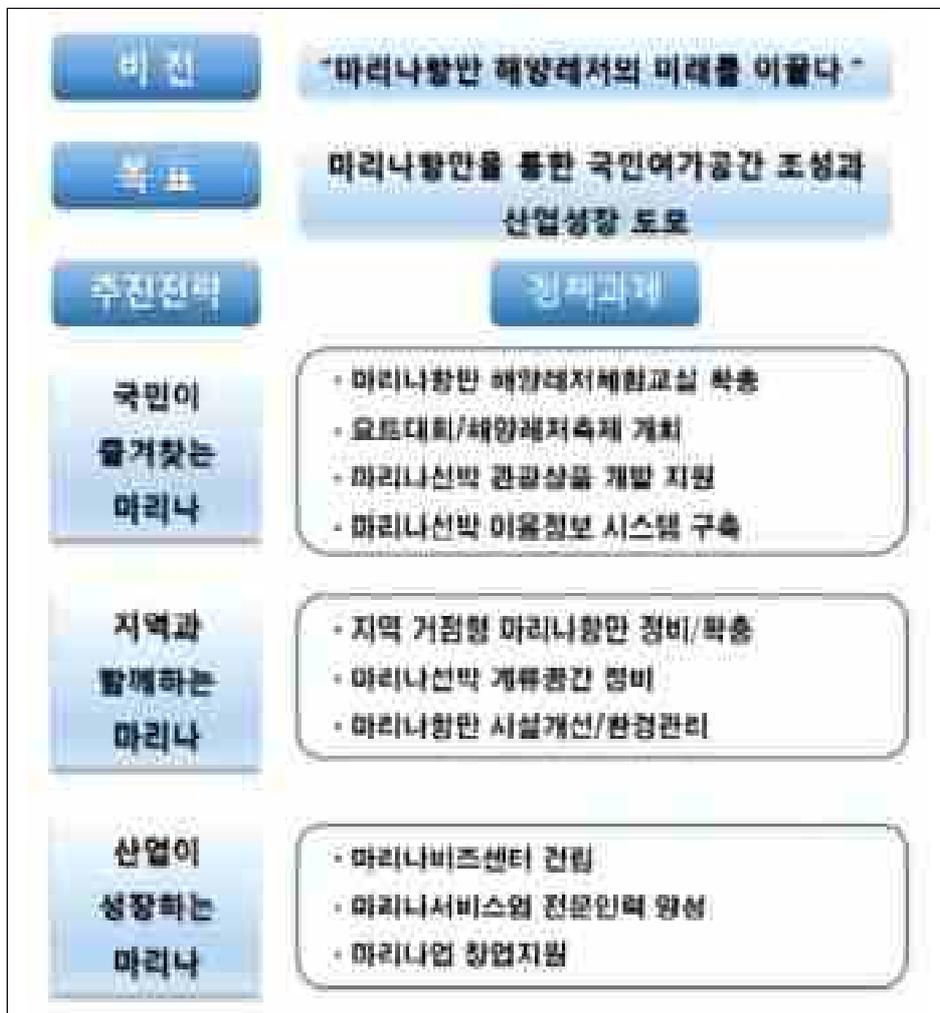
□ “다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해양생태계의 혜택”, 3개 목표 · 5대 추진전략 제시

-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은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전, 해양생태계 서비스 혜택 증진,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운영 강화를 3개 목표로 설정함

- 첫 번째 추진전략은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로 해양생태 네트워크 구현,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강화,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 확대를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함
- 두 번째 추진전략은 '해양생물 보호·복원'으로 해양보호생물 보호 복원, 안전한 해양생태계 조성, 기후 변화 대응 해양생물 보호 관리를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함
- 세 번째 추진전략은 '해양생태계 서비스 혜택증진'으로 생태계기반 해양공간 통합관리 추진, 해양생태계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해양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추진과제로 제시
- 네 번째 추진전략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반 선진화'로 해양생태계 조사 선진화, 해양생태계 평가 강화, 해양생태계 관련 연구개발 강화, 해양생태계 보전인식 증진을 추진과제로 제시
- 다섯 번째 추진전략은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체계화'로 국가 지자체 지역주민 협력 추진체계 확립, 국제 동향 적극 대응, 동북아 해양생태계 협력 확대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자.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2020-2029)

[그림 2-14]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 해양수산부(2020),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

□ 「해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근거,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2009년 제정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0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으로 국내 연안 및 내륙의 마리나항만 조성 및 조성예정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마리나항만의 발전 도모를 위한 계획을 제시함
- 현재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 수립·시행 중이며 ‘마리나항만 해양레저의 미래를 이끌다’라는 비전으로 마리나항만을 통한 국민여가공간 조성 및 산업 성장 도모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과제가 추진 중임

□ “마리나항만 해양레저의 미래를 이끌다”, 3대 추진전략 · 10대 정책과제 제시

- 첫 번째 추진전략은 ‘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국민 여가공간 확충과 해양레저 대중화 도모’로 마리나항만별 해양레저체험교실 확충, 요트대회·해양레저축제 개최, 마리나선박관광상품 개발지원, 마리나선박 이용정보 시스템 구축을 정책과제로 설정
- 두 번째 추진전략은 ‘지역과 함께하는 마리나: 마리나항만을 통한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성장 유도’로 지역 거점형 마리나항만 정비/확충, 마리나선박 계류공간 정비, 마리나항만 시설개선/환경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정책과제로 설정
- 세 번째 추진전략은 ‘산업이 성장하는 마리나: 마리나항만 기반 해양레저와 서비스산업 발전 도모’로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마리나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 마리나 창업지원을 정책과제로 설정

차. 제4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2020-2024)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근거, 범부처 계획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계획임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시책에 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립하는 범부처계획임
- 현재 제4차 기본계획이 수립·추진 중이며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을 목표로 4대 전략 16대 추진과제를 설정함

□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4대전략·16대 추진과제

- 첫 번째 추진전략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으로 농어촌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농어업인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를 추진과제로 설정함
- 두 번째 추진전략은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으로 농어촌 통합 돌봄 인프라 조성, 농어촌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개발 및 확산을 추진과제로 설정함
- 세 번째 추진전략은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육성’으로 농어촌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농어촌 지역특성에 맞는 보육 서비스 제공을 추진과제로 설정함

- 네 번째 추진전략은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로 농어업인·농어촌 주민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강화, 농어업인 작업 안전 보장, 노령 및 여성농어업인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과제로 설정함

[그림 2-15]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비전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②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 	
전략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②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③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④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②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③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④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②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③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④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② 농어촌 관광 활성화 ③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④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추진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서비스 기준 개편, 사전협의 제도 도입 및 농어촌 영향평가 지침 제정을 통한 삶의 질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별부처 정책 조정 ○ 농촌협약 도입을 통한 지역 주도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제도화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3) 국토교통부 주요 계획

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 「헌법」·「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국가 장기적 국토정책방향 제시

-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는 근본적인 국토계획임
- 현재 제5차 국토기본계획(2020년~2040년)이 수립·시행 중이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계획의 비전으로 ①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 ②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③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를 3개 기본목표로 설정함
- 국토 공간 형성 기본방향은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국토공간 형성, 국토 관리·활용 시대로의 전환, 인구감소·저성장과 기술혁신 등 여건 변화의 탄력대응으로 설정하고 다양성·연결성을 기본 이념으로 혁신적 지역발전·자율적 지역발전·협력적 지역발전을 공간 형성의 주요 전략으로 설정함

[그림 2-16] 제5차 국토종합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3대 목표 및 6대 추진전략 제시

- 제5차 국토기본계획은 ①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②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③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④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⑤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⑥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함
- 첫 번째 추진전략은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으로 지역 간 연대·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구축,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균형발전 추진을 추진과제로 설정함
- 두 번째 추진전략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 지역산업생태계 회복력 제고, 매력 있는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설정함
- 세 번째 추진전략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은 인구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공간 조성,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와 주거공간의 선진화,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국토대응체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설정함
- 네 번째 추진전략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매력 있는 국토·도시 경관 창출을 추진과제로 설정함
- 다섯 번째 추진전략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는 네트워크형 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지능형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추진과제로 설정함
- 여섯 번째 추진전략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은 한반도 신경계구상 이행과 경제 협력, 한반도-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육성과 글로벌 위상 제고를 추진과제로 설정함

□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발전 목표·방향 수립, 인천항 등 주요항만의 물류서비스 혁신 목표

- 국토기본계획은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발전 목표와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광역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간 자율적인 연대·협력을 촉진 및 지원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2-17]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시도별 발전 비전 및 주요 항만 특화전략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

-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로 설정, 활기찬 공동체 도시·글로벌 일자리 도시·쾌적한 관광도시·녹색해양도시를 기본목표로 설정함
- 글로벌 플랫폼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발전방향으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관리 및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공항, 항만 등의 입지적 강점을 충분히 살린 지역산업 진흥, 국제 해양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개선, 국제 수준의 교통·물류체계 구축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 대도시권으로서 수도권 경쟁력 제고·상생발전 도모로 제시함
- 특히 ‘공항·항만 등의 입지적 강점을 살린 지역산업 진흥’ 발전 방향은 인천항 첨단선박 수리시설 인프라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개선’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의 해양관광문화단지 조성 및 크루즈 산업 육성, 섬 만들기 사업을

위한 문화·관광 자원 발굴과 섬 유형별 특화테마관광사업 추진 및 강화 도서지역의 다양한 자원보존·관리를 통한 문화·관광거점 조성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여 인천을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 섬을 활용하여 문화·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국토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음

-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항만의 물류서비스 혁신을 위해 스마트 항만 도입을 통한 물류서비스 혁신·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 대중국 수도권 물류거점 항만인 인천신항·인천북항을 포함한 서남권·환동해권을 글로벌 진출을 위한 특화된 거점항만으로의 집중 육성하여 신남방·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로의 발전 과제를 설정함

나.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2021-2030)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10년 단위 중장기 발전계획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근거로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인천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함께 수립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임
- 국토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의 중간단계에 있는 지역계획의 한 유형으로, 「해안 내륙발전법」상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승인(법 제12조)의 준거이자 다양한 사업의 발굴과 구상, 투자 촉진방안 등을 제시하는 사업계획임

[그림 2-18]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의 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2021),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 모두를 위한 일터, 함께 누리는 삶터, 서해안권”, 3대 목표 및 5대 추진전략 제시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모두를 위한 일터, 함께 누리는 삶터, 서해안권”을 비전으로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구축, 남북중을 잇는 서해발전축 형성, 글로벌·광역이슈 대응 공동협력기반 마련을 3대 목표로 설정함
- 5가지 추진전략으로는 국가전략산업 집적 및 클러스터 조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 국제적 생태·문화 관광거점 조성 및 벨트화, 초국경·광역 공동발전 협력체계 구축, 지역·발전거점 간 연계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서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음
- 서해안권 공간 발전구상으로 3대 발전권역, 2대 육성축을 설정, 3대 발전권역은 글로벌 경제·평화권역, 융복합 신산업 발전권역, 그린·농생명 육성권역으로 구성하고 2대 육성축으로 국가신산업육성축, 해양생태문화·관광축을 설정함

[그림 2-19]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의 서해안권 공간 발전구상



자료: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2021),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 인천은 글로벌 경제·평화권역으로 인천의 바이오산업 등을 신산업육성축으로 설정, 인천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서해안권을 생태·문화·관광축으로의 발전을 주요계획으로 설정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인천·경기북부를 글로벌 경제·평화권역의 핵심지역으로 설정하여 글로벌 경제·평화권역의 지리적 이점과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 국제적교역·교류거점이자 대 북·한·중·국의 관문으로 육성하겠다는 발전구상을 제시함
- 국가신산업육성축으로서 인천의 바이오산업 등을 확대·발전시켜 서해안권 국가신산업육성축 형성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인천을 시작으로 해양·연안·섬을 잇는 서해안권을 육성축의 하나로 해양생태·문화·관광축을 형성하겠다는 목표 및 전략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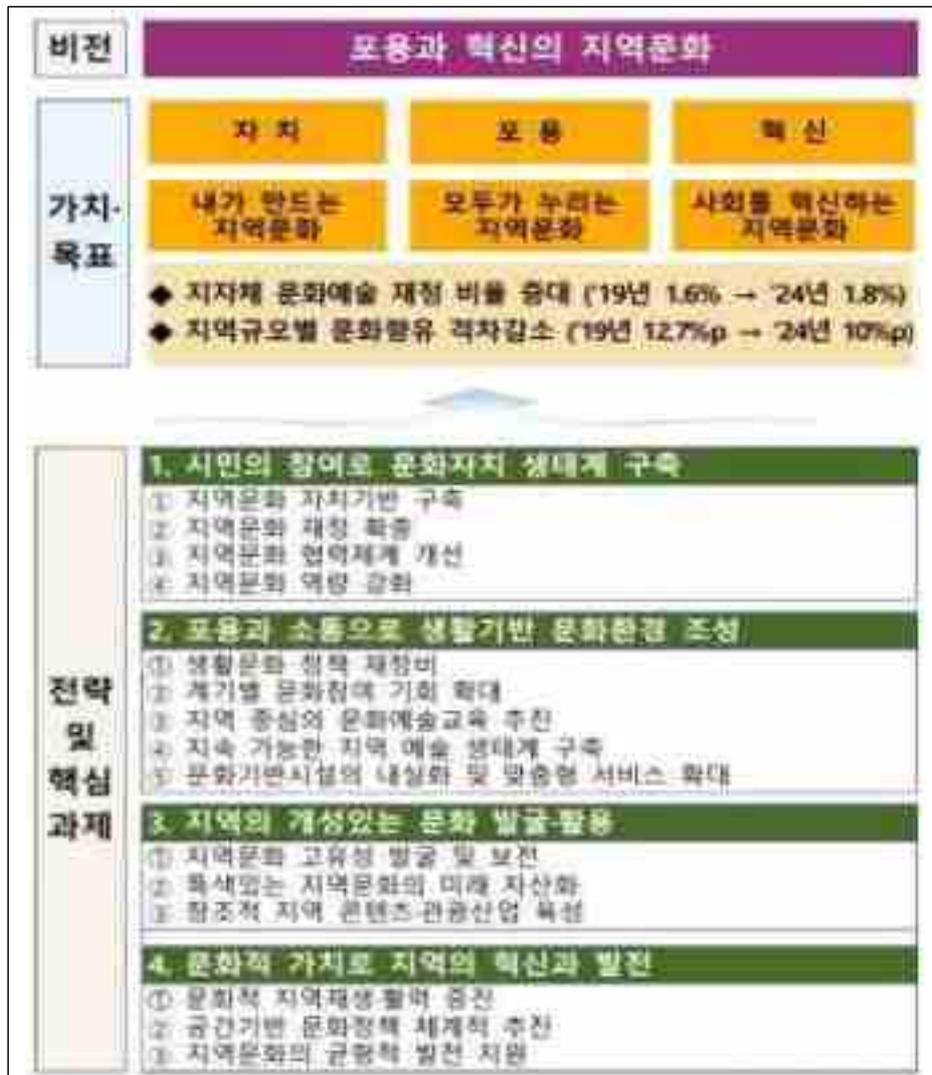
4)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계획

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2024)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5년 단위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목표·비전·과제 제시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 발전,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지역문화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경제·사회인구·인식 변화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5년간(2020-2024)의 지역문화진흥 정책 목표와 비전·정책과제를 제시
-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비전으로 설정,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 및 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이라는 4개의 전략도출함

[그림 2-20]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4개 전략 · 15대 전략과제 제시

- 첫 번째 전략과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은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지역문화 재정 확충·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지역문화역량 강화를 설정, 지역문화 법제도 및 계획 개선,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함
- 두 번째 전략과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은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계기별 문화 참여 기회확대·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지속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설정함
- 세 번째 전략과제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은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전·특색있는 지역 문화의 미래 자산화, 지역문화 콘텐츠 보전·발굴 및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교육 확대, 지역문화의 개발 및 활용지원 등을 세부과제로 설정함
- 네 번째 전략과제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발전’은 문화적 지역재생/활력증진·공간기반 문화정책 체계적 추진·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발전 지원을 세부과제로 설정, 유희공간 등 문화재생, 문화도시 조성 본격화 등을 세부추진과제로 제안함

나.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22-2031)

□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관광 개발 관련 법정계획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10년 마다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관광개발계획임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 상호 협력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사람과 지역 중심의 미래 국가관광개발 비전 제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관광경쟁력 제고, 중장기 관광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관광 발전 견인, 국가 단위 법정관광계획으로서 위상 재정립을 계획의 목적으로 함
- 현재는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이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경계를 넘어 확장된 미래 관광개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6대 추진 전략을 제시함

□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 3대 목표 및 6대 추진전략 제시

- 첫 번째 전략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은 미래유망 기술이 집약된 관광자원 발굴,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자원화, 관광트렌드 주도형 관광개발 추진, 세대별 특화 관광자원 개발, 융복합을 통한 산업 및 종교 관광 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설정함
- 두 번째 전략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관광개발 추진, 보존과 활용이 조화된 생태관광 육성, 유휴자원 재생을 통한 관광자원화, 오버투어리즘 효율적 관리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함
- 세 번째 전략 ‘편리한 관광편의기반 확충’은 ICT 활용 관광교통 체계 구축, 숙박시설 관광명소화, 식음·쇼핑 시설의 명소화, 안전·안심 관광환경 구현, 스마트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설정함
- 네 번째 전략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은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추진 확대, 자립형 지역관광 주체

- 육성, 관광개발과 지역산업간 연계 강화, 지역관광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를 추진과제로 설정함
- 다섯 번째 전략 '입체적 관광연계·협력 강화는 지역관광거점 중심 관광개발 확산, 지역관광 육성사업 추진체계 구축, 남북한 및 다자간 연계협력 관광개발 추진, 관광자원 영역 확장에 따른 범부처 공유관광자원 개발을 추진과제로 설정함
- 여섯 번째 전략 '혁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은 관광지 등 관광개발 관련 제도 개선, 관광개발 위상을 강화하는 법률체계 정비, 관광개발 정책 지원 확대,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광자원 관리, 관광자원의 통합관리를 추진과제로 설정함

[그림 2-21]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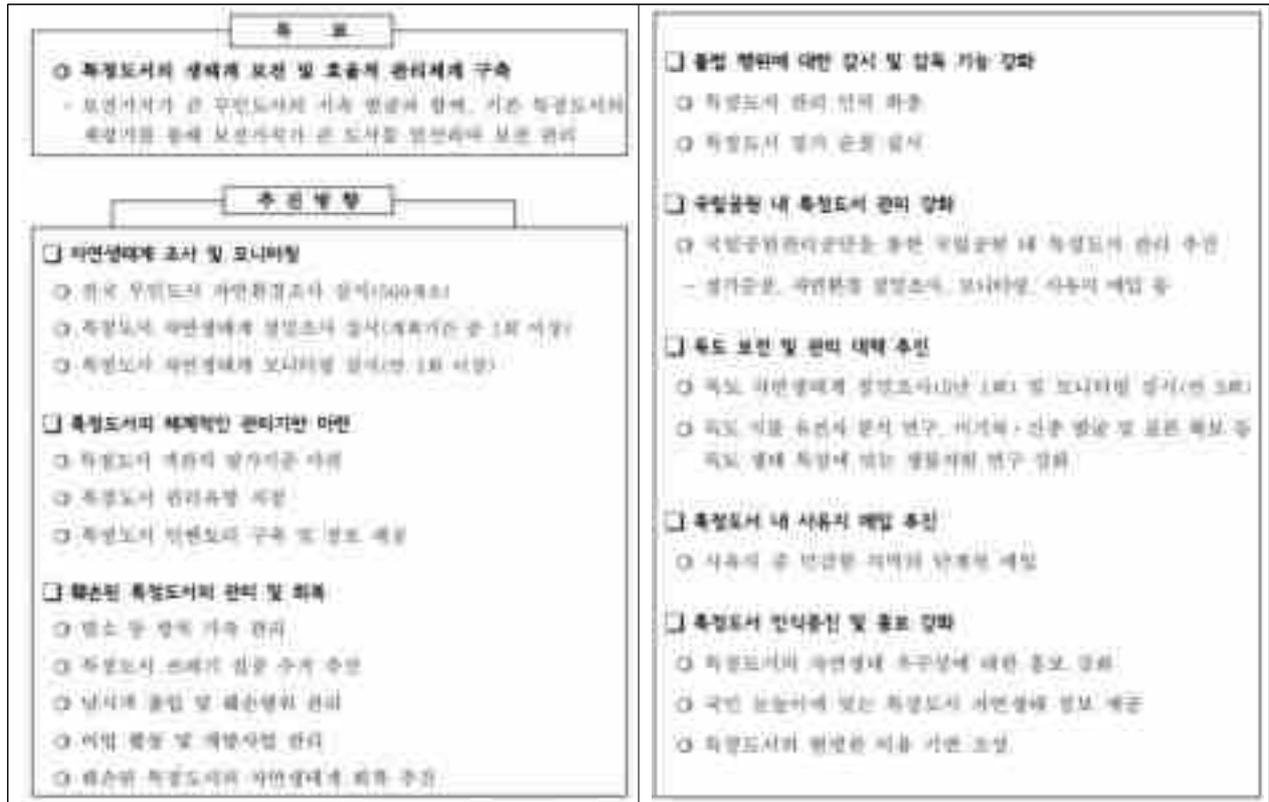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2),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

- **관광권역을 광역연합관광권으로 설정, 인천은 수도권 1권역 구분, 스마트 관광도시 육성계획 수립**
 - 1핵(수도권)에서 대도시권 중심의 다핵(서울, 대전·세종, 대구, 광주, 울산·부산)이 관광객 송출시장의 기반이 되는 배후시장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인접 중소 도시권으로의 관광객 이동수요를 포함할 수 있도록 5대 광역연합관광권을 설정함
 - 1권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를 하나의 광역연합관광권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인접지인 인천·경기·강원 등 지자체와 인근 북한 지자체와의 관광협력을 유도하고 지자체 간 연계협력하는 평화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 인천·경기·강원 등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로 조성함
 - 권역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인천을 포함한 수도·강원·제주권역의 개발목표는 '글로벌 K관광 선도지대로 육성'으로 설정, 글로벌 관광허브, 한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자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국제적 교통허브로 활용, 자연생태자원, 해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시설을 개발하고, 복합리조트,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의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K관광의 관문 역할 수행 전략을 추진함

□ “특정도서의 생태계 보전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8대 추진전략 제시

- 자연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특정도서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 훼손된 특정도서의 관리 및 회복,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기능 강화, 국립공원 내 특정도서 관리 강화, 독도 보전 및 관리대책 추진, 특정도서 내 사유지 매입 추진, 특정도서 인식증진 및 홍보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함

[그림 2-23] 제2차 특정도서기본계획 목표·추진방향



자료: 환경부(2014), 「제2차 특정도서 보전 기본계획(2015~2024)」

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20-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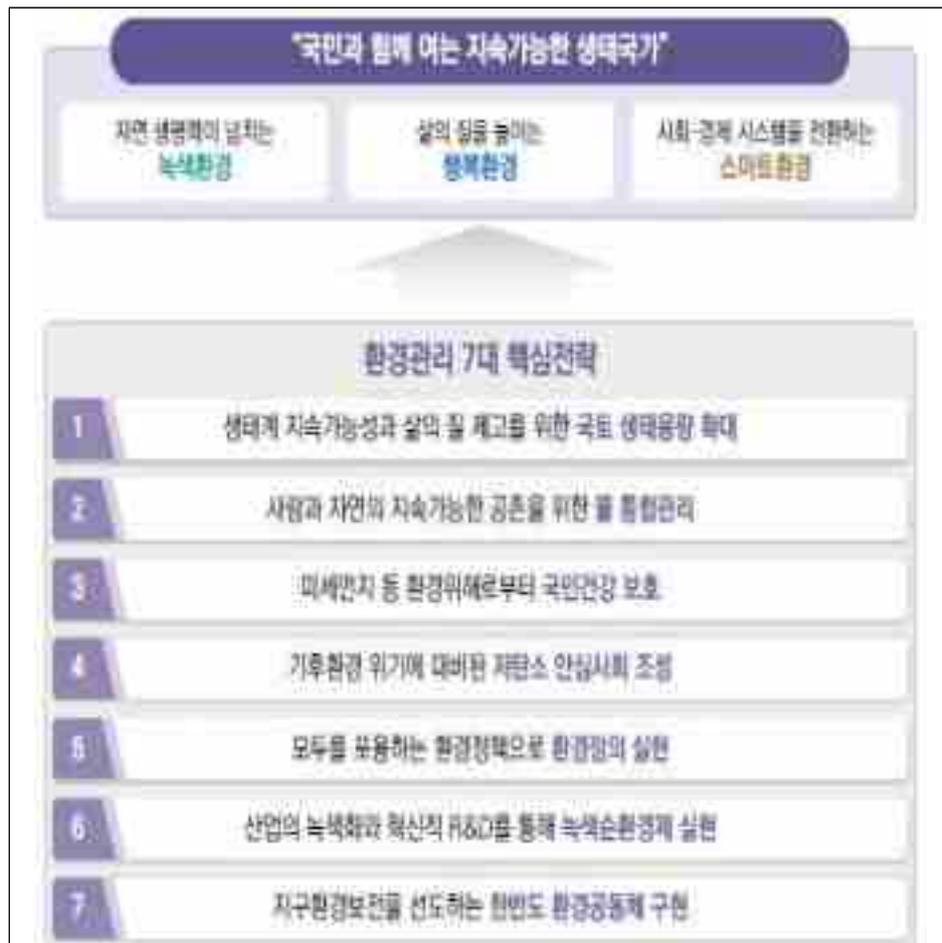
□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근거 환경분야 최상위 중장기 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헌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분야별 환경계획, 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환경계획에 대한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제시함
- 종합계획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및 해양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환경영향권을 고려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등 공간적 영역을 대상으로 환경현황·전망, 각 환경 분야별 대책과 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수립·추진 중이며, 계획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 국가’로 설정,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사회·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 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함

□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3대 목표 · 7대 추진전략 제시

- 첫 번째 목표는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으로 우수한 자연은 잘 보전하고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쇠퇴지역은 재자연화를 통해 국토 생태용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지속 가능한 이용으로 모두가 누리는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환경 구현, 순환과 복원, 생태계서비스 등 인간과 자연의 공정한 공유를 통해 풍요로운 통합 물관리 구현을 목표로 설정함
- 두 번째 목표는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으로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환경위해요인의 획기적 저감과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등을 목표로 설정함
- 세 번째 목표는 ‘사회·경제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 환경’으로, 사회·경제시스템의 녹색전환을 토대로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를 구현하고 산업의 녹색화와 세계적 수준의 환경기술 발전을 이루어 녹색순환경제 정착 등을 목표로 설정함
-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으로는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 생태용량 확대,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물 통합관리,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R&D를 통해 녹색순환경제 실현, 지구환경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으로 설정함

[그림 2-24]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2020~2040)」

3. 관련 사업

[검토 대상 선정 기준]

- ☞ 부처별 2023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검토 후 섬이나 도서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사업 추출
- ☞ 인천광역시 소재 섬과 직접적 연관이 없거나 2023년 일몰 사업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

[표 2-4] 섬 발전 관련 정부 사업

주관 부처	계획명	예산(백만 원)
해수부(23)	해양영토관리 역량강화	3,049
	해양관광 육성	2,187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R&D)	6,396
	어촌활력 기반구축	10,054
	어촌발전기반 조성 지원	640
	귀어귀촌 활성화	5,991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2,275
	어업인 삶의 질 향상	2,864
	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13,385
	어촌어항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	491
	청년 어촌 정착 지원	1,926
	어업현장의 현안 해결 지원사업(R&D)	6,274
	수산공익 직불제	93,328
	해상교통 안전시스템 운영	2,329
	여객터미널 운영	7,247
	친환경 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22,229
	어촌신활력 증진	44,390
	어촌뉴딜300	286,603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12,648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용자)	10,500
수산장비구입 지원(용자)	2,850	
재해등대응 긴급경영 안정자금(용자)	20,000	
피해보전 직불금	1,763	
행안부(6)	한국섬진흥원 지원	5,620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정보화)	1,102
	특수상황지역개발	216,488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3,030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7,484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0,519
국토부(6)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발전지원	106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2,740
	성장촉진지역 개발	222,402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지원	39,587
	도시형교통모델(지역자율)	28,920
	도시형교통모델(제주)	100
환경부(6)	지하수 관리	48,082

주관 부처	계획명	예산(백만 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8,312
	야생동물침단연구사업 (R&D)	3,200
	시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986
	하수도시설 설치(제주)	1,040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지역자율)	37,621
농림부(4)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39,023
	가뭄대비 용수개발	11,800
	농촌형 교통모델(자율)	21,655
	직불제 이행점검	25,054
복지부(5)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16,890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29,600
	노인 건강관리	6,700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24,000
	해양 원격 응급의료 체계 지원	1,200
교육부(1)	영재교육 지원사업 재량, 계속)	2,201
기재부(1)	산림탄소 흡수원 복원	7,214

1)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의 예산편성 주요키워드 : 해양 관광·어촌발전·어업인 지원·용수(에너지)관리·수산발전

- 해수부의 '23년 예산편성 내역의 주요 키워드는 해양관광·어촌발전·어업인지원·에너지관리·수산발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일반회계에 편성된 도서(섬) 관련 예산 중 주요 사업인 '해양 영토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은 "무인도서 해역부 및 관리 유형 변경 무인도서에 대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정보 시스템 운영·유지 보수·DB 구축 등 고도화 추진을 목적으로 3,049백만 원을 편, 무인도서 관리를 지원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된 도서(섬) 관련 주요 사업은 어촌활력 기반구축(10,054백만 원), 어촌발전기반 조성 지원(640백만 원), 귀어귀촌 활성화(5,991백만 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12,275백만 원),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2,864백만 원), 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13,385백만 원) 등이 있음
-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서지역 등의 해양사고 발생 대응을 위한 '해양교통안전시스템 운영'에 2,329백만 원, 도서민·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여객터미널 운영'에 7,247백만 원을 편성함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는 도서지역 등의 친환경에너지·용수관리를 위해 히트펌프·인버터 등 에너지 보급, 지하해수 기능개발적지 조사·개발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사업에 22,229백만 원을 편성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도서(섬) 관련 사업은 도서를 포함한 어촌의 규모·특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어촌생활공간 혁신 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 44,390백만 원을 편성, 낙후된 항포구 인프라 개선·특화자원개발 지원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 도모 등의 사업인 '어촌뉴딜300'에 286,603백만 원을 편성함
- 수산발전기금에는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에 12,648백만 원을 편성, 수산업 운영자 대상 용자를 지원하는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에 10,500백만 원, '수산장비구입 지원'에 2,850백만

원, '재해등 대응 긴급경영 안정자금'에 20,000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산자를 지원하는 '피해보전 직불금'에 1,736백만 원을 편성 및 지원함

[표 2-5] 섬 발전 관련 정부 사업 (해양수산부)

회계	사업명	분야	(섬 발전 관련) 내용	사업 형태	2023년 예산 (백만 원)
일반	해양영토관리 역량강화	교통 및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도서 실태조사 (관리유형 지정 변경 위해 자연환경, 생태계, 등 자료취득,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무인도서 정보 수집) · 무인도서 관리 (관리유형 지정·변경 심의, 관리유형 이의신청 검토 위해 현장조사·자문, 지방청 무인도서 점검·해양쓰레기 관리) 	직접	3,049
	해양관광 육성	교통 및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 대상으로 사업화 및 운영활성화 자금 지원) 	보조	1,687 (지자체 보조 600, 민간 1,0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해양치유자원 조사 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위탁	500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R&D)	교통 및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장비 기술개발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 해양쓰레기 및 해변 모래 분포 미세플라스틱 수거를 위한 장비기술 개발)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처리기술 개발 (해양쓰레기 전처리 포함한 도서 및 어촌 맞춤형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처리시스템기술개발) · 해양플라스틱 수거지원 기술개발 (발생 원인별 이동, 침강, 부유를 고려할 수 있는 전수층 해양쓰레기 이동예측 모델 기반 수거지원 기술개발) 	출연	6,396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	어촌활력 기반구축	농림 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산업융복합지원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기존 어촌사업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어촌활력 증진기반구축) · 어촌관광활성화 (어촌관광 수요증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홍보 등을 지원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업 외 소득증대 및 국민에게 휴식처 제공) · 어촌정책연구 (어촌에 관한 현안·미래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우수한 사례를 연구하여 어촌활력 기반구축에 활용) 	직접, 보조	10,054
	어촌발전기반 조성 지원	농림 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어촌개발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집행관리·정책지원 등 	보조	640
	귀어귀촌 활성화	농림 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어귀촌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다양한 정보제공, 상담, 멘토링, 임시주거시설 등을 지원하여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촌정착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보조	5,991

회계	사업명	분야	(섬 발전 관련) 내용	사업 형태	2023년 예산 (백만 원)
			·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귀어학교 개설, 어촌에서 살아보기, 도시민 기술교육, 우수어촌계 지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농림 수산	· 수산계학교 지원 (수산계고교육성정책 일환, 취업·창업 연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신규인력 육성 및 지역 수산대학 인프라 활용 수사인 교육 등 수산계 고교학생 대상 지원) · 일자리창출 및 기술지원(귀어자, 수산업 입문자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멘토지원 및 기술보급지·수산기술동영상을 제작·보급, 어업인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 등을 지원) · 어업인 역량강화 (수산업경영인, 어촌후계자, 어업인 단체 등 어업인의 역량강화교육 시행)	직접, 보조	12,275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림 수산	· 어업인질환조사,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 어업활동지원, 어촌생활돌봄지원,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마련, 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	직접, 보조	2,864
	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농림 수산	· 어업인의 생활안정 복지기반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보조	13,385
	어촌어항관리 시스템 구축 (정보화)	농림 수산	· 어항 통합시스템 구축 (어항 운영관리·안전 재해예방·환경관리·건설관리 업무지원 등 행정효율 및 편의 개선)	보조	491
	청년 어촌 정착 지원	농림 수산	· 어업 관심 우수청년인력에 어업창업·어촌 정착자금 지원	보조	1,926
	어업현장의 현안 해결 지원사업(R&D)	농림 수산	· 연근해어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개발, 양식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개발, 내수면어업 혼획방지 및 자동화 기술개발	출연	6,274
	수산공익 직불제	농림 수산	· 소규모어가직불 (어업경영 상대적 열악 영세어가·어선원 소득 안정 직불금 지급) · 경양이양 직불 (어업경영 이양, 은퇴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 · 수산자원보호 직불,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	직접, 보조	93,328
교통 시설 특별 회계	해상교통 안전시스템 운영	교통 및 물류	· (AIS 기능개선) 해양사고 발생 시 실시간 선박위치 파악 및 유관기관 연계·제공 등 안정적 AIS정보 수신체계 구축을 위한 회선이중화, 비상전력시설 증설 및 노후장비 교체 수행 · (AIS 유지보수) 기존 AIS시설(기지국·운영국 및 본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등 수행 · (AIS 운영비) AIS신호 수집 전송망 사용료, 기지국 임차료 및 기타 경비 등 운영비 지원 필요	직접	2,329

회계	사업명	분야	(섬 발전 관련) 내용	사업 형태	2023년 예산 (백만 원)
	여객터미널 운영	교통 및 물류	· 국가관리 주요 여객터미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도시민, 관광객 등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직접	7,247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 회계	친환경 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농림 수산	· 히트펌프, 인버터 등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 양식장용수관리 (지하해수 가능개발적지 조사 및 개발)	직접, 보조	22,229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	어촌신활력 증진	농림 수산	· 어촌신활력증진 (어촌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거점 육성,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는 사업)	보조	44,390
	어촌뉴딜300	농림 수산	· (어촌뉴딜을 통한 혁신어촌 조성) 지자체 대상으로 낙후된 항·포구 인프라를 개선 및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어촌의 재생 및 관광활성화 등 도모 ·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사업종료 이후에도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전문가자문단 등 지원체계 구성·운영 등 · (어촌활력증진지원) 어촌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관계인구 확대 및 연안지자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보조	286,603
수산 발전 기금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환경	· 해양보호생물 및 서식지 보전·관리,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해양생물 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 제고	직접, 보조	12,648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용자)	농림 수산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	용자	10,500
	수산장비구입 지원(용자)	농림 수산	· 어업인 등에게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비용 지원을 통한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용자	2,850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	농림 수산	·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적조, 흉어, 수산물 가격의 급락 및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용자	20,000
	피해보전 직불금	농림 수산	· (피해보전직불금)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보조	1,763

2) 행정안전부

□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도서지역을 ‘특수상황지역’ 으로 인식·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다수

- 도서지역에 대한 행안부의 예산계정 중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은 ‘한국섬진흥원 지원’ 및 ‘정보화마을 조성·활성화’로 출연금으로 2020년 「섬 발전 촉진법」을 근거로 설립된 섬 발전 진흥원 운영지원과 농·산·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사업에 예산을 투입
- 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못한 도서지역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도서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지역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지역 부존자원·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여 사업인 ‘특수상황지역개발’에 ’23년 예산 216,488백만 원을 책정하고,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지원을 위해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에 예산을 투입
- 「섬발전촉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열악한 정주환경 등으로 인구감소 위기의 섬 지역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인구 정주를 유도하고 섬의 가치 홍보 등 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섬의 날 행사·섬마을LPG 구축·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에 10,519백만 원의 예산 투입

[표 2-6] 섬 발전 관련 정부 사업 (행정안전부)

회계	사업명	분야	(섬 발전 관련) 내용	사업 형태	2023년 예산 (백만 원)
일반	한국섬진흥원 지원	일반·지방행정	· 한국섬진흥원 운영 및 연구, 진흥사업 등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 지원(출연금)	출연	5,620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정보화)	일반·지방행정	·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농·산·어촌 지역의 정보이용환경 조성 및 주민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전자상거래 지원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직접	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특수상황지역개발	일반·지방행정	· 남북분단 및 도서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 지역의 부존자원, 관광자원 등을 발굴하고 특화된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보조	216,488
	특수상황지역개발 (제주)			보조	3,030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일반·지방행정	· 남북분단 및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에 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도모	보조	7,484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일반공공행정	· (섬의 날 행사) 법정 기념일인 ‘섬의 날’ 기념하기 위한 행사개최 ·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해 섬마을에 LPG 시설 구축 · (작은 섬 공도방지)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18~’27)」 지원대상(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된 소규모 섬 대상 지원사업 추진	보조	10,519

3) 국토교통부

□ 해안권 발전지원 및 낙후지역·사각지대 대상 지원예산 다수

- 국토부의 도서(섬) 관련 2023년 예산은 해안권·내륙권발전지원(106백만 원) 및 제주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을 통해 도내 물류체계 개선 지원(2,740백만 원) 에 일반회계 예산을 책정함
- 도서(섬)가 포함될 수 있는 예산지원 항목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성장촉진 사업인 ‘성장촉진지역개발’(22,402백만 원),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인 ‘도시형교통모델’(28,920백만 원)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국토부의 도서(섬)과 관련 책정예산도 성장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사각지대에 대한 생활수준 개선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함

[표 2-7] 섬 발전 관련 정부 사업 (국토교통부)

회계	사업명	분야	(섬 발전 관련) 내용	사업 형태	2023년 예산 (백만 원)
일반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발전 지원	국토 및 지역개발	·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직접	106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교통 및 물류	· (제주 물류센터) 제주지역 중소 제조기업 등의 물류비 과다부담 해소를 위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소량·다빈도 물동량의 집적화 및 물류체계 개선 기대	보조	2,74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성장촉진지역 개발	국토 및 지역개발	· 인구·소득·재정자립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낙후도 하위 70개 성장촉진지역의 시·군 생활환경 개선, 개발수준이 저조한 낙후지역에 대해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	보조	222,402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지원	국토 및 지역개발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켜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 남해대교관광자원화, 남도2대교 건설,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노을/생태갯벌 플랫폼 조성, 서남해안 명품경관 조성,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갯벌치유센터 조성 등	보조	39,587
	도시형교통모델 (지역자율)	교통 및 물류	· (공공형버스)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행횟수 및 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방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콜버스 등 수요 응답형 버스 교통수단 등 도입 지원	보조	28,920
	도시형교통모델 (제주)	교통 및 물류	· (공공형택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운영 중인 공공형 택시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사각·취약지대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보조	100

4) 환경부

□ 물 부족 도서·해안 지역 대상 지하수 관리, 생태·경관보전·야생동물연구 상하수도 설치 등 지원

- '지하수 관리' 사업은 상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도서·해안지역에 안정적인 용수의 확보를 위해 지하수 자원확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직접사업이며, 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가 역무 대행으로 사업을 집행함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관리' 사업은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방환경청과 환경조사를 통해 자연생태·경관 우수지역인 도서를 지정·보전·관리 및 훼손지 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보조로 50~100%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짐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은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 확보·수도설치 지원으로 70%의 지자체보조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을 진행함

[표 2-8] 섬 발전 관련 정부 사업 (환경부)

회계	사업명	분야	(섬 발전 관련) 내용	사업 형태	2023년 예산 (백만 원)
일반	지하수 관리	국토 및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를 통해 상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도서·해안지역 안정적인 용수확보, 물 복지 실현 · (먹는샘물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먹는샘물 수질실태를 파악하고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 확대로 샘물에 대한 국민불안감 해소 및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좋은물 공급을 위한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 추진 	직접	48,082
환경 개선 특별회계	생태·경관보전 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지역(자연 생태·경관 우수지역) 지정관리, 생태우수지역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보호지역 훼손지복원 · (독도영토관리대책) 특정도서 1호인 독도에 대한 생태계 모니터링 및 자생식물 유전자 분석사업 등을 통해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 및 생태주권 확립에 기여 	직접, 보조	8,312
	야생동물첨단 연구사업 (R&D)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새 이동경로 추진연구,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철새 도래실태 연구, 야생동물 실태조사 등 도요새·도서지역 대상 주요 통과철새의 도래 실태 조사 	직접	3,200
	시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 ·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의해 건립된 국가철새연구센터(웅진군 소청도 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 도서지역 철새 상시 모니터링·철새 이동조사 체계를 구축, 철새 현장조사 강화를 통한 철새 보전과 서식지 관리를 지원 	직접	986
	하수도시설 설치(제주)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마을하수도 정비 등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의욕 고취, 이농현상 등 사회문제 해결 	보조	1,040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지역자율)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섬)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 확보 및 수도시설 설치·개량을 지원 	보조	37,621

5) 농림축산식품부

□ 도서지역의 지리적 여건 고려, 운송·용수개발·여객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 편성·지원

-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사업 하위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은 지자체·민간보조로 지자체·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가 사업시행주체로 도서지역 농산물의 해상운송 등 추가부담에 따른 출하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물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가뭄대비용수개발’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도서지역 포함)”에 대해 매년 농어촌용수 공급현황 실태조사 실시의무를 부과, 농어촌용수 공급부족현황 실태조사를 시행,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예산을 편성함(’23년 11,800백만 원)
-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서민에 대해 여객운송사업의 운임·요금 전부·일부 지원” 근거를 기반으로 지자체 보조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에 ’23년 예산 21,655을 편성함
- ‘직불제 이행점검’ 사업의 내역사업인 ‘드론 및 태블릿을 이용한 현장 조사’는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조사가 어려운 격오지, 섬 등에 위치한 농지를 점검하기 위해 태블릿PC 등 최신식 현장 장비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25,054백만 원의 예산 중 내역사업 예산은 909백만 원임

[표 2-9] 섬 발전 관련 정부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회계	사업명	분야	(섬 발전 관련) 내용	사업 형태	2023년 예산 (백만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농림수산	· 공동선별비 지원, 물류기기공동지원이용지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지원 (도서지역 농산물의 해상운송 등 추가 부담에 따른 출하 여건 개선을 위해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	보조	39,023
	가뭄대비용수개발	농림수산	· 국지적 강우부족 등 가뭄피해(발생) 우려지역에 관정 개발, 둠벙 개발, 하상굴착, 양수장비 지원 등을 통해 가뭄으로 인한 농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도모	보조	11,8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촌형 교통모델 (자율)	농림수산	· 교통취약 농촌 지역에 마을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보조	21,655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직불제 이행점검	농림수산	· (드론 및 태블릿PC를 이용한 현장조사) 현장조사가 어려운 벽고지, 섬 등에 위치한 농지에 대하여 드론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현장조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태블릿 PC에 수록,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장비 구입, 운용비 등을 지원	직접, 보조	25,054

6) 보건복지부

□ 의료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인 도서지역 대상 의료인프라·체계 지원예산 편성

-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의 내역사업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의료 접근성 및 건강권 제고”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 거동불편자·고령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환자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3년 16,890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함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지역보건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되며, '23년 기준 29,600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
- ‘노인건강관리’의 내역사업인 ‘전립선 질환 예방관리’는 “의료 취약 지역(도서 벽지) 및 도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전립선 등 노인성 질환 조기 검진 및 진료 상담 지원,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전립선 질환의 예방 관리를 추진”을 목적으로 민간단체인 한국전립선 관리협회에서 전립선 예방 교육·홍보사업을 진행, 100% 민간경상보조로 추진됨
-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의 내역사업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 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여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지원, 70%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함
- ‘해양 원격 응급 의료체계 지원’은 육상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해상이용자 및 섬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에 해양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을 사용,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해상 및 도서 등 응급환자 발생 시 해양경찰 함정·항공기(구급 장비)에 설치된 해양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을 이용, 육상의 의료기관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양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 및 구급장비 유지·관리 지원, '23년 1,200백만 원 편성

[표 2-10] 섬 발전 관련 정부 사업 (보건복지부)

회계	사업명	분야	(섬 발전 관련) 내용	사업 형태	2023년 예산 (백만 원)
일반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보건 의료	·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의료접근성 제고 및 건강권 보장	보조	16,890
농어촌 구조개선포특별 회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보건 의료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접근성 제고	보조	29,600
국민건강증진 기금	노인 건강관리	노인	·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노인건강수준 및 삶의 질 제고	보조	6,700

회계	사업명	분야	(섬 발전 관련) 내용	사업 형태	2023년 예산 (백만 원)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보건 의료	· 외상환자, 심장응급질환, 뇌 응급질환 등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전문의가 탑승, 5분 이내 출동 가능한 응급환자 전용헬기 도입·운용 · 취약지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여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	직접, 보조	24,000
	해양 원격 응급의료 체계 지원	보건 의료	· 해양·도서지역의 응급환자 발생시 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원격의료 장비설치 및 이송체계 지원	직접	1,200

7) 교육부

□ 도서·산간 지역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에 예산편성

- 교육부의 '영재교육 지원사업'은 내역사업에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을 포함,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은 “교육 급여 수급권자, 도서·벽지 거주자, 특수교육 대상자,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소외계층으로 영재교육을 지원, 지속사업으로 2021년 516명에서 2022년 600명 규모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표 2-11] 섬 발전 관련 정부 사업 (교육부)

회계	사업명	분야	(섬 발전 관련) 내용	사업 형태	2023년 예산 (백만 원)
일반	영재교육 지원사업 (재량, 계속)	학교교육 과정운영	· (국가영재교육연구원 운영 지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을 지정하여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영재교육 정책 지원 등 관련 업무 수행 지원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잠재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직접, 출연	2,201

8) 기획재정부

□ 섬 지역 산림복원 계획기반 섬 숲 경관복원에 예산편성

- ‘산림탄소흡수원 복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섬 숲 경관 복원’사업 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근거, 산림복원 기본 계획(2020~2029)이 수립되었고, 현재 ‘섬 지역 산림복원 계획(2021~2029)’이 수립되어 진행, 85ha 섬 숲 경관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0%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청-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보조금이 배분, '23년 7,214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됨

[표 2-12] 섬 발전 관련 정부 사업 (기획재정부)

회계	사업명	분야	(섬 발전 관련) 내용	사업 형태	2023년 예산 (백만 원)
기후 대응 기금	산림탄소 흡수원 복원	농림 수산	· (섬숲 경관복원) 기후변화 등으로 훼손된 섬숲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회복 및 탄소흡수원 확보 ·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산림훼손지의 산림복원사업 준공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 복원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직접, 보조	7,214

9) 기타

□ 도서(섬) 자연생태 보전 및 기상관측·도서민 안전관리에 산림청·기상청·해양경찰청 예산 편성

- 산림청은 국토산림공간 정보현실화·효율관리를 위해 산림청 도서지역 임상도 제작, 산림분포 현황 파악,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위한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 사업에 7,640백만 원 편성, 도서해지역 등 산림생태복원 및 산림재난대응을 위한 ‘산림복원’사업에 30,980백만 원, 도서지역 산림자원 정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산림과학연구’에 44,628백만 원을 편성함
- 기상청은 연안·도서해지역 해양기상관측망 구축 등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에 13,843백만 원 편성, 기상재해 대응 및 도서·벽지 학생 대상 기상현상 체험 등 지식보급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기상지식 보급 및 사회 확산’ 사업에 881백만 원을 편성함
- 해양경찰청은 해수면·연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의 발생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구급대 편성·운영을 포함한 ‘연안구조장비도입’ 사업에 11,344백만 원을 편성, 해양사고 대응 및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양안전시스템구축관리’ 사업에 2,732백만 원 편성, 연안해역사고 예방 및 신속 구조 기술 개발을 위한 ‘골든타임사수를 위한 구조기술 개발’에 6,759백만 원을 편성함

[표 2-13] 섬 발전 관련 정부 사업 (산림청·기상청·해양경찰청)

구분	회계	사업명	분야	(섬 발전 관련) 내용	사업 형태	2023년 예산 (백만 원)
산림청	일반	산림공간정보 기반 조성	농림 수산	· 임상도 제작, 산림토양/물지도 제작, 온실가스 DB구축	직접, 보조	7,640
		산림복원	농림 수산	· 산림생태복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백두대간, DMZ일원, 도서해지역 등의	직접, 보조	30,980

구분	회계	사업명	분야	(섬 발전 관련) 내용	사업 형태	2023년 예산 (백만 원)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 · 선박용 드론 스테이션 (도서지역 산림보호·복원 및 산림재난대응을 통한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하여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산림복원 전용 선박에 드론 스테이션 설치)		
		산림과학연구 (R&D)	농림 수산	· 산림자원 조성·이용과 환경이 조화된 산림과학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일류의 산림과학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민행복, 국토건강, 세계녹화를 선도하는 산림과학 지식·기술을 개발·보급(도서지역 산림자원 정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직접	44,628
기상청	일반	해양기상 관측망 확충 및 운영	과학기술	·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교체 유지보수,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기술개발, 해양기상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연안·도서해역 위주의 상세 해양기상관측망 구축 등)	직접	13,843
		기상지식 보급 및 사회 확산	과학기술	· 국가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기상업무 종사자 대상의 방재기상업무 전문 교육 운영, 기상기후과학 지식보급 및 확산을 위한 교사, 학생, 일반인 등 대국민 대상의 기상교육 운영(기상과학에 대한 교육 기회가 적은 도서·벽지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상현상 체험, 실험실습 및 기상재해 대응 등 기상과학 지식 보급을 위한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운영)	직접	881
해양 경찰청	일반	연안구조장비 도입	공공 질서	· (인명구조장비)해양여가 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연안해역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 및 신속한 해상재난 구조능력 제고를 위해 파출소, 출장소, 중특단 및 구조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연안구조정 및 구조정 도입 (해수면과 연속도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의 발생응급 환자 처치·이동을 위한 구급대 편성·운영) · (파출소 화재보호장비) 화재사고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구조대원 안전확보를 위해 파출소 연안구조정, 화재보호장구(ABA, 특수 방화복) 도입	직접	11,344
		해양안전 시스템 구축관리 (정보화)	공공 질서	·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해양구조·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등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관리·개선 추진, 해상 전복·화재 사고 등 중증환자 정보 확인 체계적 재난시스템 구축, IOT 기반 스마트 위치화를 통한 조난자 구조활동 기여	직접	2,732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개발 (R&D)	공공 질서	· 전천후 수색구조 및 생존성 향상 기술개발, 연안해역 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활동 지원기술개발, 해양 수색구조 정보지원 기술 개발	출연	6,759

4. 시사점

□ 법률상 우선지원 및 예외조항을 통해 섬 지역은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 섬과 관련된 법령의 대체적인 법문은 섬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도, 섬 지역의 지리적 접근성으로 야기된 입지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섬 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및 지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에 대한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음
- 섬과 관련된 법령의 경우에도 섬 주민 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우선지원 및 예외적 기준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함
 - 「섬 발전 촉진법」(구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된 1986년 법률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삼면이 바다로서 수많은 도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없어 내륙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섬(도서) 지역에 대한 인식은 우선지원이 필요한 국토로 확인함
 - 「지역문화진흥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공직선거법」 등 분야별 주요 법령에도 ‘취약지역’, ‘소외지역’, ‘특수상황지역’에 도서산간지역을 포함시켜 우선지원 및 예외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법」, 「민방위기본법」 등 공무원 채용 및 국민의 기본적 의무 부과에도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있음에 따라 도서지역에 대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음

□ 섬 지역에 대한 우선지원·예외조항 마련 등 섬 발전의 필요성을 법문으로 확인

- 다수의 법률이 예외규정을 통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지원 및 규제 등의 예외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기반으로 섬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섬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섬의 정주여건이 개선된다면, 섬 지역에 대한 우선지원·예외조항이 관계 생활인구 확보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거라 기대됨

□ 섬 발전과 관련된 키워드로 국가성장동력, 지속성장, 삶의질 향상, 해양자원발굴, 지역특성 고도화, 친환경 등을 확인함

- 섬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섬종합발전계획을 위시한 분야별 기본계획·종합계획은 ‘정주여건개선’,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해양문화자원 발굴’, ‘지역특성’, ‘스마트화(고도화)’, ‘친환경’, ‘균형발전’ 등의 문구를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섬종합발전계획은 ‘품격높은 삶의 터전으로서 섬’, ‘국가성장동력으로서의 섬’, ‘영토수호거점으로서 섬’을 표방,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섬 특수 관광개발을 통한 국가성장 동력마련, 도서민 지속 정주를 통한 해양주권 강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함
 - 국토공간으로서 섬을 인식하고 있는 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인 국토종합계획, 특정도서기본계획, 해양공간 기본계획,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은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섬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을 통한 정주민구 확보·관계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함
 - 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인 해양수산업발전 기본계획,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전국 항만 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관광개발기본계획 등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탈탄소·친환경,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도화(디지털화 자동화), 해양·관광 등의 자원발굴을 주요 추진전략에 포함하고 있으며, 권역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성장기반 확보와 더불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주요 기본계획은 공통적으로 섬 주변의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항만조성과 해양생태관광의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함

- 해양공간기본계획은 해양항만경쟁력 제고 및 명품섬 육성, 특화 관광개발을 지역특화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기본계획은 '편리하고 매력이 넘치는 섬'을 표방하여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정책을 수립함
- 해양관광기본계획은 체험·학습의 즐거운 바다관광·글로벌 바다관광을 주요 전략과제로 설정, 생태관광 활성화·해양레저 스포츠 저변확대·마리나산업 고도화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스마트 항만실현'을 비전으로 거점 항만 인프라개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통한 문화항만 조성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함
-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 항만을 해양레저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설정, 마리나 항만 기반 해양레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함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서해안권을 국제적 생태문화 관광거점 조성 및 벨트화로 성장시키기 위한 추진전략을 통해 서해발전축 중심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정함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보존과 활용이 조화된 생태관광 광역루트발굴을 통해 자연친화적 관광모형을 개발, 지속가능한 관광가치개발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함

□ 항만·해양자원 활용 등 다방면의 정책계획을 통해 섬 발전에 대한 정부 차원 의지 확인

- 주요부처의 섬 관련 기본계획·종합계획을 통해 항만조성 및 해양자원 발굴을 기반으로 교통물류 산업,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의지를 확인함
- 정부 주요 정책계획을 장기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하여 섬 관련 주요 산업인 수산업·항만산업·관광산업 등이 친환경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및 4차 산업을 융합한 고도화 시스템 마련으로 섬 관련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주요부처의 섬 관련 기본계획·종합계획의 내용을 통해 삼면이 바다인 국토의 이점을 활용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항만조성 및 해양자원 발굴을 지속 추진한다면 섬 지역의 항만교통 활성화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음

□ 주요 정책 기본계획은 인천을 국내 주요항만을 보유한 동북아 거점·해양관광의 중심지로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함

- 인천은 지리적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공항 및 국내 주요항만인 인천항·경인항 등을 보유한 우수한 입지적 조건과 서해안에 다수의 도서가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주요 정책계획에서 인천을 교통·물류·해양관광 거점으로 활용계획을 제안하고 있음
- 장기적 국토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은 인천을 대중국 수도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특정, 글로벌 플랫폼 도시로의 도약을 표방함
 - 인천시의 발전방향으로 공항, 항만 등의 입지적 강점을 충분히 살린 지역산업 진흥,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개선, 국제 수준의 교통·물류체계 구축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 대도시권으로서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상생발전 도모 제시함
 - 대중국 수도권 물류거점 항만인 인천신항·인천북항을 포함한 서남권·환동해권을 글로벌 진출을 위한 특화된 거점항만으로의 집중 육성하여 신남방·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로서의 발전 목표를 설정함
- 해양공간 기본계획은 인천이 포함된 서해중부해역을 대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강화남단 갯벌 대상 갯벌국립공원 및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대중국 물류 거점 확보 및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천항 개발 추진, 인천형 명품섬 육성, 서해5도 특화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 등의 정책추진 방향성을 제시함

- 해양수산물발전기본계획은 지속발전을 위한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에 주요 항만인 인천을 언급, 인천항 대형컨테이너 부두 확보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해양수산물발전기본계획은 동아시아 해운항만 산업의 선진화 근거에 국내 주요 항만인 인천 등의 컨테이너 물동량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지속발전을 위한 인천·부산·광양 등 7개소의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항만 가치극대화를 목표로 설정함
 - 또한 해양수산물발전기본계획은 인천항·광양항 등 권역별 항만 특화개발을 통한 성장 기반 확보를 목표로 인천항에 본격적인 대형 컨테이너 부두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한 항로 중심으로 준설 추진계획을 구축함
 -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을 위락형 국제해양관광거점으로 육성 및 국가미항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인천 항만공간 시민친화 워터프론트 조성계획 수립 등 추진계획을 제시함
 -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을 도시위락형 국제 해양관광거점으로 육성을 목표로 국제크루즈선 유치 등을 통한 해양도시관광 활성화, 도시근교 마리아나 확충으로 요트·보트 등 해양레저 확산, 관광·문화·힐링이 어우러진 복합휴양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제시함
 - 인천항을 포함한 국내 주요 항구에 대한 ‘국가미항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노후·유휴 항만공간을 시민친화적 워터프론트로 조성계획을 수립, 인천 영종도의 준설도 투기장을 영종·청라지구, 인천공항 등과 연계한 종합레저·관광단지 조성하기 위한 재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설계함
 - 크루즈 국내 기항 유치기반 마련 계획에는 인천·부산·제주에 10만톤급 이상 크루즈 전용부두 4개 선석 건설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인천항 콜드체인 기능 도입, 인천항 대중국 수도권 관문항 육성, 인천항 공간 재창조를 통한 해양관광 중심지로의 도약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고부가가치 디지털 항만 구축의 일환으로 중국·동남아 시장 타겟 인천항에 콜드체인 기능 도입 및 추진 과제 제시, 특화 항만 구축의 일환으로 신남방·대중국 교역의 거점항으로서 서해권 항만 개발 추진 시 인천항을 대중국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육성·활용하고 물류 기능 확대를 위해 인천항·평택·당진항을 항만인프라·배후단지로의 확충계획을 수립함
 - 인천항의 공간 재창조를 통한 해양관광의 중심지로의 조성전략 제시, 해양영토 안보항만 구축을 위해 인천항 등 주요항만의 관리부두·예부두선부두 정비 및 확충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인천을 글로벌 경제·평화권역으로 신산업육성축으로 설정, 인천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서해안권을 생태·문화·관광축으로 설정함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인천을 글로벌 관광허브·한류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천공항·인천국제여객터미널 등을 국제적 교통허브로 활용, 자연생태자원·해양자원 활용 체험시설개발 및 복합리조트 단지 구성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 전략을 수립함
- 정부 주요부처는 섬지역을 특수상황지역·취약지역·소외지역으로 분류, 섬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도서산간·어촌 생활인프라 지원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및 해양영토관리 등에 일반회계를 편성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특별계획(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을 통해 어촌활력·발전기반마련,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친환경 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어촌신활력증진 등 어촌 및 섬 지역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도서(섬)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인식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도서지역을 포함한 특수상황에 대한 지역개발과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에 예산을 투입, 국토교통부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도서산간 지역이 포함된 성장촉진지역 개발 및 낙후지역에 도시형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활용하고 있음

- 환경부는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활용,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지정관리의 환경보호 등에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서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도서지역의 운송·용수개발·여객 편의 제공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함
- 보건복지부는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일반회계를 편성,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응급의료기금 등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인프라·체계 지원에 예산을 활용하고 있음

□ 특별회계 편성 등 섬 지역 생활인프라 향상을 위한 부처별 사업 추진의지 확인

- 주요 부처는 섬 지역 생활인프라 향상을 위해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섬 지역을 ‘도서산간’, ‘벽지’ 등으로 구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은 아쉬운 지점임

❖ 정부 정책 동향 분석결과 및 시사점

- ☞ 정부의 섬 관련 정책은 크게 **‘주민(사람)’ 관점**의 정책(행복도 증진 및 삶의 질 개선 측면)과 **‘지역(사회)’ 관점의 정책**(경제, 환경 등 지역 활성화 측면)으로 분류되며, 주민 관점의 정책은 행안부, 해수부, 문화부, 복지부, 교육부 등이, 지역 관점의 정책은 해수부, 문화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이 각각 다루고 있음. 현재 **각 부처의 정책(사업)이 병렬식으로 추진되거나, 정책 간 상충 지점이 존재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함
- ☞ 섬 발전 정책은 여러 부처의 소관 영역이 중첩되어 있는 만큼 지역 단위 정책으로 구체화될 때도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매우 중요함. 단,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섬’이라는 대상에 조화롭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매개(혹은 전담) 부서/조직/인력**이 필요한데, 많은 지역에서 ‘섬’과 ‘해양’을 하나로 묶은 부서(**섬해양정책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음. 앞서 방향에서 살펴봤듯 섬 발전의 핵심 키워드가 ‘섬이라는 공간(지역)’과 ‘섬에 거주하는, 혹은 섬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천광역시 기준) **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과의 접점**을 확대할 필요 있음
- ☞ 인천시 섬을 가장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장 밀접하게 다루고 있는 상위계획은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과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으로, 둘 다 행안부 소관 계획임. 이들 계획은 크게 3개 부문을 다루고 있는데, **‘정주여건 개선’, ‘경제 성장’, ‘문화진흥’**이 여기에 해당함. 그러나 3개 영역이 각각 독립적으로 다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진흥’의 개념과 역할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 이처럼 섬 발전을 위해 여러 부처가 다양한 부문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되는 건 ‘지역 살리기’를 목표로 한 **‘생활편의 인프라 구축 및 사회보장 시스템 도입’**임. 단, 현대사회의 도시발전 패러다임이 **‘문화적 재생’, ‘관계기반 지역 활성화’** 등으로 변화했고, 각 부처의 정책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섬이라는 지역 살리기 또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중심의 접근**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Ⅲ. 지역 정책 분석

1. 관련 조례
2. 관련 계획
3. 관련 사업
4. 시사점

1. 관련 조례

[검토 대상 선정 기준]

- ☞ 조사 범위는 인천광역시 본청 자치법규로 제한(군·구 단위의 조례 제외)
-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섬 발전', '해양', '연안', '어촌', '어항' 단어 검색(법률명, 조문)
→ 조직(행정기구, 위원회 등)설치·운영 조례 제외, 정책지원 근거 자치법규 분석

1) 검토 개요

□ 인천시 본청 해양항공국은 조례 28개 소관, 해양항공국 이하 섬해양정책과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가 대표적인 섬 발전 지원 자치법규임

- 인천광역시 본청 1실 3본부 2관 11개국은 총 809개의 자치법규를 소관, 그 중 섬 발전에 직접관여하는 부서는 해양항공국으로 해양환경과·항만연안과·항공과·수산과·섬해양정책과·물류정책과로 구성되며, 28개의 조례를 소관함
- 해양환경과 2개, 항만연안과 3개, 항공과 5개, 수산과 4개, 섬해양정책과 7개, 물류정책과 6개의 자치법규를 소관, 섬해양정책과가 소관하는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가 섬 발전을 조례명에 직접 언급한 대표적인 자치법규로 섬 발전 분야와 직접 연관된 조례는 11개로 확인됨

[표 3-1] 인천광역시 본청 해양항공국 소관 조례

소관부서	법규명	제정 연도	
해양항공국	해양환경과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2022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2022
	항만연안과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2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2
	항공과	인천광역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2022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2020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수산과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2022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인천광역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섬해양정책과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2023

소관부서	법규명	제정 연도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2023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발전 조례	2022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2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2022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2016
물류 정책과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2023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2022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2019
	인천광역시 물류발전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2007

□ 섬 발전, 해양·연안, 어촌·어항 키워드 중심 11개 자치법규 확인

- ‘섬 발전’을 직접 목적으로 규정한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가 대표적인 자치법규이고, 그 외 섬 발전과 관련된 ‘해양·연안’, ‘어촌·어항’ 키워드와 관련된 조례는 9개로 확인됨
- ‘섬 발전’, ‘해양·연안’, ‘어촌·어항’ 키워드와 관련된 조례의 규정을 살펴보고, 인천시 섬 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확인하고자 함

[표 3-2] 섬 발전 관련 인천광역시 조례

구분	조례	제정 연도
섬 발전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2019
해양·연안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발전 조례	2017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9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2021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1
어촌·어항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2006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섬 발전' 관련 조례 :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도서발전 추진 근거 마련 및 도서자원 특성반영 사업추진을 위해 2019년 제정

-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는 인천광역시 도서발전의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도서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에 제정된 인천시 자치법규임
-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는 목적·정의·섬의 날·기본계획 수립·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및 수당 지급·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됨

[표 3-3]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조항 구성

조 문	조 문
제1조 목적	제8조 위원회 운영
제2조 정의	제9조 수당의 지급
제3조 섬의 날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 주민역량 강화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 보조금
제6조 위원회 설치	제13조 포상
제7조 위원회 구성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 2차례 일부개정, 2023년 섬지역 지속가능발전 도모 기반 마련

-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는 2차례 일부개정을 진행, 2021년 11년 일부개정 시, '도서'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의 장려를 위해 조례의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함
- 2023년 6월 2차 조례 개정 시, 섬의 날 행사 지원,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민 역량강화 사업 지원, 섬 발전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근거를 마련함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3. 6. 8.] [인천광역시조례 제7044호, 2023.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섬의 날 행사 지원,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지원, 그리고 섬 발전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섬의 날 행사에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 및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조제2항)

나.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섬 발전 촉진법」에 근거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2항제6호)

다. 섬 발전에 필요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1조)

라. 섬 발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종전 법인·단체를 군·구 및 법인·단체로 확대함.(제12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인프라 마련의 근거로 작용함

-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제5조)의무를 명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섬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림 3-1] 인천광역시 섬발전지원센터 비전·목표·역할

비전

살고 싶은 섬 마을
함께 만드는 인천

1. 섬 발전에 대해 알고자한 인천광역시 연구개발을 위한 통합 지원센터 구축
2. 살고 싶은 섬 개발 조성을 위한 특화된 연구, 조사, 계획
3. 섬 주민과 행복 함께 공유한 2025년 중앙 및 지자체를 위한 정책

역할

- 1. 조사 연구 및 관리
- 2. 사업 지원 및 컨설팅
- 3. 안전 주택 개발 지원
- 4. 네트워킹 및 연계

역할	안전·섬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사업지원 및 역량강화	네트워킹 및 교류·협력
주요 사업	섬 종합조사 및 De-구축 섬 발전 계획 비교분석	특성화사업 모니터링 실시 특성화사업 컨설팅 지원 지역사회 및 주민 역량강화	섬 네트워킹 간담회 개최 섬 지역발전 및 예산예산 지원 안전 섬 소식지 제작·발행 안전 섬 홍보·전시

자료: 인천시 섬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iisland.or.kr/>)

-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에 근거해 섬발전지원센터가 설치됐으며, 섬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섬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보조금(제12조) 규정을 근거로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군·구·법인·단체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본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인천시 섬발전지원센터는 2020년 설립, 인천시가 인천관광공사에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인천관광공사가 운영, 인천관광공사 관광산업실 소속 부서로 조직되어 현재 센터장 포함 4인이 인천시 섬 관련 조사연구·모니터링, 사업지원 및 컨설팅, 관련 주체 역량강화, 네트워킹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인천 섬발전지원센터의 목표는 “섬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의 안정적이고 전문화를 위한 통합 지원센터 구축”, “살고 싶은 섬 마을 조성을 위한 특성화 마을 발굴·재생”, “섬 주민과 함께 섬의 고유한 지역성 공유 및 변화대응 방안 모색”으로 설정하고 있음
- 섬발전지원센터는 섬 종합조사 및 DB 구축, 섬발전 정책 비교분석, 특성화사업 모니터링, 특성화사업 컨설팅 지원, 지역사회 및 주민역량 강화, 섬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섬 지역상생 및 여건개선 지원, 인천 섬 소식지 제작 및 발행, 섬 홍보 전시 추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함

3) ‘해양·연안’ 관련 조례

□ 2017년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발전 조례」 제정

-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발전 조례」는 섬해양정책과 소관 조례로 “「항만법」에 의한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사업 참여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년 제정됨

「항만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0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위치·구역 등)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③ 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의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항만법 시행령 제3조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구분	항명
1. 국가관리무역항 (14개)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북포항
2. 지방관리무역항 (17개)	서울항, 예천항, 보령항, 원도항, 파주항, 삼천포항, 통영항, 갈매항, 목포항, 고령항, 김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항만법 시행령」은 국가관리무역항·지방관리무역항을 정하고 있는데, 본 시행령을 근거로 인천항 및 경인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발전 조례」가 인천광역시의 사업참여·재

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목적·사업참여·재정지원·지원금의 반환·준용·시행규칙으로 총6개 조항으로 구성

-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발전 조례」는 사업참여 규정·재정지원 규정을 통해 인천광역시시장의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 재개발·재배치, 준설토 투기장의 조성·개발 등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에 참여, 인천광역시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도록 협의 및 비용부담, 재정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인천항 및 경인항 구역 발전 조례」

[시행 2022. 12.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920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2조(사업 참여)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 재개발, 항만 재배치, 준설토 투기장의 조성·개발 등 시민생활이나 기업환경과 관련된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에 참여하여 인천광역시의 발전계획에 부합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용역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인천항 및 경인항 권역에 관련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고용 확대,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과 신규화물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2018년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섬해양정책과 소관 조례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8년 제정됨
- 조례 제정 당시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마련을 통해 인천항이 동북아 크루즈시장의 핵심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모항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된 자치법규임
- 본 조례는 목적, 정의, 책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 및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재정지원 대상, 사무위탁 등을 총17개 조항에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는 크루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의 범위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29.] [인천광역시조례 제6863호, 2022. 7. 28., 일부개정]

제14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연구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기구의 유치 및 추진
6. 크루즈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재정지원 대상)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지로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 사업자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지로 운항하는 외국적 크루즈 사업자
 3.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연구소, 단체, 협회, 기업 등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2019년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항만안전과 소관 조례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7호, 2021. 1. 5., 타법개정]

-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2장 제3장으로 구성, 제2장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위원회구성·위원해촉·위원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의견청취·수당·운영세칙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 26개의 조항에 규정하고 있음
- 제3장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위원 해촉, 의견 청취, 회의, 참관인·비밀준수, 위원회 준용 등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2020년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섬해양정책과 소관 조례로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0년 제정됨
- 본 조례는 제1장 ‘총칙’에 목적·정의·시장의 책무 규정을 명시, 제2장 ‘해양산업육성 및 위원회 운영’에 해양산업 육성계획 수립·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지원·해양산업 실태조사·위원회 설치와 제3장 ‘해양산업 지원’에 기업지원·공공기관유치·기업 유치·외국기업유치·해양문화 창달·해양산업 분류·통계관리·정부와의 협력·포상에 대한 내용을 총 18개조로 규정하고 있음
- 해양산업육성 사업의 실시지원 규정을 통해 해양산업 육성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 7. 29.] [인천광역시조례 제6863호, 2022. 7. 28., 일부개정]

- 제5조(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지원)** 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정부나 시가 출연·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그 밖의 해양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2021년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는 섬해양정책과 소관 조례로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에 대한 시민인식개선·인재양성에 기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1년 제정됨

-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는 5년 단위 지역계획 수립, 해양교육센터 설치, 해양교육문화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운영,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해양교육 활성화 지원, 경비보조, 해양교육·해양문화의 확산·국내외 교류 협력 등을 규정, 총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됨
- 본 조례는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및 해양교육 활성화사업과 더불어 해양교육센터의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및 보조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시행 2022. 7. 29.] [인천광역시조례 제6863호, 2022. 7. 28., 일부개정]

제10조(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등) 시장은 시의 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해양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시장은 질 높은 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2021년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항만연안과 소관 자치법규로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1년 제정됨
- 본 조례는 시장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민의견 청취, 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및 위임·위탁,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을 총 12개 조항에 명시하고 있음
- 본 조례는 효율적 해양친수공간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의 일부·전부를 군수·구청장·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 해양친수공간 관리에 관한 위임·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4) ‘어촌·어항’ 관련 조례

□ 2006년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는 수산과 소관 조례로 “「어촌·어항법」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어항시설 사용/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해 법령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에 제정됨
- 본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제3장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 제4장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 제5장 어항관리협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장 보칙으로 총 37개의 조항으로 구성됨
- 본 조례를 근거로 인천광역시장에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천광역시 관할 어항의 관리·운영책무를 부과하고, 전담조직 설치 및 어항시설 안전점검·유지보수·환경보호·구역관리·어항시설 사용 허가·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어촌·어항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②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구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2022년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산과 소관 조례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이주한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며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2년 제정됨
- 본 조례는 귀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 어촌 정착 유도 및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센터 설치·귀어학교 개설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된 자치법규로 시장의 책무, 귀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귀어학교 개설, 보고·감사 등을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음
- 본 조례는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산과 소관 조례로 “수산업과 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3년 제정
- 본 조례는 수산업 발전과 수산자원 조성 및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 및 어촌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어촌의 소득 확보,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됨
- 본 조례는 시장의 책무,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지원대상, 어촌발전 및 복지증진 지원, 경영안정·경쟁력 강화 지원, 수산자원 조성 지원, 수산물 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으로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됨
- 조례의 제정목적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경영안정·복지증진·자원조성·육성 및 소비촉진·복구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955호, 2022. 12. 30., 제정]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2.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양식장, 어선, 어구 등 매입 및 임차 지원
 3. 어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지원
 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 지원
 5.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개최(참가) 지원
 6.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등 필요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 관련 계획

1) 검토 개요

□ 인천광역시 전체 시 차원의 도시발전종합계획 및 분야별 도시발전 계획 검토

- 인천광역시는 국토발전의 정책방향에 맞춰 도시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인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인천 2030 미래이음”과 더불어 섬(도서) 발전을 위한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중임
- 분야별로는 도시·주거 환경분야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2030년 인천 도시재생 전략계획”, 사회보장분야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문화분야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 해양분야 “2030 인천 바다이음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 및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를 수립·시행 중임

[표 3-4] 섬 발전 관련 인천광역시 계획

구분	계획명		계획 기간
관련 종합 계획	2-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20-2040
	2-나	인천 2030 미래이음	2020-2030
	2-다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	2022-2026
분야별 관련 계획	3-가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0-2030
	3-나	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2020-2030
	3-다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2026
	3-라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	2020-2024
	3-마	2030 인천 바다이음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	2020-2030
	3-바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2021-2025

2) 관련 종합계획

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2020~204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거, 4단계로 5년 단위 단계별 계획 수립·시행

- 인천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과 연계된 도시기본계획으로 2040년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5년 단위의 단계별 계획을 수립함

[표 3-5]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2020~2040) 단계별 계획기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획기간	2021~2025년	2026~2030년	2031~2035년	2036~2040년

- 인천도시기본계획은 현재 1단계 계획(2021~2025)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전역을 공간적 대상으로 하는 환경·사회·경제를 포괄하는 공간차원의 구체화 종합계획이자 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전략계획임

-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의 미래변화 예측 및 광역적 장기발전 구상, 시민계획단 운영을 통한 참여형 도시계획, 삶의 질을 고려한 인구·토지이용·공간구조·생활권계획 등 부문별 계획,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원도심 계획, 사회변화에 대응한 생활SOC 공급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다같이 누리는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플랫폼 기반의 국제해양도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3대 목표로 12개 핵심전략을 수립·추진함

□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 3대 목표 · 12대 핵심전략 제시

- 첫 번째 목표 ‘다같이 누리는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성장관리형 토지이용계획, 원도심 활성화 및 거점개발, 스마트 기반 디지털 혁신도시 조성, 모두가 누리는 맞춤형 복지실현 4개지의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두 번째 목표 ‘글로벌 플랫폼 기반의 국제해양도시’는 해양도시 위상 강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 역사·문화벨트 조성의 4가지 핵심전략을 제시함
- 세 번째 목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는 자원순환 환경도시 조성, 행복체감 녹색도시 조성, 친환경 미래 교통기반 구축, 고유의 경관가치 창출을 핵심전략을 제시함

[그림 3-3]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미래상·목표 및 전략



자료: 인천광역시(2022),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 인천도시기본계획은 ‘글로벌 플랫폼 기반의 국제해양도시’를 주요목표로 설정함

-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인천을 국제해양도시를 주요 목표로 설정, 다섯 번째 핵심 전략과제인 ‘해양도시 위상강화’는 해수친수공간조성(워터프론트 조성, 해양명소 공원 확장 등), 생태네트워크 구축(생태하천 복원·하천정비사업을 통한 공간조성) 계획을 제시함
- 핵심전략인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은 융합형 미래첨단산업 공간조성(로봇·바이오·창업벤처 등 미래산업 생태계구축 등), 산업단지 재생·구조고도화(산단재생·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등)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함
-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 전략은 공항과 지역의 융합 플랫폼을 통한 인천공항경제권 조성(공항 중심 항공·관광 융복합 생태계 구축 등) 및 항만별 특화·활성화 세부계획을 제시함

[표 3-6]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국제해양도시’ 목표 주요 핵심전략의 내용

구 분		주요내용
글로벌 플랫폼 기반 국제해양도시	해양도시 위상강화	· 송도·내항 등 관광 및 여가공간 확보를 위한 워터프론트 조성 · 해안 개방을 위한 보전용도 계획, 해양명소 조성을 위한 소래지역 도시공원 확장 · 생태하천복원 및 하천정비사업을 통한 휴식·커뮤니티 공간조성, 아라뱃길 주운 축소·수질개선·친수공간 조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 융합형 미래첨단산업공간조성을 위한 혁신형 미래첨단산업 육성·활성화, 고부가가치산업 활성화(항공·바이오·물류 등) ·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를 위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미래형 첨단 스마트산업 단지 조성 및 산단재생과 도시재생 연계, 부평·주안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	· 공항과 지역 융합플랫폼·인천공항경제권 조성 · 항만별 특화·활성화 (수도권 물류 연계·환황해 첨단물류 관문항 역할 신항, 수도권 원자재 화물처리를 위한 산업거점 북항, 해양관광벨트의 핵심거점 남항)
	역사·문화벨트 조성	· 월미도권~연안부두권~내항재생권~개항장권 연계, 연안부두권 항구도시 구현, 개항장권 근대 역사·문화공간 정비 및 창조, 내항재생권 해양문화·관광여가·복합업무 연계 · 문화휴게공간, 수변업무공간, 체험형공간, 역사자원 테마화

[그림 3-4]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항만별 특화계획·해양역사문화거점 구축 구상도



자료: 인천광역시(2022),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 문화·관광 및 교통·물류 분야에 도서(섬) 발전에 관한 상세 계획을 제시함

- 부분별 계획 중 도서(섬)발전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은 문화·관광, 교통·물류 분야임
- 문화·관광 분야 관광부문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관광매력도시 실현’, ‘워터프론트 조성을 통한 해양 관광도시 실현’, ‘섬·해양 관광의 국제적 해양도시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관광매력도시 실현을 위해 소권별 개발방향을 설정, 원도심소권은 개항창조도시재생·항만 재개발·경인아라뱃길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 강화소권은 역사문화관광·섬생태관광 중점 사업 추진, 웅진해양소권은 섬 관광 활성화, 생태관광개발, 경제자유구역소권은 복합리조트 클러스터·해양레저 관광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음

[표 3-7]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관광매력도시 실현’ 소권별 개발 방향

구 분		개발방향	중점사업
소권별 개발방향	원도심소권	· 원도심권 고유 자원기반 차별적 관광콘텐츠 및 개항창조도시 재생중점사업 연계 도시관광 육성 · 항만 재개발을 통한 해양관광거점조성, 해양명소 육성, 인천항 신국제 여객터미널 조성 연계 크루즈 기항지 관광육성	개항창조 도시재생, 항만 재개발, 경인아라뱃길
	강화소권	· 강화 역사문화관광 거점 조성 및 강화읍 도시재생사업 연계 창조관광육성 · 강화 녹색관광 네트워크 구축, 부속도서 접근성 강화 및 섬 생태 관광육성	역사문화관광, 섬생태관광
	웅진해양소권	· 웅진 섬 지역의 고유 자원 활용 관광콘텐츠 개발 확대 및 섬 자원의 창의적 활용으로 지역활성화 ·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은 서해5도 종합발전사업,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사업과 연계 평화안보·생태관광개발 사업 추진 ·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의 지속적 개선, 숙박/식음 등 섬 관광수용 태세 개선	섬관광 활성화, 생태관광개발
	경제자유 구역소권	· 파라다이스시티, 시저스 코리아 복합리조트 등 영종도 복합리조트 클러스터 추진 · 왕산 마리나, 송도 워터프론트 조성 등과 연계한 마리나 기반 해양 레저 관광 육성	복합리조트 클러스터, 해양레저 관광

[그림 3-5]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소권별 관광개발방향 구상도·인천내항 지역연계방안



자료: 인천광역시(2022),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 워터프론트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경인 아래갯길 친수·문화·관광벨트 조성(물류여객 주운 축소, 하천환경 개선, 무동력성 유람선·환경박물관 조성 등 관광친화조성), 인천 내항활성화 및 관광거점 조성(인천 내항 노후 항만공간을 활용, 공공문화·예술·관광 복합문화 관광공간 조성 등 체험형 해양·역사·문화·관광 거점공간 특화 및 수변공간 연계 친수공간 조성)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음
- 섬·해양 관광의 국제적 해양도시 실현을 위해 해양레저 및 문화생태 관광육성(마리나 활용 복합레저단지 조성·해양레저 네트워크 구축·해양문화 체험 교육시설 연계 등 해양문화 거점 조성), 주제가 있는 섬 관광 육성(도서 네트워크 구축, 창작활동 연계 매력 강화사업 추진, 여객선 준공영제 등 접근성 개선, 섬관광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 크루즈 관광육성(원스톱 스마트 인천 크루즈 관광 플랫폼 개발, 글로벌 크루즈 노선연계·확보 등)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음
- 교통·물류 분야에서도 물류부문은 ‘인천의 성장동력 해양·항만 인프라 확충’, ‘효율적 화물·물류 수송체계 재정비 구축 및 연계교통체계 구상 확대’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인천의 성장동력 해양·항만 인프라확충’을 위해 항만별 특화 및 친환경 항만 구축 강화, 스마트 항만 인프라 구축, 인천 신항 및 신항배후단지 건설, 대북교류의 관문으로 육성을 중점사업으로 설정
 - ‘효율적 화물·물류수송체계 재정비 구축 및 연계교통체계 구상 확대’를 위한 인천권 물류거점시설 물류 인프라 구축, 화물터미널 및 공영차고지·화물주차장·화물휴게소 확충·물류공동화 추진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설정함

[그림 3-6]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항만별 특화계획 위치도·스마트항만 시스템 예시



자료: 인천광역시(2022),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나. 인천 2030 미래이음

□ 인천시 시정운영 최상위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분야별 중장기 정책과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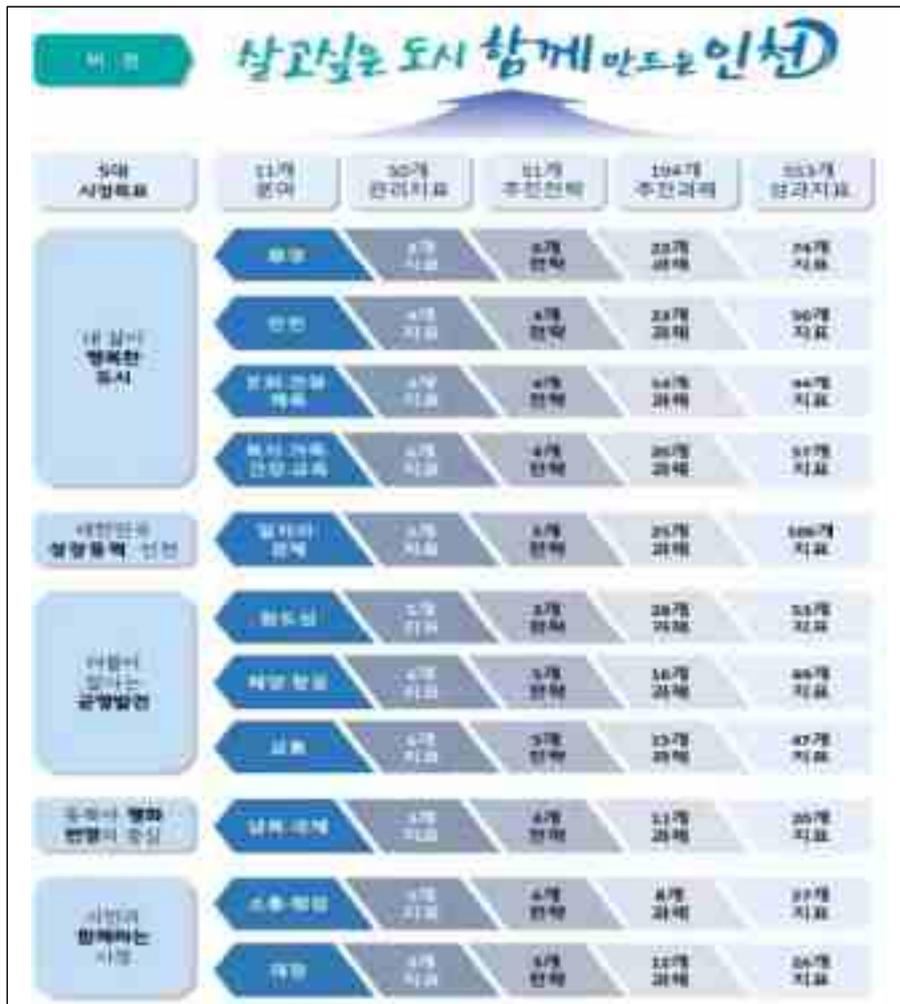
- 인천 2030 미래이음은 인천시 최초로 수립된 분야별 중장기 정책과제로 민선7기 인천시 시정운영의 최상위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11개 분야의 분야별 관리 지표와 연동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궁극적 목표 제시함
- 매년 정책 업데이트 및 관리를 통해 10년 연동형 계획으로 작성, 장기적인 인천시 미래 계획으로 정착을 목표로 분야별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함
- 인천 2030 미래이음의 비전은 ‘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으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5대 시정 목표로 51개 추진전략, 194개 추진과제를 제시함

□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5대 시정목표·51개 추진전략 제시

- 첫 번째 시정목표 ‘내 삶이 행복한 도시’는 환경, 안전, 문화·체육·관광, 복지·가족·건강·교육 분야의 18개 추진전략, 79개 추진과제, 225개 성과지표를 제시함
- 두 번째 시정목표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은 일자리·경제 분야의 5개 추진전략, 25개 추진과제, 106개 성과지표를 제시함
- 세 번째 시정목표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은 원도심, 해양·항공, 교통 분야의 13개 추진전략, 59개 추진과제, 149개 성과지표를 제시함
- 네 번째 시정목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은 남북·국제 분야로 4개 추진전략 및 11개 추진과제, 20개 성과지표를 제시함
- 다섯 번째 시정목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은 소통·행정, 재정 분야의 세부 시정계획으로 11개 추진 전략, 20개 추진과제 및 53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그림 3-7] 인천 2030 미래이음 비전·목표·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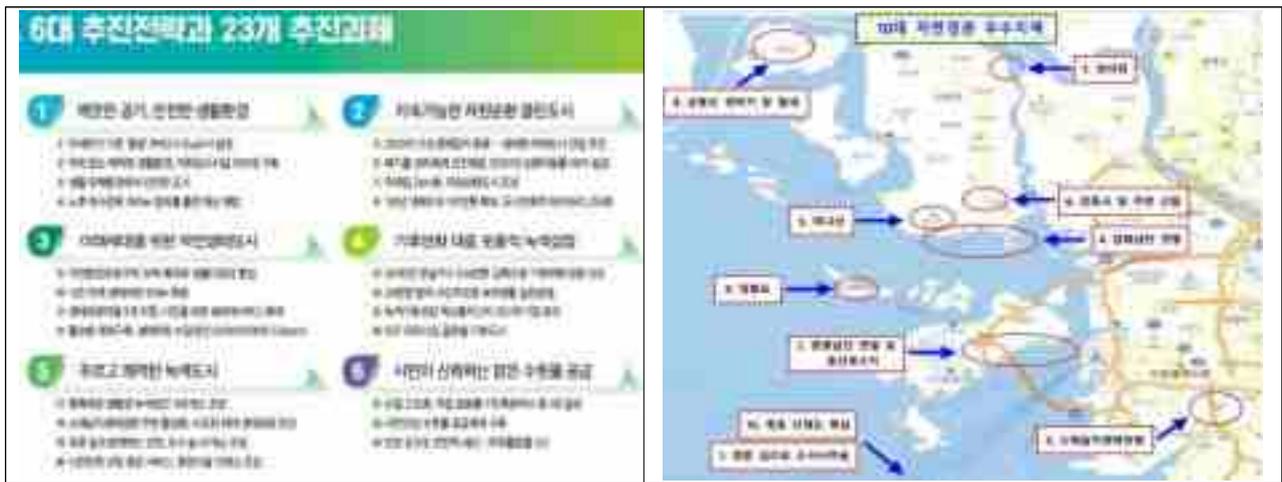


자료: 인천광역시(2019), 「10년후 확실한 미래 인천2030 미래이음」

□ 환경분야 자연생태도시 표방, 도서(섬)의 자연경관 명소화·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환경분야 시정계획은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 도시’를 비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생태도시’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 세부 추진과제에 강화·영종·송도 갯벌, 도서지역, 10대 자연경관 우수지역 등을 자연경관 명소화 추진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제시함
- 생태마을 지정사업은 시정계획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지속사업으로 계획, 2021년부터 2년마다 생태관광마을 지정(총 5개 생태관광마을 지정)을 목표로 함

[그림 3-8] 인천 2030 미래이음 환경분야 추진과제 및 자연경관 우수지역 지정 미래청사진



자료: 인천광역시(2019), 「10년후 확실한 미래 인천2030 미래이음」

□ 문화·관광·체육분야 지역 특화 콘텐츠인 도서(섬) 활용 관광콘텐츠육성 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분야 시정계획은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관광’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 인천시 특화된 섬·해양콘텐츠 활용, 인천형 ‘가고 싶은 섬’ 통합브랜드 개발·패키지형 사업, 마리와 연계한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추진, 강화갯벌 등을 활용한 도심 내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음
- 영종도 일대 최대 복합리조트 클러스터 조성, 영종도 복합리조트-송도-원도심 연계, 지역관광 동반성장 추진을 지속사업으로 설정, 자연생태 경관이 수려한 작약도 대상 작약도 유원지 조성사업 계획 수립 등 인천시 도서(섬)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계획을 추진함

[그림 3-9] 인천 2030 미래이음 문화·관광·체육분야 비전·전략 및 추진사업 권역별 분류



자료: 인천광역시(2019), 「10년후 확실한 미래 인천2030 미래이음」

□ 원도심 분야 매력적인 도서지역 경관창출 목표, 도서 경관자원 활용 지역경쟁력 강화

- 원도심 분야 시행계획은 '매력적인 도서지역 경관 창출'을 주요 전략과제로 설정, 아름다운 섬 경관보전사업, 살고싶은 섬 경관복지사업, 찾고싶은 섬 경관특화사업 추진에 22,73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추진계획을 제시함

[그림 3-10] 인천 2030 미래이음 '매력적인 도서지역 경관 창출' 전략과제 추진계획

세부사업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19~'22년(1070)	'23~'25년(1070)	'26~'30년(1070)
아름다운 섬	1. 동검도 동검로 역사통경가로 조성 사업	394	○		
	2. 신도·신도·무도 해안누리길 해양파 동경가로 정비 사업	1,065			○
	3. 덕적도·소래도 연도교 자연복원 및 펜트어프디자인 사업	674	○		
	4. 미적도 서포리 소나무보호지역 보전 및 조망 특화 사업	2,475			○
	5. 전재도·죽도·선재로 95번길 자연 훼손지 복원 사업	509		○	
	6. 자월도 자월서로·차월동로 동경가로 조성 사업	181		○	
살고 싶은 섬	7. 새터도 파도경관형성 사업	479	○		
	8. 마차도 파도경관형성 사업	1,255			○
	9. 무문도 파도경관형성 사업	1,336		○	
경관 복지 사업	10. 약령도 쓰레기 적치 및 수거시설물 시범 설치 사업	152	○		
	11. 장봉도 쓰레기 적치 및 수거시설물 시범 설치 사업	134		○	
	12. 신도 쓰레기 적치 및 수거시설물 시범 설치 사업	91			○
찾고 싶은 섬	13. 백령도 용거포 선착장 불법 남상경관 특화 사업	315			○
	14. 대무의도 하나계해수욕장 이색해안 풍경 형성 사업	776	○		
	15. 용산해수욕장 이간풍경 및 전수보행로 특화 사업	476	○		
	16. 거침포 해안풍경 조망공간 조성사업	1,000	○		
	17. 거침포 야간경관 돌리 사업	67	○		
	18. 울릉리해수욕장 송림연계 천수공간 조성사업	163		○	
	19. 선내배위해수욕장 경관명소화 사업	2,528		○	
	20. 용유도해변 낙조풍경 조망명소화 사업	3,080		○	
경관 특화 사업	21. 울릉리해수욕장 복원광고등 및 전수보행로 특화사업	1,656			○
	22. 용유도해변 전수보행로 조성사업	787			○
	23. 마시연해변 전수보행로길 구축사업	2,814			○
	24. 감죽도 해안권방유벽 13개소 전용입로 특화 사업	328			○

자료: 인천광역시(2019), 「10년후 확실한 미래 인천2030 미래이음」

□ 해양·항공분야 해양 항만 인프라 주요 성장동력 인식, 해양관광산업 육성 등 계획 수립

- 해양·항공분야 시정계획은 '인천의 성장동력 해양 항만 인프라 구축'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인천 연수구·중구·서구해역에 신항 부두개발 및 인천항 항로 확대를 계획함
-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통한 물류 플랫폼 구축 및 수도권 유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운영을 통한 해양·과학 문화시설 조성을 계획함
- 인천의 대표도서인 백령도에 소형공항인 백령공항 건설을 통해 교통서비스 개선·관광수요 견인 추진, '25년까지 1,208억원(국비)을 투입, 공항 건설 계획을 제시함
- '행복한 어촌, 미래를 여는 수산업 육성' 추진전략은 신성장 동력 어촌·어항 조성, 남북공동어로 확대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바다, 풍요로운 어장조성 및 양식산업 첨단화를 세부 추진전략으로 제시함
- '시민과 함께 품격있는 해양관광산업 육성' 추진전략은 해안철책 철거 및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인천 섬의 재발견, 마리나 크루즈 등 해양레저 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도서지역 해양교통체계 구축을 세부 추진전략으로 인천시 도서(섬)자원을 적극 활용한 세부 정책과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림 3-11] 인천 2030 미래이음 해양·항공분야 정책비전 및 추진사업 권역별 분류



자료: 인천광역시(2019), 「10년후 확실한 미래 인천2030 미래이음」

□ 남북·국제분야 항구간 도시협력·접경지역 남북협력기반 구축·강화 통일경제특구 추진

- 남북·국제 분야 시정계획은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으로 설정, 남북 교류의 전진기지로서 남포항 현대화 사업 및 인천항 연계 남북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북한도시와의 도시협력 추진계획을 세움
- ‘평화 경제협력 기반구축’ 추진전략은 접경지역인 강화·옹진의 고유 생태·문화·역사관광자원 활용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포함, 2030년까지 강화·옹진 접경지역에 약 17,709억 원의 예산을 편성, 16건의 생태·평화관광 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함
- 특히 강화(교동) 통일경제특구 추진을 통해 황해 경제권 시대 거점확보를 목적으로 평화산업단지 조성 계획 추진목표를 설정함

[그림 3-12] 인천 2030 미래이음 남북·국제분야 접경지역 발전·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추진계획

구분	지역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억원)
총계		16건		17,709
생태문화 관광활성화 (5)	옹진	대청 열풍섬 조성	'14-'17	19
	강화	석모도 관광리조트 개발	'18-'23	1,000
	강화	삼산면·서도면 관광단지 조성	'19-'27	10,000
	옹진	접경(섬)지역 경관개선	'20-'24	100
	옹진	NLL 평화생태성 동래길 조성	'21-'25	100
생활·SOC·확충 등 청주여건 개선 (2)	옹진	인천한미(美)항포구 조성	'18-'27	100
	강화	양사면 신이포구 복원	'20-'22	98
균형발전 기반구축 (3)	강화	글로벌 식문화 예술단지 조성	'15-'25	235
	강화	D·P·A(디자인파크) 월드 조성	'16-'22	1,492
	옹진	해양문화 체험장 조성	'16-'22	50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6)	강화	해안순환도로 연결사업	'12-'30	1,400
	옹진	덕적-소마 연도교 건설	'13-'18	285
	강화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	'15-'25	740
	옹진	모도-장봉도간 연도교 건설	'19-'25	1,000
	강화	교동 동서평화 도로 구축	'20-'25	90
강화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구축	'20-'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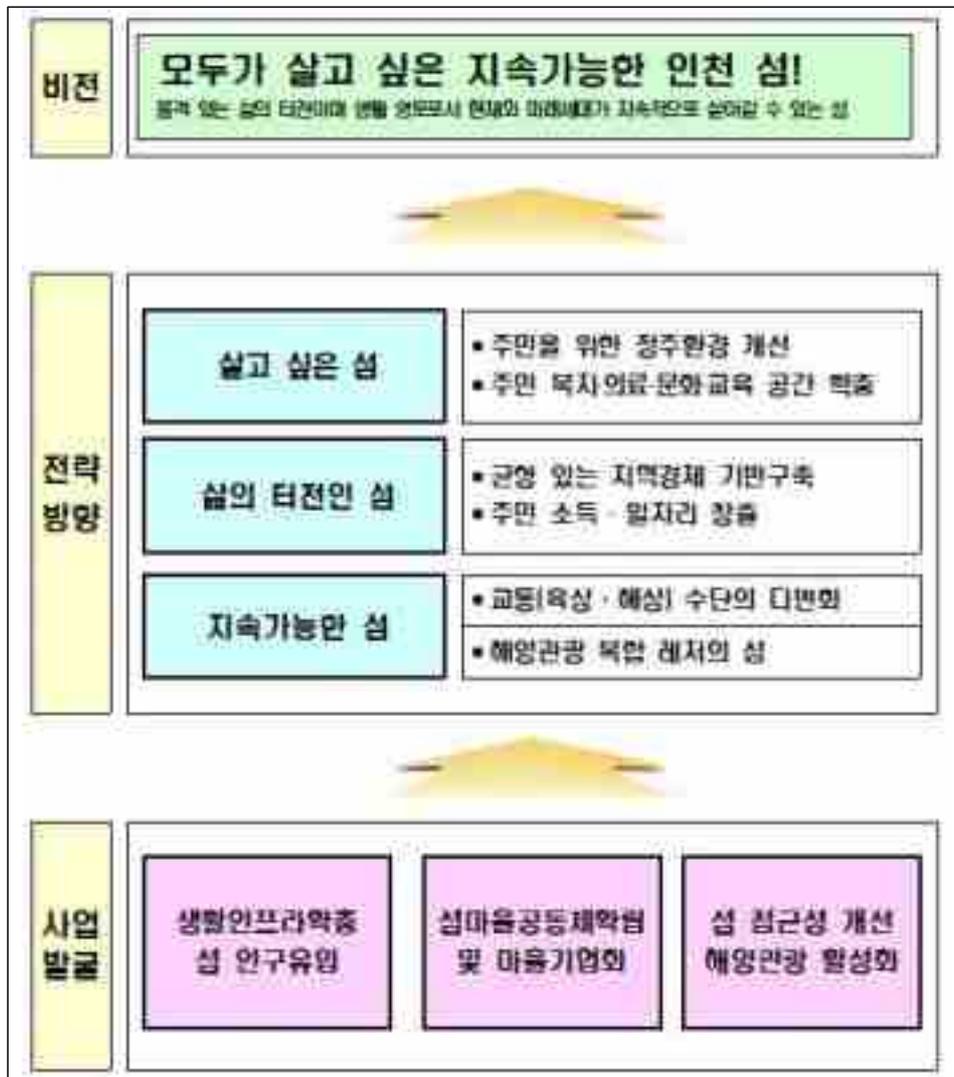
자료: 인천광역시(2019), 「10년후 확실한 미래 인천2030 미래이음」

다.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 (2022~2026)

□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근거, 5년 단위 섬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인천 섬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음
-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은 인천 168개 섬에 대한 가치 재평가와 중요성 인식·인천 섬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과 효율적 관리방안 필요성을 배경으로 인천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목표·추진전략 설정을 목표로 수립된 섬 발전에 관한 시정 기본계획임
- 비전은 ‘모두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인천 섬’, 전략방향은 ‘살고싶은 섬’, ‘삶의 터전인 섬’, ‘지속가능한 섬’으로 각각 설정함

[그림 3-13]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 비전·전략방향



자료: 인천광역시(2022),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

□ “모두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인천 섬”, 3대 전략방향, 6대 추진과제 제시

- 첫 번째 전략방향 ‘살고싶은 섬’은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주민 복지·의료·문화·교육 공간 확충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함
- 두 번째 전략방향 ‘삶의 터전인 섬’은 균형 있는 지역경제 기반구축·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함
- 세 번째 추진방향 ‘지속가능한 섬’은 교통 수단의 다변화 및 해양관광 복합 레저의 섬 조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함

[표 3-8]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 전략별 세부추진과제

구 분		추진과제
살고 싶은 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특수상황지역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 지역 도로환경 정비로 생활 편의성 제고(교통사고 방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 안정적인 양질의 상수원 확보(수자원 확보·관리로 삶의 질 향상) · 마을환경 정비로 깨끗한 섬 이미지 창출(마을경관개선) · 무인도의 유인도화 · 재능기부 확산사업 ‘씩 튀우기’ 추진
	문화·복지·의료·교육 확충 (특수상황지역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체계 구축(백령복합커뮤니티센터) ·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 구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도모 · 지역사회 평생교육기반 구축(학습등대) · 섬 유학(특성화 학교) 유치사업 및 지원 · 작은 영화제 개최(생활 속 문화 환경 구축을 통한 문화의 일상생활화)
삶의 터전인 섬	균형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 (특수상황지역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업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산 환경 조성 ·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 고도화
	주민 소득 일자리 창출 (특수상황지역지원/특성화 공모/인천시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고 싶은 섬 마을 만들기 사업(특성화공모사업과 연계된 인천시 정책) · 스마트 양식 사업 · 바이오플라크를 이용한 친환경양식 추진 · 전통어업 복원사업(해선망) · 섬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 · 통합 브랜드 명품화 사업 · 피셔리 식품산업거점센터 조성 · 천일염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지속 가능한 섬	교통(해상·육상) 수단의 다변화(특수상황 + 인천시정책/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그선(수면비행선박) 도입 및 시범운영(백령 왕복 2시간 소요) · 해상택시 보급(법률 제·개정 건의) 및 친환경요트코스 개발 · 순환선 도입(연료운반선, 도선 활용) · 섬 지역 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확충 (자전거, 스마트모빌리티 등) · 세어도 소형차도선 건조 · 연료운송 시스템 개선을 통한 해양안전 강화(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 덕적도의 자(子)도간 쾌속유람선 도입 · 중국~백령도간 국제여객선 도입 · 백령공항 건설 · 연륙교 및 연도교 건설(내륙 및 섬 간 이동성 확보) · 광명항 제2여객 터미널 조성
	해양관광 복합 레저의 섬 (특수상황지역지원사업 + 민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복합레저단지 ‘시선(Sea-Sun) 조성 및 soft 관광프로그램 개발 · 신도 마리나항 개발 ·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과 해변승마 · 지역자원을 고려한 특수숙박시설 도입 · 인천 보물섬 40도전 프로그램 · 빛 로드 구축사업 · 인천 웰니스 관광사업 추진 · 쌀 문화 에코 뮤지엄 사업 · 종교 유적지 및 순례지 연계상품 개발 ·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사업

3) 분야별 관련 계획

가.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정비법」 근거, 인천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 2018년 기준 2030년 목표 정비계획

-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등의 상위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임
- 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도시정비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규정에 따라 2030년으로 정하며, 필요시 5년 단위의 재정비를 통하여 여건변화 내용을 반영하며, 정비기본계획은 인천시 8개 자치구 및 강화군 4개소를 공간적 범위로 함
-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주거지관리·토지이용·건축물밀도·교통·생활기반시설·환경·특성 주거지·주거안정·공공 및 민간부문 역할에 대한 기본방향·원칙을 제시함
- ‘사람, 삶, 삶터를 중심으로 편안한 주거지 조성’을 비전으로 사람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주거기능 회복, 삶을 담아내는 편안한 주거지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삶터의 가치 재창조를 통한 장소성 제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9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사람, 삶, 삶터를 중심으로 편안한 주거지 조성”, 3대 목표·9대 추진전략 제시

- 첫 번째 목표 ‘사람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주거기능 회복’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우선 확충으로 균형있는 정주환경 조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주민참여형 주거지 정비·개발로 양호한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함
- 두 번째 목표 ‘삶을 담아내는 편안한 주거지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로운 주거지 관리체계 도입, 양질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개선, 주거생활권 단위 밀도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지 관리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함
- 세 번째 목표 ‘삶터의 가치 재창조를 통한 장소성 제고’ 지역특성, 유·무형 고유자산의 보전으로 장소성 제고, 지역 간 연계를 위한 기반시설계획, 주거환경진단을 위한 주거환경지표 도입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함

[그림 3-14]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 인천광역시(2020),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나. 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 「도시재생법」 근거, 10년 단위 기본계획,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재생방향성 제시

-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10년단위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5년 단위로 정비되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하위계획이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재생방향성을 제시함
-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은 인천다움을 강조한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 발굴 필요·원도심에 대한 가치 재조명과 체계적 도시관리의 중요성을 반영,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생 전략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재생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됨
-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은 ‘사람과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활력있는 인천 만들기’를 비전으로 3대 목표로 인천다움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문화·환경 재생, 4차 산업시대 스마트재생을 위한 산업공간 재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지 재생을 설정,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함

[그림 3-15]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비전·목표 및 도시재생 종합 기본구상도



자료: 인천광역시(2019), 「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 “사람과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활력있는 인천 만들기”, 3대 목표 · 9개 추진과제 제시

- 첫 번째 목표 ‘인천다움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문화·환경 재생’은 단절되어 있던 개별 자원 및 자원 간 연계성을 통한 장소마케팅을 추진전략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재생,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화경제 생태계 구축, 자연친화적 사람중심의 도시 조성을 과제로 제시함
- 두 번째 목표 ‘4차 산업시대 스마트재생을 위한 산업공간 재생’은 저·미이용 시설공간을 활용한 혁신

거점 조성 및 연계를 추진전략으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공간 창출, 선형 도시재생을 위한 모델 구축 및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한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을 과제로 제시함

- 세 번째 목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지 재생'은 노후주거지재생 유관사업 체계적 관리를 통한 단계적 주거지 재생을 추진전략으로 체감도 높은 노후 쇠퇴 주거지역 재생 활성화, 준공업지역 및 공업지역 주변 주거지 재생,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관리방안 마련을 과제로 제시함

□ 중부·남부·동북·서북·강화/옹진 5개 권역으로 생활권 구분, 재생권역별 추진전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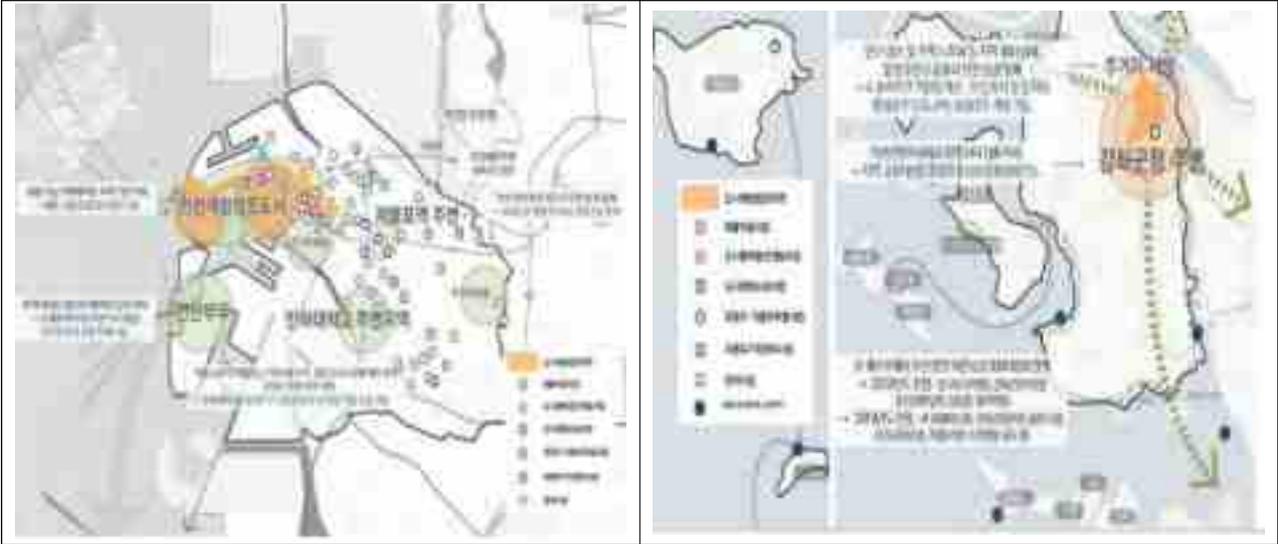
-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은 중부 재생권역(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부 재생권역(연수구, 남동구), 동북 재생권역(부평구, 계양구), 서북 재생권역(서구), 강화·옹진 재생권역(강화군, 옹진군) 5개 권역으로 구분, 생활권별 추진전략을 제시함

[표 3-9]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생활권별 재생추진전략

구 분	재생방향
중부 재생권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관광 자산의 연계·활용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 MICE산업 연계거점 조성으로 주변 경제거점 파급효과 확산 · 도서지역 복지 기반시설 확충 및 내항 수변공간 중심 재생거점 마련 · 노후주거지의 종합적 정비·재생
남부 재생권역 (연수구, 남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및 주민·근로자 생활 활력 제고 · 산업단지 정비와 주변 지역 연계를 통한 고용창출 · 저·미이용 건축물·부지를 활용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 대규모 주거 단지 계획적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동북 재생권역 (부평구, 계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고속도로, 도시철도 중심, 주거·공업·상업 공존 복합혁신 거점 조성 · 신도시와 원도심을 잇는 대중교통 중심지 육성 · 대학자원을 활용한 주거지 특화재생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구간과 연계한 기초생활인프라 복합화
서북 재생권역 (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특화 연계를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일반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인천 산업 경쟁력 향상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통축 조성 · 공업지역과 주변 노후 주거지역을 연계한 배후주거지 활성화
강화·옹진 재생권역 (강화군, 옹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 평화관광 테마를 활용한 차별화 된 섬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통합 플랫폼 조성 · 도서지역 특성에 맞춘 경제 활성화

- 도서지역을 포함하는 중부 재생권역의 경우 연안부두·연안여객터미널 중심,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보건, 복지, 의료, 돌봄 기능 등)을 활용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산업(항만·물류 등), 상업(신포시장, 차이나타운 등), 주거(주거지재생, 인천여상주변 구역 등), 복지(유치원 등 생활 SOC부족 시설), 행정(중구청 등 부족한 행정공간 확보) 기능을 내항 이전적지에 배치하여 내항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기능이 집적된 재생 거점 마련을 재생방향을 설정함
- 도서지역인 강화·옹진 재생권역은 섬 평화관광 테마를 활용한 차별화 된 섬 관광 프로그램 개발, 어촌 뉴딜300 사업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통합 플랫폼 조성, 섬 특화 관광프로그램 및 브랜드 구축을 통한 도서지역 특성에 맞춘 경제 활성화를 재생방향으로 설정함

[그림 3-16]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중부 재생권역, 강화-옹진 재생권역 재생방향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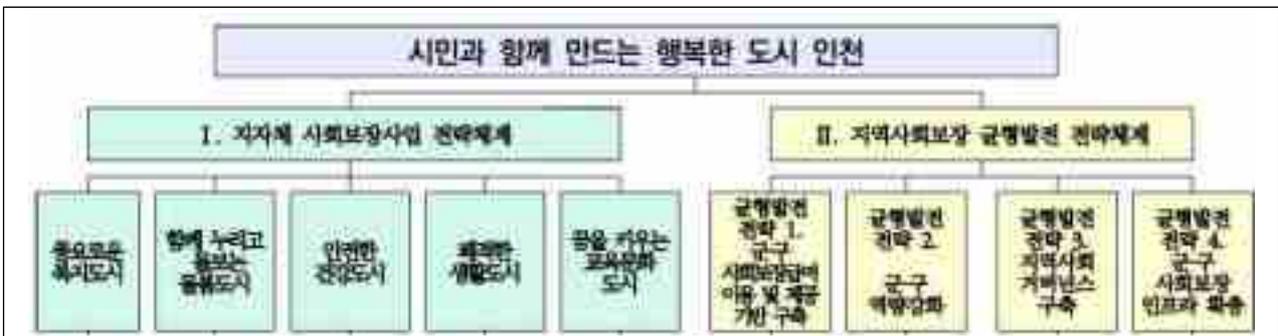
자료: 인천광역시(2019), 「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다.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 「사회보장급여법」 근거, 4년 단위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을 담은 기본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계획임
-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10개 군구 주민의 복지 욕구와 여건을 고려한 1+10 인천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체계구축 및 인천시를 중심으로 보장계획 수립 원칙인 참여성과 협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 조성 필요성에 따라 인천시의 민선 8기 시정 방향에 부응할 수 있는 목표와 사업 구성된 기본계획을 수립함
-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그림 3-17]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목표



자료: 인천광역시(2022),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인천”, 2대 목표 · 9대 추진전략 제시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풍요로운 복지도시, 함께 누리고 돌보는 돌봄도시, 안전한 건강도

시, 쾌적한 생활도시, 꿈을 키우는 교육문화도시를 추진전략으로 설정,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는 군·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군·구 역량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군구·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함

- 인천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국·여성가족국·건강보건국·문화체육관광국·도시계획국 등 11개 실·국, 21개과 37개 팀이 세56개 부사업을 추진함

□ 도서지역의 위기극복 및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지원 방향 제시

- 사회보장전략 중 인구감소·개발로 도서지역 특성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부사업으로 옹진 섬마을 박물관 조성 추진계획을 제시함
- 옹진 섬마을 박물관 조성사업은 옹진군 소재 23개 유인도에 대한 역사·민속·문화 관련 자료 보존 및 전승, 도서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 등을 목적으로 연간 1개 섬마을박물관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설정함
-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은 섬 지역 등 다양한 지리적 특성과 자원을 보유한 인천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3-18]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옹진 섬마을 박물관 조성 사업개요

사업(과업) 배경		·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도서 지역의 역사·민속문화에 대한 자료 축적 필요 ·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멸종과 건물, 개발로 인하여 '섬'의 특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서지역의 '현재'를 기록·보존 필요										
사업(과업) 목적		· 옹진군 소재 23개 유인도에 대한 역사·민속·문화 관련 자료 보존 및 전승 · 도서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주민들이 박물관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실 고취										
추진근거(관련규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장 제4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5권, · 섬 조사연구 및 섬마을박물관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인원시업박물관 옹진군 인천문화재단 3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건물, 개발로 인하여 '섬'의 특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서지역을 우선 선정										
	대상 규모	· 연간 1개 도서지역을 선정하여, 1년 간 조사·연구를 거친 뒤 섬마을박물관 조성										
사업(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연간 1개 섬마을박물관 조성										
	세부 내용	· 인천시립박물관은 조사·연구 및 전시컨텐츠 개발 담당 · 옹진군은 섬마을박물관 부지(시설) 제공 및 향후 섬마을박물관 운영 담당 · 인천문화재단은 해당 도서지역과 관련한 보고서 제작 담당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대상지역 선정(연선 - 조사 - 전시사업비) 및 보고서 발간 - 섬마을박물관 조성 및 차년도 대상지역 선정										
	수행 기관	· 인천시립박물관, 옹진군, 인천문화재단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①+②+③)	0	(100%)	65	(100%)	100	(100%)	100	(100%)	130	(100%)
	지방비	소계(①+②)	0	(0%)	65	(100%)	100	(100%)	100	(100%)	150	(100%)
		①사·도·비	0	(0%)	65	(100%)	100	(100%)	100	(100%)	130	(100%)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개 도서지역 조사·연구에 대한 예산이며, 섬마을박물관 부지 제공 및 향후 운영에는 옹진군 예산 활용 · 인천시립박물관은 조사·연구 및 전시컨텐츠 개발 담당 · 옹진군은 섬마을박물관 부지(시설) 제공 및 향후 섬마을박물관 운영 담당 · 인천문화재단은 해당 도서지역과 관련한 보고서 제작 담당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연간 섬마을박물관 조성 수(개소)										
	지표정의	· 연간 1개 섬마을박물관 조성										
	연도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목표수준산출근거	· 연간 1개 도서지역을 선정하여, 1년 간 조사·연구를 거친 뒤 섬마을박물관 조성										
자료출처		· 인천시립박물관, 옹진군, 인천문화재단										

자료: 인천광역시(2022),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

라.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

□ 「지역문화진흥법」 근거, 5년 단위 지역문화 진흥정책 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수립되는 시·도 지역문화진흥 정책·목표·비전으로 중앙정부의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인천시 실정에 맞는 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은 ‘함께 가꾸며 삶을 바꾸는 문화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시민문화 자치도 증가·시민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삶에 대한 행복도 증가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 및 16대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그림 3-19]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 비전·목표·전략과제



자료: 인천광역시(2020),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 (2020~2024)」

□ “함께 가꾸며 삶을 바꾸는 문화도시 인천”, 4대 추진전략 · 16개 세부추진과제 제시

- 첫 번째 전략 ‘문화자치 기반조성’은 문화자치 추진기반 구축·지역문화 협력체계 강화·문화자치 재정 확보·문화자치 역량 강화를 추진과제로 설정, 문화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향을 설정함
- 두 번째 전략 ‘문화적 포용성과 다양성 증진’은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강화·지역별 생활문화활동 다양화·예술인 창작지원 및 복리증진·문화다양성 증진·가치확산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 세 번째 전략 ‘지역문화자원 발굴·활용 진흥’은 문화자원 발굴 및 융합적 활용 활성화·지역특화 콘텐츠 산업 육성·생활권 로컬관광산업 육성·스마트 마이스산업 특성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 네 번째 전략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재생 추진’은 지역특화 문화도시 조성 지원·문화기반시설 전략적 확충·문화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확대·사회혁신형 문화활동 지원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 문화공급 개선 및 지역 간 문화격차 대응을 위한 도서지역 문화역량 강화 목표

- ‘문화적 포용성과 다양성 증진’ 전략과제는 지역별 생활문화 활동 다양화 과제에 도서지역·산업단지·원도심 등 문화소외지역 문화적·사회적 격차해소를 위한 생활문화 공동체 공익사업 지원 추진계획을 제시함
- 문화다양성 증진 및 가치확산 과제는 문화다양성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섬 문화특화사업 추진을 계획, 섬 문화콘텐츠 발굴 지원, 섬 문화특화지역 선정 및 지원, 도서지역 해양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등 지원을 위한 특화 문화콘텐츠 조사·개발, 섬 레지던시 조성 추진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재생 추진’ 과제는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 등 도서지역 등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대상 문화환경 취약지역 선정 및 우선 지원에 대한 계획을 제시함

마. 인천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 (2020~2030)

□ 해양도시로서 정체성·위상강화를 위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인천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30 인천 바다이음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바다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양친수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된 기본계획임
- 해양친수도시기본계획은 인천 해양공간관리 기본계획, 무역항 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인천 해안지역 친수공간 확보방안 및 해양친수도시 미래비전·전략·실행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해양친수도시기본계획은 ‘2030 바다이음’을 비전으로 5대 목표, 15개 네트워크 전략을 제시, 5대 목표는 달린 바다를 열린 공간으로 잇는 개방, 시간의 흔적을 새로운 기능과 잇는 재생, 섬마을의 낭만을 사람과 잇는 상생, 우리의 바다를 미래세대와 잇는 보전, 인천의 바다를 세계와 잇는 국제 등으로 설정, 15개의 네트워크화 전략을 통해 발굴한 38개 신규사업을 제시함

□ “2030 바다이음”, 5대 목표 · 15대 네트워크 전략 및 38개 신규사업 제시

- 첫 번째 목표 ‘개방적 해양친수도시’는 정서진 친수 네트워크 구축·영종 자전거한바퀴 네트워크 구축·소래~송도 친수 네트워크 구축을 세부추진전략으로 설정, 총 사업비 731억 원을 산정하고 15개 전략별 투자계획을 수립함
- 두 번째 목표 ‘재생적 해양친수도시’는 인천내항 친수 네트워크 구축·용유~마시안 친수 네트워크 구축·유류공간 활용 해양공원 조성을 세부추진전략으로 인천내항 친수 네트워크”는 5개의 친수공간 조성사

업, “용유~마시안 친수 네트워크” 2개 친수공간 조성, “유휴공간 활용 해양공원 조성” 2개 친수공간 조성으로 총 사업비 835억 원을 산정

[그림 3-20] 인천 해양친수공간 기본계획 총괄 구상도



자료: 인천광역시(2021), 「인천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2020~2030)」

[그림 3-21] 인천 해양친수공간 기본계획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비(억 원)	연도(2021~2030)	진행률(%)
유공 기타 관할 구역 (1회)	합계	208,934	16개년	24%
	2030 인천 바다이음	308,934	16개년	24%
	구월역사 바다이음사업	7,157	●	
	연안권 역사 친수사업	252	●	
	익달동유원지 친수사업	2,974	●	
	동막도 유원지사업	26,583	●	○○○%
	항유 유원지사업	9,295	○	
	북산포구 친수 Fog	3,148	○	
	항유 유원지 사업	2,481	○	
	인천 피터복스시절	4,000	○	
	동막도 유원지사업	16,056	○	
	연안권 역사 친수사업	9,975	○	
	북산포구 유원지사업	6,000	○	
	구월역사 유원지사업	1,833	●	
	6개 유원지 유원지사업	4,101	●	
	소래 유원지사업	2,283	○	
	항유 유원지사업	14,216	●	
	항유 유원지 사업	1,988	○	
	연안권 역사 친수사업	83	●	
	동막도 유원지 사업	4,000	○	
유공 기타 관할 구역 (2회)	구월역사 바다이음	6,524	○	
	동막도 유원지사업	4,488	○	
	마시안 친수사업	3,334	○	
	항유 유원지 사업	9,024	○	
	연안권 역사 친수사업	-	○	
	연안권 역사 친수사업	5,500	●	
	연안권 역사 친수사업	9,341	○	
	항유 유원지사업	4,827	●	
	항유 유원지사업	1,122	●	
	항유 유원지사업	9,345	○	
	항유 유원지사업	16,822	○	
	항유 유원지사업	2,981	●	
	항유 유원지사업	3,430	●	
	항유 유원지사업	4,948	●	
	항유 유원지사업	21,800	●	
항유 유원지사업	12,000	○		
항유 유원지사업	21,800	○		
항유 유원지사업	3,411	○		
항유 유원지사업	-	○		
항유 유원지사업	15,000	○		
항유 유원지사업	36,300	○		
항유 유원지사업	-	○		
항유 유원지사업	1,600	○		
항유 유원지사업	-	○		

자료: 인천광역시(2021), 「인천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2020~2030)」

- 세 번째 목표 ‘상생적 해양친수도시’는 인천 바다역(驛) 네트워크, 항·포구 친수기반 확충, 인천 해양치유지구 조성 등을 세부추진전략으로 설정하며, ‘상생적 해양친수도시’ 관련 친수공간 조성사업, ‘인천 바다역(驛) 네트워크’ 2개(사업지구 4개), ‘항·포구 친수기반 확충’ 3개, ‘인천 해양치유지구 조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6억 원을 산정함

- 네 번째 목표 '보전적 해양친수도시'는 문화체험 강화 돈대이음, 경관관리 친수공간 경관관리방안, 생태탐방 친수연안 이음을 세부추진전략으로 "문화체험 강화 돈대이음"은 1개의 친수공간 조성(3개 구간)포함, "생태탐방 친수연안 이음길" 6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422억을 산정함
- 다섯 번째 목표 '국제적 해양친수도시'는 친수 페스티벌 육성, 인천공항 환승객 바다이음, 인천형 워터프론트 가이드라인을 세부추진전략으로 총사업비 95억원을 산정함

□ 총 39개 신규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발굴·계획을 수립

- 2030 인천 바다이음의 신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총 39개로 발굴·계획,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의 관할구역 내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18개소, 지자체 관할구역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1개소로 구분함
- 사업추진은 유관기관 관할구역 및 지자체 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유관기관 관할구역은 항만구역, 경제구역으로 구분하여 세부 추진과제 및 단기·장기 과제로 제시, 지자체 관할구역은 중구·서구·강화군·옹진군·기타로 구분하여 지역별 사업추진 일정 및 과제를 제시함
- 2030 인천 바다이음 기본계획에서 발굴·계획한 친수공간 39개소에, 시·유관기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거나 장래 예정된 친수공간 사업 124개소를 연계하여 인천 해양 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총 163개의 사업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함

바.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 「해양교육문화법」 근거, 5년 단위 해양교육·문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은 「해양교육문화법」을 근거로 수립되는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해양역량 강화 및 해양문화 참여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를 2021년 제정,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 해양교육문화 사업의 현황 파악 및 해양교육 확대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구축 노력을 통해 인천시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을 수립
- 비전은 '함께하는 바다, 행복한 시민'으로 설정, 해양교육문화 전문인력양성·해양교육문화 시설의 건립 지원·인천시 해양교육센터 설치를 3대 목표로 설정,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강화·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 조성·해양교육문화 제도/기반정비를 3대 추진전략으로 7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함께하는 바다, 행복한 시민”, 3대 추진전략 · 7개 추진과제 제시

- 첫 번째 추진전략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강화'는 학교·사회해양교육 사업발굴·지원을 통한 해양교육의 확대 및 해양문화자원 실태조사를 통한 해양문화자원 발굴·활용 촉진으로 설정
- 두 번째 추진전략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은 해양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해양교육 문화산업 지원 강화, 지역체험문화 신규사업발굴을 통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문화 활성화로 설정함
- 세 번째 추진전략 '해양교육문화 제도·기반 정비'는 해양교육문화시설 건립지원을 통한 해양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해양교육문화협의회 구성 및 해양교육센터 설치를 통한 해양교육문화 실행체계 구축,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 센터 협력강화 사업추진을 통한 협력네트워크·홍보강화로 설정함

[그림 3-22] 인천광역시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비전·목표 및 추진단계



자료: 인천광역시(2021),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2021~2025)”

3. 관련 사업

[검토 대상 선정 기준]

- ☞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소속 섬해양정책과의 2023년 주요업무
- ☞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인천광역시 섬발전지원센터의 2023년 운영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검토함

1) 검토 개요

□ 인천시 섬해양정책과 및 인천광역시 섬발전지원센터 섬 발전 관련 추진업무 검토

- 인천광역시 섬해양 정책을 총괄·추진하고 있는 해양항공국 소속 섬해양정책과의 2023년 주요업무를 기반으로 섬 발전 관련 추진사업을 검토함
-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섬 마을의 자립기반 마련 등 섬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섬발전지원센터의 주요 추진사업을 검토, 인천시의 섬 발전과 관련한 지역정책의 반영 정도와 중점 추진방향을 점검함

2) 인천시 섬 발전 주요 추진업무

□ 입지적 장점·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 정책 등을 추진

- 인천시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이 표방하는 ‘시민중심의 국제·문화·해양도시’ 비전 및 섬 관광활성화·해양레저 관광 활성화·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목표의 달성을 위한 사업을 설계 및 추진하고 있음
- 인천시 분야별 중장기 정책과제의 기본방향을 제안하는 “인천 2030 미래이음”의 환경·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책 목표인 섬의 자연경관 명소화·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및 섬 활용 관광콘텐츠 육성에 맞춰 섬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천시 해양항공국 소속 섬해양정책과는 2023년 6개 중점사업을 추진함

- 인천시의 섬 발전과 관련하여 해양항공국 소속 섬해양정책과의 2023년 주요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표 해양교육문화 거점 조성, 크루즈 및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 특수상항지역 개발 사업, 해상교통(여객선) 이용편의 증진, 지역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함
- 수도권 대표 해양교육문화거점 조성사업은 시민의 해양역량 강화 및 해양역사문화 체험 등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인천시민 또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교육·문화 관련 전문인력 대상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함
- 크루즈 및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 사업은 크루즈선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크루즈산업 활성화·해양스포츠 사업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크루즈 마케팅 및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진행함

-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은 섬·접경지역에 대한 지속발전 사업추진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을 지속추진함
- 해상교통이용편의 증진사업은 연안여객선 운임·국가보조항로 지원으로 해상교통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연안운임비 지원·국가보조항로지원을 추진함
- 지역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활성화 사업은 섬 특성 콘텐츠 개발로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섬 명소화 사업·섬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섬음악회 진행·섬관광 홍보콘텐츠 활성화·섬포털 구축사업을 수행함
-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사업은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지원 사업으로 정주지원금·생필품해상운송비 지원 및 노후주택개량사업을 진행함

[표 3-10] 2023년 인천광역시 섬해양정책과 추진사업

사업명	내용	
수도권 대표 해양교육 문화 거점 조성	사업 목표	· 수도권 대표 해양도시로서 시민의 해양역량 강화 및 해양역사문화체험 등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 사업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프로그램 운영 : 인천시민 또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교육·문화 관련 전문인력 대상 해양교육 프로그램 진행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지원: 중구 북성동1가 106-7, 8번지 일원(부지 26,530㎡, 건축연면적 17,318㎡, 지상 4층), 기간: 2023.06~2023.12. 예산: 86백만원 예산: 1,067억원(국비)
크루즈 및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	사업 목표	· 크루즈선 및 관광객 유치 통한 크루즈산업 활성화 · 해양레저 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에 따른 관련 사업 활성화 지원
	추진 사업	· 크루즈산업 활성화 : 인천관광상품 개발지원, 크루즈 유치마케팅, 환대 및 안내체계 구축 기간: 2023.01.~2023.12. 예산: 180백만원 ·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 지원 :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기간: 2023.01.~2023.12. 예산: 80백만원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	사업 목표	· 섬 및 접경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발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 도모
	추진 사업	·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정주기반 및 지역발전 도모: 개발대상 섬 및 접경지역 개발 45건 기간: 2023.01.~ 예산: 42,365백만원 (국비 33,892, 시비 4,158, 군·구비 4,315)
해상교통 (여객선) 이용편의 증진	사업 목표	· 연안여객선 운임 및 국가보조항로 지원으로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
	추진 사업	· 해상교통(여객선) 운임 지원 : 섬 주민, 인천시민, 타 시·도민, 출항민, 군장병 면회객 대상 섬 주민 및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운임 지원 기간: 2023.01.~2023.12. 예산: 16,857백만원 (국비 3,693, 시비 9,370, 군비 3,794) · 국가보조항로(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 해양수산부 선정 항로대상 1일 생활권 구축 및 2년 연속 적자 항로 결손액 지원 기간: 2022.12.~2023.12. 예산: 2,886백만원 (국비 1,443, 시비 722, 군비 721)
지역자원을 활용한 섬	사업 목표	· 섬 특성 분석과 콘텐츠 개발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한 인천 섬에 대한 인지도 제고

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	· 인천 섬 명소화 사업 : 관광콘텐츠화, 섬 관광 편의 서비스 기반 강화	기간: 2023년~2025년 예산: 3,000백만원 (시비 1,500, 군비 1,500)
		·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섬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전용홈페이지 구축, 홍보·마케팅	기간: 2023.01.~2023.12. 예산: 1,000백만원 (시비 500, 군비 500)
		· 주섬주섬 음악회 :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 주섬주섬 음악회 개최	기간: 2023.04.~2023.08. 예산: 65백만원(시비)
		· 섬 관광 인지도 제고 : 영상 제작 및 홍보, 홍보 부스, 가이드북 제작, 서포터즈 운영	기간: 2023.01.~2023.12. 예산: 620백만원 (시비)
		· 인천 섬 호텔 구축 : (1차)마스터플랜 수립, 관광 콘텐츠 개발 및 H/W·S/W 기반구축 · (2차) 섬 교통 디지털 인프라 강화, · (3차) 섬 관광 콘텐츠 보강 및 인프라 고도화	기간: 2022년~2026년 예산: 1,143백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서해5도 주민 생활 지원사업	사업 목표	·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추진 사업	·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 정주생활지원금 (6개월 이상 10년 미만 8만원, 10년 이상 15만원 / 월평균 4,981명), 생필품해상운송비 (유류 55원/ℓ, 14백만 ℓ, 가스 450원/kg, 1백만kg, 운반비 지원, 노후 주택개량사업 (20년 이상 된 주택 10동의 개·보수 비용 지원)	기간: 2023.01.~2023.12. 예산: 9,355백만원 (국비 7,484, 시비 1,310, 군비 561)

[그림 3-23] 2023년 인천광역시 섬해양정책과 추진사업 모습



크루즈 사업 활성화(크루즈박람회 개최)

해상교통 운임지원

섬관광 활성화(주섬주섬 음악회)

섬관광 활성화(섬명소화, 대이작도)

자료: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표 3-11] 2023년 인천광역시 섬 발전 관련 기타 추진사업(섬해양정책과 이외 부서)

부서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 (백만 원)
항만 연안과	해양친수도시 조성 사업	해안길, 쉼터 등 조성	-
	연안정비사업	연안 정비	6,900
	해양환경·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해양보호구역 인식증진 및 관리체계 강화	180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 탐방로 조성	714
		유해해양생물(갯끈풀) 제거 및 관리	714
		해양보호생물(점박이물범) 보호 및 인식증진	20
해양환경 교육 및 체험 지원	40		
수산과	어촌·어항 재생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27,646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650
	어항 기반시설 구축	물량장 조성,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선착장 보수·보강	11,520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	수산물 저장·가공시설 구축 및 유통체계 지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수행 경비 지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6,672
수산기술 지원센터	귀어학교 개설	귀어학교 개설 위한 교육시설 및 생활관 건축	1,500

3) 인천 섬발전지원센터 추진사업

□ 지역특성 고려, 관광매력도시 실현 및 섬 자연경관 명소화, 섬 활용 관광콘텐츠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섬 기초자료조사·관리 사업을 수행함

-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의 기반사업으로 섬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DB 구축 및 정책 비교 등 지역자원의 기초자료 조사·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섬 기초자료 조사·관리 사업은 인천 섬 조사·연구과제 수행으로 종합DB 구축 등 섬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섬 종합 및 DB 구축·섬 발전 정책 비교분석 사업을 수행, 2023년 총 44,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함
- 인천 섬발전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섬 지역 종합 DB 구축은 섬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인천2030 미래이음”이 표방하는 섬 활용 관광콘텐츠 육성 및 자연경관 명소화·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지역특성 맞춤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인천 섬발전지원센터는 시정운영 최상위 중장기 계획인 “인천2030 미래이음”의 환경분야의 섬 자연경관의 명소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섬 지역 특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전문가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은 특성화사업 추진현황 진단·개선안 도출로 사업효과 지속성 증진과 마을 주민들의 컨설팅·교육 참여수요 대응을 목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지역사회·주

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 2023년 총 59,000천 원의 예산을 투입함

□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 활성화로 지역상생을 통해 효율적 섬 자원 활용 도모

- 인천 섬발전지원센터는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인천 섬발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의 장을 통한 유대관계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섬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및 섬 지역상생·여건개선 지원과 섬 소식지 발행·섬홍보/전시 진행 등을 추진, 2023년 총 78,500천원을 투입함
- 섬 발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간담회 추진·소식지 발행 등을 통해 섬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를 추진과 더불어 섬 홍보·전시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섬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음

[표 3-12] 2023년 인천 섬발전지원센터 추진사업

사업명	내용		
섬 기초자료 조사·관리	사업 목적	· 인천 섬 조사·연구과제 수행으로 R&D 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 · 종합 DB 구축으로 섬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추진 사업	· 섬 종합조사 및 DB 구축: 섬 기초여건 및 실태조사 3개년 보고서 통합 자료 구축, 인천 섬 분기별·권역별 입도객 통계자료 구축 및 증감 추이 분석, 국내외 섬발전 사례조사 및 타기관 발간 매체(보고서 등) DB 구축	사업예산 : 22,000천원
		· 섬 발전 정책 비교분석: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된 섬 관련 지원 정책을 통합·정리, 섬 주민의 참여 접근성 제고 및 신규 특성화사업 발굴에 활용	사업예산 : 22,000천원
사업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목적	· 특성화사업 추진현황 진단 및 개선안 도출로 사업효과와 지속성 증진 · 특성화사업 마을 주민들의 컨설팅 및 교육 참여 수요 대응	
	추진 사업	· 특성화사업 모니터링 실시 : 특성화사업 대상지별 추진 현황 점검, 현안 파악, 개선방안 도출, 현장조사, 주민 인터뷰를 바탕으로 일지 작성 및 현황보고	사업예산 : 9,000천원
		· 특성화사업 컨설팅 지원 : 사업의 지속성 제고 및 차후단계 공모 지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 사업부진마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문제원인 파악 및 해결안 도출	사업예산 : 20,000천원
· 지역사회 및 주민 역량강화 확대 : 섬별·사업추진단계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특성화사업 마을 주민 및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	사업예산 : 30,000천원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	사업 목적	· 인천 섬 발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 이해주체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유대관계 형성 및 지역문제 해결 도모	
	추진 사업	· 섬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 섬 관계자 교류 활성화·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섬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 과제 발굴	사업예산 : 8,000천원
		· 섬 지역상생 및 여건개선 지원 : 지역사회 단체·기관과 협력하여 인천 섬의 생활여건 개선 지원, 섬 주민과 관내 청년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 활력 증진, SNS 등을 활용하여 인천 섬의 능동적인 홍보·마케팅 실시	사업예산 : 7,000천원
· 인천 섬 소식지 제작·발행 : 정기 간행물을 제작·발행하여 인천	사업예산 :		

사업명	내용	
	섬 및 센터 소식을 대외적으로 공유, 월별 '이달의 섬' 선정 및 현 장취재 실시로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구독자 이메일·카카오톡 발 송, 인천시청 섬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 업로드 등 홍보채널 확대 운영	22,000천원
	· 인천 섬 홍보·전시 : 섬의 날 기념 홍보부스 운영으로 섬의 날 행사 선제적 홍보, 인천 섬 다국어 통합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사진·특산품 등 전시 운영, 인천 섬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옥외 광 고물 제작·설치	사업예산 : 41,500천원

[그림 3-24] 2023년 인천 섬발전지원센터 추진사업 모습



자료: 인천 섬발전지원센터 내부자료

4. 시사점

□ 지속성장기반마련·시스템고도화·해양생태자원 활용 등 정부 정책이 설계한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한 도시 차원의 정책계획 수립

- 인천시 자치법규는 정부 주무부처 소관의 주요 법률에 위임받아 제정된 조례이거나, 상위법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 제정된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규정이므로 자치법규의 경우 법률의 목적 및 방향성과 동일함
- 인천시 차원의 종합계획 중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글로벌 플랫폼 기반의 국제해양도시·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표방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주요 정책 방향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 고도화된 시스템 기반의 해양생태 환경 활용이라는 점에서 방향성이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인천 2030 미래이음'은 생태관광 활성화·지역특화콘텐츠 활용·해양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주요 분야별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정책지향 방향인 해양자원이 풍부한 인천시 지역특성에 부합한 정책추진 목표이므로 정부 정책이 명확히 반영된 도시 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은 "품격 있는 삶의 터전·생활영토로서 현재·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섬"을 목표로 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지역의 자치기반 마련을 위한 생활 인프라 개선·일자리창출 등 섬 지역 소멸대응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방향성 및 목표에 부합함
- 분야별 계획인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균형있는 정주환경조성 및 지역특성 기반의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 발굴, 지역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안정·지역특성 기반 정책추진·균등한 발전 지향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과 추진방향이 일치함

□ 동북아 거점·해양관광거점·위터프론트조성 등 정부 정책계획이 설계한 인천시 발전방향과 동일한 인천시 도시정책계획 추진

- 섬 관련 주요 종합계획인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인천 2030 미래이음', '인천섬 발전기본계획'은 인천시를 동북아 교통·물류의 거점으로서 해양·항만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생태 관광공간 조성, 위터프론트 조성을 통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주요 계획이 설계한 인천시 발전 방향과 일치함
- 분야별 계획인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생활권역 구분에 따른 권역별 특성 맞춤형 주거정비·재생전략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 정책계획에 부합함

□ 시민중심 문화·해양도시 발전 및 자연생태도시·특화콘텐츠 육성·도시경관자원 활용 등 인천시 정책 방향성 반영 사업추진

- 인천시 섬해양정책과 추진사업은 해양교육문화 거점 조성을 위한 시민교육 추진, 지역 특화콘텐츠인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해양 레저 스포츠 사업 활성화 추진, 지역 섬 자원의 경관을 활용한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추진 계획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천시 섬발전지원센터의 추진사업은 섬지역 지역상생·여건개선을 위한 네트워크·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시민 중심의 섬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특성화 사업 모니터링·컨설팅·교육 수행을 통해 지역별 특화콘

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점에서 인천시의 섬 발전 관련 정책추진 전략에 부합한 사업추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생태자원·항만자원·문화자원 활용 관광활성화 및 권역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주요 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함

- 인천광역시 섬 관련 주요 기본계획은 인천시 특화자원인 생태자원·항만자원·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워터프론트·해양명소·복합리조트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섬을 포함한 해양항만 지역의 관광 활성화 계획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시민의 정주여건 및 복지수준 개선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여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 생활인프라 조성이 필요한 도서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주요 계획은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섬 지역 생태자원·항만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정책 추진을 통해 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13] 섬 발전 관련 인천광역시 계획

구분	계획명	주요 내용
관련 종합 계획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 국제해양도시·지속가능한 환경도시 표방 - (관광)워터프론트·해양명소 조성, 섬 생태관광개발,복합리조트 클러스터,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 (물류)항만별 특화 활성화 물류 관문항 조성 - (문화)개항장권 근대 역사 문화공간 정비·창조
	인천 2030 미래이음	· 자연생태도시·지역 특화 섬 콘텐츠 활용 관광·도서지역 경관자원 활용 지역경쟁력 강화, 항만 인프라 활용 목표 - 자연경관 명소화, 생태마을지정·관광사업 추진, 마리나 크루즈 등 해양레저 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	· 섬 가치 재평가 · 지속가능한 섬 발전 목표 - (살고싶은 섬) 정주여건 개선, 인프라 확충 - (삶의 터전인 섬) 지역경제 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 (지속가능한 섬) 교통 수단 다변화, 마리나항 신규개발, 웰니스 관광사업 추진해양관광 복합 발전 등
분야별 관련 계획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 삶터 중심 편안한 주거지 조성 표방 -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 지역 유무형자산 보전 장소성 제고 등
	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 계획	· 문화 사업이 공존한 활력있는 인천 만들기 목표 - 도서지역 주민 복지시설 개선, 수변공간 중심 기능 재생거점 마련, 섬 평화관광 테마를 활용한 차별화된 섬 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경제 활성화 추진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 풍요로운 복지도시·돌봄도시·건강도시·쾌적한 생활도시 표방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도서지역 위기극복 섬 마을 박물관 조성 추진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 시행계획	· 직접 가꾸는 문화·함께 나누는 문화·삶을 바꾸는 문화 - 섬 문화특화지역 선정·지원, 도서지역 해양관광프로그램 활성화, 섬 레지던시 조성 추진

구분	계획명	주요 내용
	2030 인천 바다이음 해양 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	· 섬마을 낭만을 사람과 잇는 상생 등이 목표 - 인천 인근 항·포구 친수기반 확충, 생태탐방 친수연안 이음, 친수페스티벌 육성, 인천형 워터프론트 가이드 제시 등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조성·해양교육문화 제도/기반 정비 - 해양문화자원 실태조사를 통한 해양문화자원 발굴·활용 촉진, 해양교육센터 설치 등 해양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 국제해양도시 도약을 위한 사업추진 동력 미흡, 소권별·재생권역별 개발 방향에 따른 연차별 추진 계획 마련·실행 필요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은' 문화관광·교통물류 분야 소권별 개발방향을 설정, 지역별 특성에 맞춘 도시재생·생태관광·해양레저 관광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인천시와 섬발전지원센터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살펴보면 권역별로 구분된 국제적 해양도시 실현을 위한 연차별 추진방안이 부재하여, 세부 사업 추진동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인천시 차원에서 수립·추진 중인 계획의 세부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기반으로 사업 수행 주체 선정, 전략체계 설정, 단계별 계획을 수립을 선행하여 섬 발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효율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인천 섬발전 기본계획'은 섬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지역경제기반구축·교통수단 다변화 등을 전략으로 다양한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나, 제안된 추진과제에 비해 현재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섬 발전 지원의 범위가 협소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별로 구체화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역소멸 위기 속 특수상황지역·취약지역·소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섬 지역에 대한 정주민구 이탈 방지 및 생활관계인구 유입을 위한 적극적 사업추진 필요

- 국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야기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특히 섬 지역은 위기 전부터 생활 환경 조성 미흡으로 정주민구가 많지 않았으므로, 정주민구의 이탈을 방지하고 생활 관계인구의 유입을 위한 적극적 정주환경 개선 및 장기적·지속적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이 필요함
- 정주환경 개선 지원방안의 확대, 청년 관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획기적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섬발전지원센터의 역할과 조직확장을 통해 효율적·체계적 섬 발전 지원 사업 추진의 동력 확보 및 추진사업의 효과성 점검장치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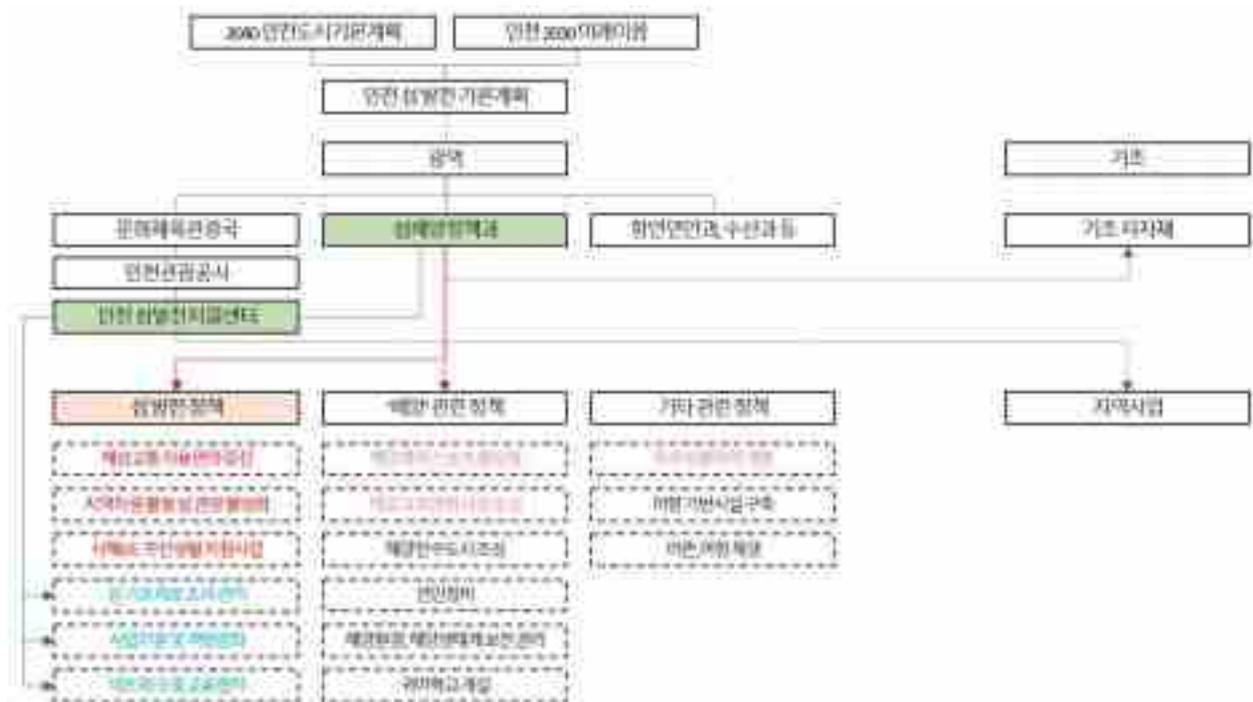
- 인천 섬발전지원센터는 “섬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의 안정적이고 전문화를 위한 통합 지원센터 구축”을 목표로 설립된 조직이므로 인천시 주요자원인 섬 발전을 위한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역할 확대 및 조직 확장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 섬발전지원센터는 인천관광공사가 위탁운영함에 따라 관광산업실 섬해양관광팀의 내부 조직으로 운영, 센터장1인을 포함하여 4인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음
 - 인천관광공사 관광산업실의 타 부서(센터)인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센터장(팀장) 포함 11인의 운영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하면 사업 추진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섬발전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및 조직 확장이 선행된 이후에는 전문가·시민단으로 구성된 사업모니터링 진행·사업추진컨설팅단 구성 등을 통한 정책환류 점검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수도권 접근성, 동북아 거점역할 수행에 유리한 입지, 교통·물류 이동에 적합한 기반시설(공항·항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도시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생태·문화·관광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의 지원확대와 사업추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인천광역시 정책 현황 분석결과 및 시사점

- ☞ 관련 정책의 영역(부문)적 측면의 경우, **‘섬’과 관련된 정책이 ‘해양’ 혹은 기타 분야의 관련 정책과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특히 각 영역별 사업의 기초나 내용이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낮음
- ☞ 현재 인천광역시의 섬 발전 관련 정책은 내용적 측면을 봤을 때 크게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라는 2개의 축으로 구분되는데, 이 둘이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어 경제/산업 관점에 치우쳐있고 **인문/문화 관점은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소프트 방식의 지역 활성화 필요)
- ☞ 보다 구체적으로, 인천 섬 발전 정책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의 경우 ‘주민’ 관련 내용은 의식주와 같은 **주민의 기초생활에 국한된 채** 다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관련 내용은 **지역 내부 발전과 외적 발전이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 정책 추진체계의 경우 아래의 그림처럼 명확한 **콘트롤 타워가 부재**해 각 정책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함. 특히 **인천 섬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섬(주민)’의 구심점 역할에 집중될 뿐, **‘집행/공급’ 영역의 매개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점, **연구/네트워킹 사업이 직접 지원사업과 긴밀히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 지역 섬 발전 정책사업의 **일부 영역만을 담당하는 포지션**이라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그림 3-25] 인천광역시 섬 발전 관련 정책 추진체계도



IV. 사례 검토

1. 전라남도 관련 정책
2. 경상남도 관련 정책
3. 충청남도 관련 정책
4. 시사점

- ❖ 국내 유인도서·무인도서 다수 보유한 전남·경남·충남의 섬 발전 정책·사업 확인, 추후 인천시 섬 발전 정책·사업 방향성 도출
- ✓ 2022년 행정안전부 전국 통계 기준, 국내 총 3,381개 섬이 확인되며 전국 시·도별 유인도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 58%, 경남 17%, 인천 8%, 충남 7%순이고, 무인도의 경우에도 전남 54%, 경남 15%, 충남 7%, 인천 4%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국내 유인도서·무인도서를 많이 보유한 전남, 경남, 충남의 섬 발전 관련 정책 및 주요 사업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섬 발전 정책·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추후 인천시 섬 발전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1. 전라남도 관련 정책

1) 섬 발전 관련 법령 및 계획

□ 전라남도는 섬 발전 관련 5개 조례제정, 섬 지역 발전 지원근거 마련

- 전남의 섬 발전 관련 조례는 「전라남도 섬 발전 기본 조례」 및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며, ‘섬 가꾸기’에 관한 조례가 섬 발전 기본조례 보다 먼저 제정되어 ‘섬 가꾸기’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이외 도서지역에 대한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섬지역 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표 4-1] 전라남도 섬 지역 지원 조례

구분	조례	제정 연도
섬 발전	「전라남도 섬 발전 기본 조례」	2021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6
도서지역 지원	「전라남도 도서지역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2020
	「전라남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2021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2019

□ 섬 가꾸기 지원 조례 및 섬 발전 기본조례를 근거로 섬 발전 지원 정책·사업 추진

- 전라남도는 「가고싶은 섬」가꾸기 10개년 계획(2015~2024)의 체계적 사업추진 기반마련을 위해 2016년 「전남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전남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설치·중간지원조직·보조금지원·사후관리·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본 조례는 목적·정의·타 조례와의 관계·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섬 가꾸기 위원회 설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중간지원 조직 운영·보조금·사후관리·포상을 명시 총11개 규정을 마련함
 -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섬 가꾸기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근거, 전라남도 차원의 섬 가꾸기 사업 재정지원 근거, 사업의 사후관리 지도·감독 의무 규정과 더불어 우수한 사업성과를 거둔 단체·개인에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라남도 섬 발전 기본 조례」는 전라남도 섬 발전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2021년에 제정, 섬발전종합계획 수립·실태조사·섬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섬발전지원센터 설치 등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됨
 -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섬 발전 기본 조례」를 근거로 전남 섬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 대표 섬 선정 및 세계적 명소 조성 위한 사업계획 및 투자유치 방안, 정부 섬 정책에 대응하는 전남도 전략 및 계획, 섬 유형별·발전부문별·권역별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제시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실태조사(제6조) 규정은 섬의 인구와 향로에 대해서는 매년, 섬이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기 실태조사 수립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0. 5.] [전라남도조례 제5845호, 2023. 10. 5., 일부개정]

제4조(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섬 가꾸기 추진전략 및 계획
 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3. 사업운영 및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섬 가꾸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섬 가꾸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지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섬 가꾸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섬 가꾸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섬 가꾸기 평가 및 사후관리
3. 그 밖에 효율적인 섬 가꾸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중간지원조직 운영)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의 효율적인 추진과 섬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
 2. 소득사업 발굴·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3. 섬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제9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사회적 경제 조직,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섬 가꾸기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간지원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섬 가꾸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사업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매년 사업성적을 평가하여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섬 가꾸기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군과 공무원, 섬 마을, 민간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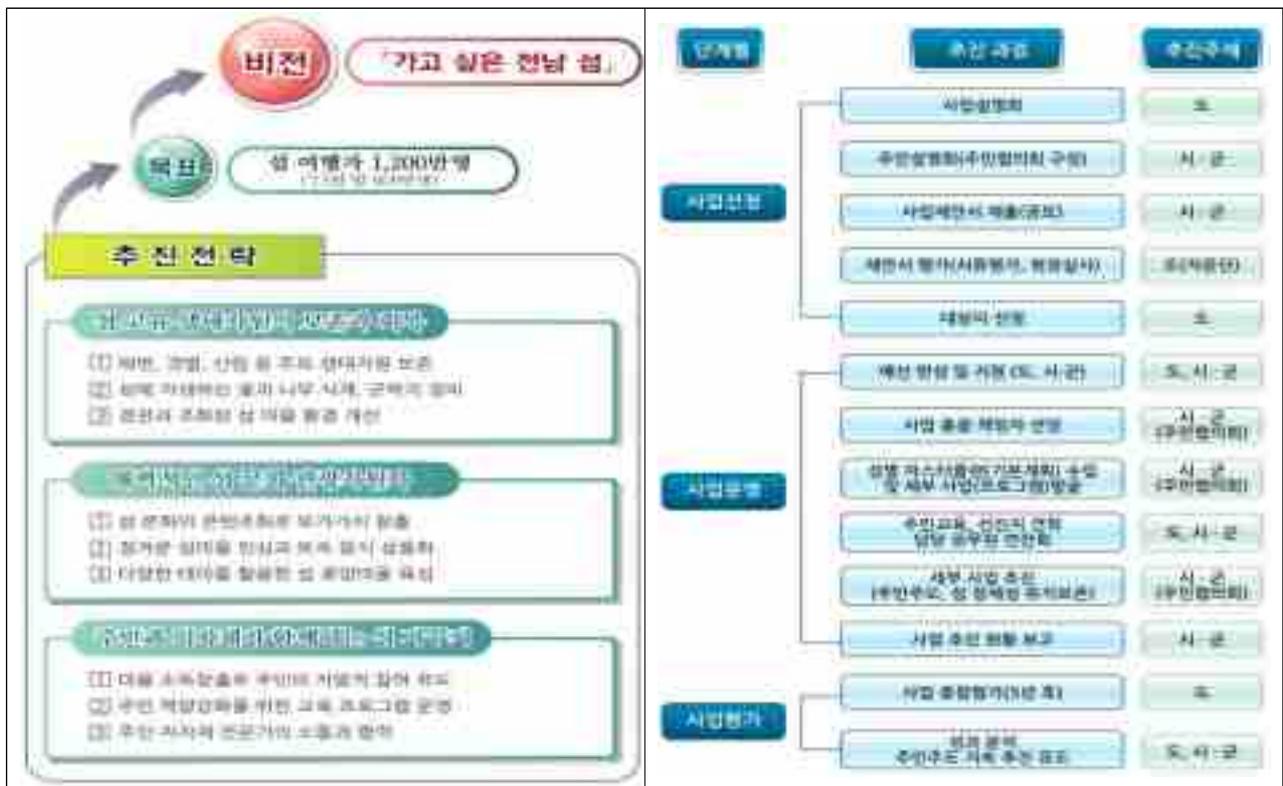
2) 섬 발전 관련 주요 사업

가. 「가고 싶은 섬」가꾸기 10개년 계획(2015~2024) 추진

□ 2015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추진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공조한 섬 행정 정책 진행

- 전라남도는 2014년까지 도서종합개발 등 섬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 2015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2015~2024)’을 수립, 주민과 함께 공조한 섬 정책 행정을 진행하기 시작함
-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가고 싶은 전남 섬」을 비전으로 섬 여행자 1,200만 명을 목표로 섬 고유 생태자원의 보존과 회복·매력적인 섬 문화관광자원화·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섬 가꾸기를 추진 전략을 10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함

[그림 4-1]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자료: 전라남도(2015),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2015~2024)」

□ 960억 예산·도내 24개 섬개발 추진, 전남도-시·도-자문위원단-주민협의회 사업추진의 주체별 역할 구분 명확, 사업주체간 유기적 관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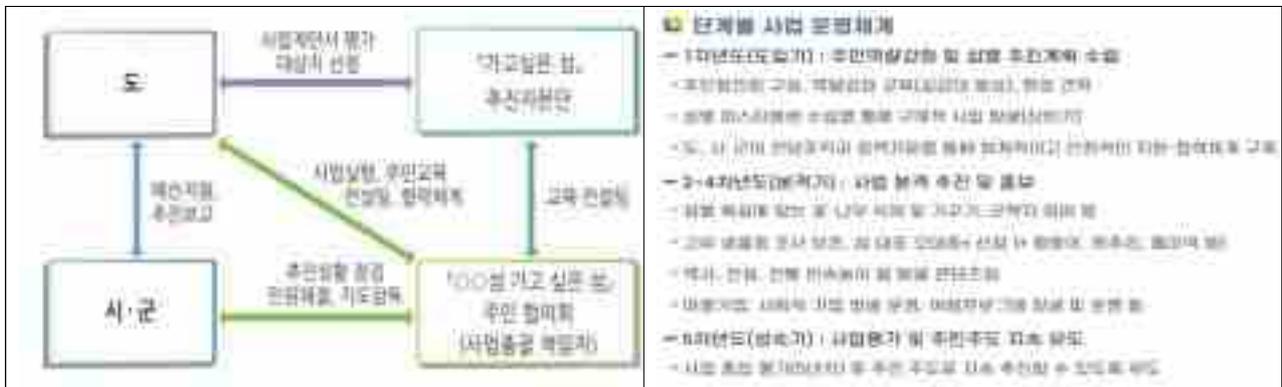
-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96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내 24개 섬개발을 추진하는 장기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2015년까지 6개섬을 선정 후 2016년부터 매년 2개의 섬을 공모 등을 통해 발굴·선정하여 섬개발 사업을 수행함
 - 사업 1단계는 2015~2019년으로 섬개발 추진예산은 섬당 약 40억 원이며, 2020~2024년에는 섬당 약 5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활용하여 섬별로 관광자원화 도모를 추진하는 주제를 선정, 마을식당, 마을펜션, 폐교·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경관 개선 및 환경정비, 섬 둘레길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마을기업 운영 등을 추진함
- 사업대상지는 주민제안 공모-가고 싶은 섬 가꾸기 추진 자문위원단 서류심사-현장실사 과정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함

- 사업운영은 전남도(정책방향 제시 및 예산지원)-시·군(섬별 사업 계획 수립·세부사업 발굴)-시·군 주민협의회(세부사업 추진)가 각각 사업진행의 주체로서 유기적으로 운영되었고, 가고싶은 섬 자문단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선정 사업지 주민협의회에 교육·컨설팅 역할을 수행함

□ 사업단계별 평가 및 컨설팅·모니터링 지속 추진을 통한 사업운영 효과성 제고 노력

- 섬 발전 단계를 도입기(1차년도)·본격기(2-4차년도)·성숙기(5차년도)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 모델을 제공하고, 사업 3년차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자문단 서류·현장 평가 수행하여 사업비 지원 규모를 결정함
- 사업 5년차 자문단평가 및 설문조사를 통한 종합평가 진행으로 사업성과 분석 결과에 따라 개별 섬 사후관리 방안 모색 및 성과·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함
- 사업추진 중에도 자문단 및 마을기업·사회적 기업의 사업 컨설팅 추진, 주민역량 강화 교육·모니터링과 더불어 지속적인 섬 홍보·여행프로그램 운영 등 마케팅을 통한 지속관리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그림 4-2] 전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 사업운영체계



자료: 전라남도(2015), 「가고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2015~2024)」

□ 섬개발 추진 이외에도 섬 자원DB구축·섬 여행 마케팅·섬여행서비스 개선 사업 운영

-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섬 관련 현황 및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 섬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함
- 효과적 섬 여행 마케팅의 추진을 위해 언론 홍보 이외에 섬 에세이 책자 제작, 섬 서포터즈 위촉·운영, 주기적 섬 사진전(사진대회)를 개최함
- 섬 여행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섬 여행 코디네이터 양성·운영 및 섬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전남도 섬 여행 전문가를 양성하고 섬 주민의 관광해설사화 교육을 진행함

□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도 차원의 섬개발 패러다임을 변경하여 주민참여 기반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점에서 성공적인 섬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음

-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섬이 가장 많은 전남도에서 개발중심의 섬 발전 계획을 ‘섬 가꾸기’로 전환했다는 점과 주민들이 과거 개발중심의 사고에서 새로운 섬 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평가됨
- 폐교, 화관 등 공공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주민 소득사업으로 활용하는 등 섬별 주제가 있는 차별화 된 사업발굴, 섬 인재 발굴 교육·사회적 기업설립 등 주민주도형 사업을 발굴·추진에 성공함

나. 기타 섬 발전 관련 주요 추진 사업

□ 전남 섬 관련 DB 온라인 서비스 제공 및 20인 미만 거주 섬 정주여건 개선 사업추진

- 전남도는 2016년에 전국 최초로 섬 자원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About 전남의 섬’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운영,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그래픽 정보포털 구축 및 광주 기상청 연계·기상기후 서비스를 제공함
- 전남도는 정부 도서개발사업에서 소외된 10인 미만 거주 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고취를 위해 2016년부터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을 추진, 2019년부터는 20인 이하 거주 섬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현재 10인 미만 거주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4-2] 전라남도 섬 발전 관련 추진 사업

사업	내용
전남 섬 관련 자료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 섬 자원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About 전남의 섬) · 전국 최초로 무인도를 포함한 모든 섬의 역사·생활문화·생태·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망라한 온라인 서비스 구축 · 섬 현황 정보 전달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About 전남의 섬’ 누리집을 그래픽 정보 포털로 개편 서비스 제공 · 광주 기상청과 연계한 가고 싶은 섬 홈페이지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작은 섬 큰 기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인 미만 거주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추진 ·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은 전라남도의 도주민을 위한 배려 시책. 도서개발사업과 같은 규모 있는 지원사업에서 빠진 작은 섬, 정주환경이 열악하고, 10인 미만 이 거주하는 섬 46개 해당

[그림 4-3] 전남 섬 자원 조사DB 온라인 정보서비스



자료: About 전남의 섬 홈페이지(<https://islands.jeonnam.go.kr>)

3) 섬 발전 지원조직

□ 섬의 효율적 정책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국 내 섬해양정책과 설치

- 전남은 섬의 효율적 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2018년 섬 관련 조직체계를 정비, 해양수산국 내 섬해양정책과를 설치하여 안정적 조직구조를 마련함
- 해양수산국은 섬 업무를 주관하는 정책팀으로 팀장1인 포함 주무관 4인으로 구성, 섬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해양수산국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5.25%가 책정되어 있으며, 해양수산국 내 섬 발전 지원을 담당하는 섬해양정책과는 전체 예산의 2.44%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4-3] 2023년 전라남도 섬 관련 예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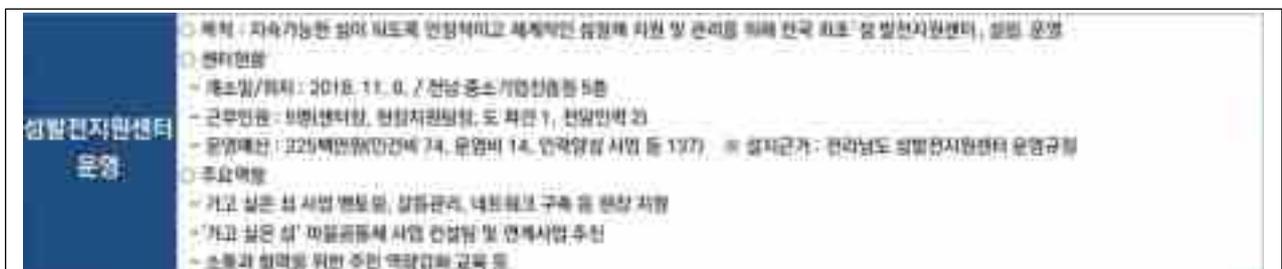
구분	예산액(천원)	비율(%)
전체예산	10,338,111,480	100.00
해양수산국	542,351,457	5.25
해운항만과	138,773,030	1.34
섬해양정책과	252,424,760	2.44
수산자원과	106,120,947	1.03
수산유통가공과	45,032,720	0.44

자료: 전라남도(2023),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조직별)

□ 2018년 전국 최초 섬발전지원센터를 개소, 섬 가꾸기 사업 정착·지속수행 추진을 위한 행정-주민 간 소통창구의 역할 수행

- 전라남도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지속 가능한 섬 개발에 대한 체계적 현장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를 개소함
- 전남 섬발전지원센터는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역량 강화와 주민 갈등 해소, 행정과 주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현장지원센터의 필요에 의해 조직됨
-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는 섬 가꾸기에 대한 구체적 현장 지원, 섬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및 여행상품 발굴, 섬 특산품 개발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설립 등 주민이 먼저 살고 싶고 여행자들은 가고 싶은 섬을 가꾸기 위해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전남 섬발전지원센터는 센터장 포함 5명으로 구성, 가고싶은 섬 멘토링·갈등관리·네트워크 구축, 마을공동체 사업 컨설팅·연계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함

[그림 4-4] 전남 섬발전지원센터 운영 사업 현황



자료: 전라남도(2021), 「전라남도 섬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연구」

2. 경상남도 관련 정책

1) 섬 발전 관련 법령 및 계획

□ 경상남도는 섬 발전·도서지역 지원 3개 조례 제정, 섬 지역 발전 지원근거를 마련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섬 발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섬 발전 정책 및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 그 외 섬 지역의 여객운임 지원 및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여 경상남도 섬 지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표 4-4] 경상남도 섬 지역 지원 조례

구분	조례	제정 연도
섬 발전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2019
도서지역 지원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지원 조례	2012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2022

□ 섬 발전 지원의 주요 추진 근거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 2019년에 제정된 「경상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경남 섬 발전 지원의 추진 근거로서 섬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실태조사, 섬 발전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센터 설치 등 총15개 규정을 근거로 경남도의 지원을 받아 정책·사업을 추진함
 - 종합계획 수립 규정을 통해 섬 발전에 대한 통일된 정책방향성 수립 의무를 정하고, 5년 마다 섬 보유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매년 섬 인구·항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규정함
 - 효율적인 섬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섬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섬 발전 정책의 자문을 위한 섬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본 조례는 ‘섬 발전 지원사업’(제8조) 규정을 통해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교육·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 섬 관련 홍보 및 발간 사업, 도서지역 간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업,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사업 등을 섬 발전 지원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3. 7. 6.] [경상남도조례 제5407호, 2023. 7. 6., 일부개정]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년 마다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자원 규모, 투자계획 및 조달방안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섬 발전 촉진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
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시장·군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섬이 보유한 자원을 실태조사하고 매년 섬의 인구 및 향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섬 발전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2.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
3. 섬 관련 홍보 및 발간 사업
4. 도서 지역 간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3에 따른 교통편의 증진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섬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섬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섬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섬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2. 섬 데이터의 관리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섬 개발사업의 지원
4. 섬 발전 관련 교류·협력 등
5. 그 밖에 섬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2021~2030)을 통해 정책·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 제시

-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경남 섬 발전에 관한 중장기 비전으로 ‘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을 제시, 2대 목표 ‘섬의 지속가능성 확보·섬의 가치 극대화’를 설정하고 있음
- 종합계획의 섬 개발 5가지 원칙으로는 섬 고유성 보존, 섬 주민 권리 보호, 경제적 번영 추구, 공동체 중심, 첨단기술 적용으로 설정하고, 3대 분야 섬생활 보장·국책사업 발굴·섬 산업 육성의 10대 전략 및 30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 섬 생활보장 분야는 섬 공동체 지속가능성 유지, 유인도시 유지 및 확대, 섬 지원 데이터 구축, 섬 환경 보호·보존으로 설정하고 국책사업 발굴 분야는 육지권 스마트섬, 사랑권 레저섬, 환산권 역사문화휴양섬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섬 산업육성 분야는 섬 수산업 경쟁력 강화, 섬 농업 육성, 섬 관광 경쟁력 강화를 제시함

[그림 4-5]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 전라남도(2021), 「전라남도 섬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연구」

2) 섬 발전 관련 주요 사업

□ 전남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벤치마킹한 ‘살고 싶은 섬 사업’ 추진, 3년간 30억 지원, 주민과 공조한 섬 발전 기본계획 마련 및 시행 추진

- 경남도는 전남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경남 섬만의 고유 가치를 발굴하여 섬 주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섬 조성을 위해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 정책 중심의 개발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앞에서 끌고 행정은 뒤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함
 -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주민과 공조한 섬 행정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이 추진되는 3년 간 총 6학기제 섬 주민대학과 워크숍을 운영하도록 함
-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매년 2개 섬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섬당 30억원씩(도비 50%, 시·군비 50%), 3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통영 두미도와 남해 조·호도가 선정되었고, 2021년 통영 추도와 고성 와도가 선정되어 섬 가꾸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섬은 섬 발전 자문위원·전문가·관계자·주민 등과 함께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견수렴·설명회·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 마련해야 함
 - 2020년 사업에 선정된 통영 두미도는 섬인프라 구축사업·섬 공동체 활력사업·섬 살이 활성화 사업 등 11개 세부추진 계획 수립, 남해 조·호도는 섬자원 발굴 및 공간조성·섬 기초 정주여건개선·섬과 외부관계망 구축 등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설정함
 - 2021년 사업에 선정된 통영 추도는 살고 싶은 섬으로 융성한 마을 조성을 목표로 공유센터 조성·견고 싶은 섬

만들기 프로젝트·테마숲 조성 등 9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세웠고, 고성 와도는 일상 회복을 위한 섬 조성을 목표로 테마공원 조성·마을환경 정비·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11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세움

[표 4-5] 경남 '살고싶은 섬' 선정 도서(섬)별 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통영 두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 살기 좋은 섬, 함께 하는 섬, 지속 가능한 섬 · 주요 내용 : 섬 인프라 구축사업(섬 살이 지원 공간 사업, 섬 옛길 복원사업, 섬 경관 개선사업, 통합 브랜드 개발 등), 섬 공동체 활력 사업(주민 역량강화 사업과 마을사업 상담 등), 섬 살이 활성화 사업(외부 청년 대상 두미도 한 달 살이 등) 3개 사업에 11개의 세부사업 추진
남해 조·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 함께 가꾸는 새섬과 범섬, 섬의 매력, 일상, 사람을 연결하는 섬 · 주요 내용 : 섬자원 발굴/공간조성(마을 브랜딩 안내시스템 제작, 공공미술 프로젝트, 바다체험시설 조성, 어가체험살이 시설 조성 등), 섬 기초 정주여건 개선(마을채색 및 빈집 정비, 섬 관문 경관 개선, 마을 모빌리티 구축 등), 섬과 외부 관계만들기(섬식당 조성 및 섬살이 워크샵, 관계맺기 플랫폼 구축 등),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마을관리 시스템 구축, 마을소득사업 및 경영 관련 교육 등)
통영 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어획량 감소, 문화복지 소외로 활력을 잃어가는 추도를 살고 싶은 섬으로 융성한 마을 조성 · 주요 내용 : 마을창고 새단장·주민 문화복지를 위한 공유센터 조성, 옛길·등산로 정비로 걷고 싶은 섬 만들기 프로젝트, 빈집 활용 섬 살이 프로젝트, 소나무·동백나무 군락지 활용 테마숲 조성, 지속가능한 소득사업을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협동조합 설립·운영 등 9개 세부사업 추진
고성 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주민과 관광객들이 섬과 치유를 통한 일상 회복을 위한 섬으로 조성 · 주요 내용 : 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테마공원 조성, 숲길 및 힐링존 조성, 친수공간 조성, 마을환경 정비, 마을 지원센터 및 창고·어항 정비,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 10개 세부사업 추진

[그림 4-6] 경상남도 남해 조·호도 살고싶은 섬 기본계획



자료: 양지연구소 홈페이지 (<http://yangji.space/company>)

3) 섬 발전 지원조직

□ 효율적 섬 발전 정책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국 내 섬어촌발전과 중심 정책 추진

- 경남도는 효율적 섬 발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국 내 섬어촌발전과를 중심으로 섬 발전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섬어촌발전과는 섬발전, 어촌지원, 해양레저, 어촌개발, 어촌뉴딜로 구분하여 섬 발전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해양수산국의 예산은 경남도 전체 예산의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국에서 섬 발전 지원을 담당하는 섬어촌발전과는 전체예산 중 1.04%의 예산으로 운영됨

[표 4-6] 2023년 경상남도 섬 관련 예산규모

구분	예산액 (천원)	비율(%)
전체 예산	12,100,784,284	100.00
해양수산국	293,056,830	2.73
해양항만과	60,876,861	0.57
수산자원과	81,239,845	0.76
섬어촌발전과	126,036,679	1.17
수산자원연구소	9,281,097	0.09
수산안전기술원	11,059,916	0.11
항만관리사업소	4,562,432	0.04

자료: 경상남도(2023),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조직별)

- 섬어촌발전과의 2023년 섬 발전 지원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섬의 날 행사’ 지원, ‘섬 발전·지원’으로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 섬발전사업·LPG 시설 구축 사업과 더불어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예산을 책정함

[표 4-7] 경남 섬어촌발전과 2023년 ‘섬 발전 및 지원 분야 예산’ 항목

구분	예산액 (천원)
어촌발전과 전체	126,036,679
어촌 발전 동력을 위한 어촌지원(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24,675,963
어촌발전사업 추진	65,775
어촌발전사업 업무 추진	35,775
섬의 날 행사	30,000
섬 발전 및 지원	23,610,188
섬발전사업(성장촉진지역)	681,000
섬발전사업(특수상황지역)	22,568,000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	361,188
섬 발전 및 지원	1,000,000
살고 싶은 섬 가꾸기	1,000,000

자료: 경상남도(2023),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필요항목 추출

□ 조례에 섬발전지원센터 설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조직되어 있지 않음

- 2019년에 제정된 「경상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섬발전지원센터 설치(제13조)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섬발전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경남도 섬 발전 지원 정책 및 사업은 해양수산국 내 섬어촌발전과가 섬 발전 지원에 대해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여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3. 충청남도 관련 정책

1) 섬 발전 관련 법령 및 계획

□ 충청남도는 섬 발전·도서지역 지원 3개 조례 제정, 섬 지역 발전 지원 근거를 마련

- 충청남도는 섬 발전 관련 조례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019년에 제정, 섬 가꾸기 종합계획수립·섬가꾸기사업·중간지원조직·보조금·사후관리·자문위원회·포상 등 총 16개의 규정을 마련하여 섬 가꾸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
- 도서지역 지원에 대한 자치법규로는 해상교통 편의증진 지원·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이외 섬과 바다를 주제로 2026년 개최 예정인 ‘섬 국제 비엔날레’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지원 조례를 2023년 제정, 조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표 4-8] 충청남도 섬 지역 지원 조례

구분	조례	제정 연도
섬 발전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도서지역 지원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2022
기타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2023

□ 섬 발전 지원의 주요 추진 근거 「충남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19년에 제정된 「충남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충남 섬 발전 지원의 추진 근거로서 섬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사업지원, 중간조직 운영, 보조금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정책·사업을 추진함
- 본 조례는 ‘섬 가꾸기 사업’을 섬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그 밖에 도지사가 섬 가꾸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법문에 명시하고 있으며, 섬 가꾸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직·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10.] [충청남도조례 제5373호, 2023. 3. 10., 일부개정]

제4조(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섬 가꾸기 추진전략 및 사업 계획
 2. 자원조달 및 투자계획
 3. 사업운영 및 평가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섬 가꾸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섬 가꾸기 사업) 도지사는 섬 가꾸기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2.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3. 그 밖에 도지사가 섬 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간지원조직 운영)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의 효율적인 추진과 섬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 조직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
2. 사업 발굴·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3. 섬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4. 그 밖에 섬 가꾸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섬 가꾸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사업목적에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2021~2025)을 통해 정책·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제시, 「충남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근거 5년 단위 섬 가꾸기 종합계획 마련

○ 섬 가꾸기 종합계획은 연륙되지 않은 유인도 29개와 격렬비열도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섬 가꾸기의 종합 정책방향을 제시함

- 충남도 섬의 유형화 및 발전 방향 수립.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여건변화 대응성, 주민의사 반영성, 섬 자원 특성 반영성을 기준으로 설정함(관광클러스터형, 주민주도형, 원격섬테마형, 수도권대응형, 생태관광형, 모듬살이형, 국가주요자원형)

[표 4-9]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32개 섬(연륙되지 않은 유인도 29개, 무인섬 3개) * 유인섬 29개 (보령시 16, 서산시 4, 당진시 4, 서천군 1, 홍성군 1, 태안군 3), 무인섬 3개(격렬비열도, 공시도, 대방이섬) · 시간적 범위 : 20년간(단기 '21년~'25년, 중장기 '26년~'40년)
계획 비전	· 지속가능한 “더 행복한 충남 섬”
계획 목표	· 누구나 살고싶은 안전하고 안정된 일상 · 희망을 꿈꾸는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 · 누구나 가고싶은 미소가득한 정 · 자연이 빛은 아름답고 쾌적한 품위있는 예술
발전방향	· 관광 클러스터형, 주민주도형, 원격섬 테마형, 수도권 대응형, 생태관광형, 모듬살이형, 국가 중요자원형
주요 핵심사업	· 스마트 에너지 자립섬 조성, 섬 행복센터 건립 운영, 섬 전문 생물자원 연구센터 및 스마트 팜 조성, 양식자원 복합단지 조성, 섬가꾸기센터 조성 및 운영, 섬 향토 음식 개발 및 상품 호, 충남 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 본 계획은 4개 부문 81개 사업을 계획, 주요 핵심사업은 스마트 에너지 자립섬 조성, 섬 행복센터 건립 운영, 섬 전문 생물자원연구센터 및 스마트 팜 조성, 양식자원 복합단지 조성, 섬가꾸기센터 조성 및 운영, 섬 향토음식 개발 및 상품화, 충남 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섬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교류 플랫폼 조성 및 섬 진흥원 충남지부 조성 등 공동체 교류기반 사업과 매력 있는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섬 생활문화·역사문화 기반 콘텐츠 구축을 통한 관광상품 활성화 방안 등을 계획함

[그림 4-7]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자료: 전라남도(2021), 「전라남도 섬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연구」

2) 섬 발전 관련 주요 사업

□ 충남지역 해양지역레저관광지 ‘오섬 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

- 충청남도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9년 동안 민간 투자를 포함해 총 1조 1200억여 원을 투입하여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를 비롯해 삼시도·고대도·장고도·효자도 등 5개 섬에 ‘해양레저관광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시범모델 조성을 위해 해수부-충남도-보령시-대명소노그룹이

민관 업무협약을 추진함

- 충남도와 보령시 등은 2024년부터 원산도·삽시도·고대도·장고도·효자도 5개 섬에 리조트를 비롯해 해양레저 시설 등 각종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레포츠센터와 헬스케어 복합단지, 아트 아일랜드, 선셋 아일랜드 바다역 등도 조성예정임
 - 원산도는 원셋(One Set) 아일랜드로, 해양레저와 생태, 예술, 치유, 청춘, 가족의 가치가 결합된 오섬 아일랜드의 중심 섬 조성, 삽시도는 예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트 아일랜드로, 고대도는 치유 아일랜드로, 장고도는 청춘 아일랜드로, 효자도는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족 아일랜드로 조성 추진계획을 세움
- 추진과제로는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원산도 복합 마리나항 건설, 원산도 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원산도 갯벌생태계 복원, 삽시도 아트 아일랜드 조성 등 9개 사업계획을 제시함

[표 4-10] 충남도 '오섬 아일랜드' 조성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표	· 원산도·삽시도·고대도·장고도·효자도 5개 섬 일대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추진
사업기간	· 2023년 ~ 2030년 (약9년)
사업예산	· 1조 1254억 원
추진현황	· 해수부-충남도-보령시-대명소노그룹 민관협약 체결 * 4개 기관은 콘텐츠 개발, 시설 도입, 민간투자 추진, 지역 민원 해결,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상호 협력
추진과제	·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원산도 복합 마리나항 건설, 원산도 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원산도 갯벌생태계 복원, 삽시도 아트 아일랜드 조성,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선셋 아일랜드 바다역 건설, 원산도 대명소노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원산도·삽시도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 등 9개 사업

자료: 충청남도 보도자료(2022.09.14.), "세계가 찾는 '오섬 아일랜드' 만든다"

□ 2026년 국내 최초 섬 주제 문화예술 행사인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추진

- 충남도는 섬을 모티브로 역사·문화·예술·환경이 융합된 새로운 문화예술산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를 추진하고 있음
-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를 위해 2023년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보령-원산도 외 4개 섬 중심으로 행사개최를 추진함에 따라 지역 섬의 특성을 파악하여 섬 국제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3) 섬 발전 지원조직

- 충남도는 섬 관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조직 정비, 해양수산국-해운항만과-섬발전팀의 세부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섬 발전 지원에 대한 적극 행정을 수행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해양수산국의 예산은 충남도 전체 예산의 2.47%를 차지, 해양수산국 내 섬발전 지원을 담당하는 해운항만과는 전체예산 중 0.69%의 예산으로 운영됨

[표 4-11] 2023년 충청남도 섬 관련 예산규모

구분	예산액 (천원)	비율(%)
전체예산	8,204,500,000	100.00
해양수산국	202,995,455	2.47
해양정책과	42,399,001	0.52
해운항만과	56,890,214	0.69
수산자원과	76,107,911	0.93
어촌산업과	27,598,329	0.34

자료: 충청남도(2023),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조직별)

- 2023년 기준 충남도 해운항만과의 섬 발전 지원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연안정비사업 지원’, ‘도서 발전 촉진’에 예산을 책정, 섬 지역 주변 연안 정비 및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섬 조성,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

[표 4-12] 지역별 섬 발전 분야 정책·계획·예산·조직·사업 비교

구분	인천	전남	경남	충남
자치 법규	섬 발전 지원조례(2019년)	섬 발전 기본조례(2016년) 섬 가꾸기 지원조례(2021년)	섬 발전 지원조례 (2019년)	섬 가꾸기 지원조례 (2019년)
기본 계획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 (2022~2026)	가고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 (2015~2024)	섬 발전 종합계획 (2021~2030)	섬 가꾸기 종합계획 (2021~2025)
	모두가 살고싶은 지속가능 한 섬	가고 싶은 전남 섬	살고싶은 섬, 가고싶은 섬	지속가능한 “더 행복한 충남 섬”
	살고 싶은 섬, 삶의 터전인 섬, 지속가능한 섬	섬여행자 1,200만명 목표	섬 지속가능성 확보, 섬의 가치 극대화	안정된 일상, 활기차고 풍요로운 섬, 미소가능한 섬, 쾌적·품위있는 예술섬
섬 정주환경 개선, 섬 지역 경제기반구축, 교통수단 다변화 ·복합레저 섬 조성	섬 고유 생태자원 보존/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 관광 자원화, 주민과 지자체 협력 섬 가꾸기	섬 생활보장, 국책사업 발굴, 섬 산업육성	스마트 에너지 자립섬 조성, 섬 행복센터 건립, 섬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예산 (‘23년 기준)	전체예산 대비 해양항공국 2.50%, 섬해양정책과 0.65% (65,522백만 원)	전체예산 대비 해양수산국 5.25%, 섬해양정책과 2.44% (252,425백만 원)	전체예산 대비 해양수산국 2.42%, 섬어촌발전과 1.04% (126,037백만 원)	전체예산 대비 해양수산국 2.47%, 해운항만과·어촌산업과 1.03% (84,489백만 원)
조직	본청 섬해양정책과, 인천 섬발전지원센터	본청 섬해양정책과, 전남 섬발전지원센터 (섬해양정책과 소속)	본청 어촌발전과	본청 해운항만과, 해양정책과
추진 사업	수도권 대표 해양교육문화 거점 조성, 크루즈 및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명소화, 섬관광 인지도 제고, 음악회, 섬포털 구축 등)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중장기), 도내 24개 섬개발 추진(매년2개섬 선정), 960억 예산투입, 사업단계별 성공모델 제시·체계적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사업 주체간 유기적 관계 유지로 효과성도모	살고싶은 섬(3년), 매년 2개섬 선정 섬당 30억씩 3년간 지원(도비50%, 시군비 50%), 선정 섬은 전문가·자문위원·관계자 주민 등과 협의한 기본계획을 마련 및 추진	오섬 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2023~2030), 9년간 민간 투자 포함 총 1조 1,200억 투입, 원산도 비롯 5개 섬에 해양레저관광지 조성, 해수부/충남도/보령시/대명 소노그룹 민간협약 추진완료
	섬 기초자료 조사·관리, 섬특성화 사업지원, 섬 네트워크 교류협력 지원			2026년 섬 국제비엔날레 추진 예정

4. 시사점

□ 지역별 섬 발전 지원조례를 근거로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함

- 전남도·경남도 지역은 「섬 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통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충남은 「섬 가꾸기 지원조례」를 통해 섬 발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전남도는 섬 발전과 관련하여 2개의 조례(「섬 가꾸기 지원조례」, 「섬 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정교한 섬 발전 지원 정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전남도는 2016년 가장 먼저 「섬 가꾸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섬 지역 개발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 사업인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
- 전남도와 경남도는 「섬 발전 지원 조례」에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여 매년 섬 인구·향로 조사 실시 및 5년 마다 섬 보유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의무를 명시, 섬 인구·향로·생태환경에 대한 DB 구축 섬 발전 정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기반을 마련함
- 전남도와 충남도는 「섬 가꾸기 지원조례」를 규정하여 섬 자원 보존, 섬 지역 공동체 활성화, 관광여건의 종합적·체계적 개선을 통해 섬 주민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정주개선·섬 산업육성·관광활성화 등 섬 지역여건 맞춤형 중기·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함

- 전남도·경남도·충남도 모두 섬 발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중기·장기 섬 발전 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전남도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가고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을 통해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추진전략, 추진과정, 추진주체별 역할, 사업단계별(도입기·본격기·성숙기) 추진 모델, 평가 및 환류체계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경남도는 섬 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섬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섬 가치의 극대화 2대 목표 설정,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섬 산업육성·스마트 섬 조성 등 주요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함
- 충남도는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유인·무인도서 환경 조성을 위한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관광활성화·자연생태보존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함

□ 섬 발전을 위한 지역별 예산은 비슷한 수준, 인천시·전남도는 섬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함

- 2023년 기준 섬 발전 정책추진을 포함하는 시·도 본청의 해양수산물·해양항공국의 편성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2.5%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이고, 해양수산물·해양항공국 내 섬 발전 지원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지역별 과는 시·도의 섬지역 여건에 맞춰 전체 예산의 1% 이내의 수준으로 섬 지역 발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함
- 인천시와 전남도는 「섬 발전 기본조례」를 근거로 섬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섬 발전 정책사업 추진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경남도의 경우 「섬 발전 기본조례」에 섬 발전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두었으나 아직 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지 않고, 충남도는 조례에 섬발전지원센터 규정이 부재함

□ **전남도 성공적인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 경남도가 벤치마킹하여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 충남은 섬 활용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함**

- 전남도는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9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2개의 섬을 선정·개발 추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도-시·군-자문단-주민협의회 각 주체가 공조한 섬 행정 정책을 지원, 사업단계별 추진 모델을 제시하고 평가·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성공적인 섬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남도는 전남도의 섬 발전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살고싶은 섬' 사업을 추진, 해당 사업은 매년 2개의 섬을 선정하여 3년간 30억(도비 50%, 시·군비 50%)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에 선정된 섬은 전문가·자문위원·섬 주민 등 전문가 집단과 섬 이해관계자가 협의하여 3년간의 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시행하도록 사업을 설계, 섬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충남도는 섬 발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단계로 2023년부터 충남도내 원산도를 포함한 5개 섬에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하는 '오섬 아일랜드 조성사업'과 2026년 개척을 목표로 '2026년 섬 국제비엔날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섬 발전의 체계성 도모를 위한 자치법규 보완 필요**

- 「섬 발전 지원 조례」에 매년 섬 인구·향로 조사 실시 및 5년 마다 섬 보유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무 규정을 마련, 섬 인구·향로·생태환경에 대한 DB 구축 섬 발전 정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섬 발전 지원 조례」에 실태조사 규정마련을 통해, 현재 인천 섬발전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섬 기초자료 조사·관리' 사업의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음
- 「섬 가꾸기 지원조례」 제정으로 섬 자원의 보존, 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관광여건의 종합적·체계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섬 주민의 소득증대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섬 발전의 효과성 도모를 위한 지속성있는 중장기 계획마련 및 사업추진 필요**

- 국내 섬 발전 지원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추진내용에 착안하여 섬 발전의 효과성 도모를 위한 중장기 섬 발전 계획의 마련과 시 차원의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함
- 인천시 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시 맞춤형 '섬 가꾸기 계획' 수립 추진과 중장기 사업추진 필요, 계획 수립 시 사업선정·운영·평가 단계별 추진과정 설계 및 추진 주체별 역할 설정·단계별 추진 모델 제시·평가 및 환류체계 명시 등 세부화된 계획 마련 필요
 - 인천형 섬 가꾸기 계획 및 사업 추진 시 인천시 섬발전지원센터가 행정실무자 - 섬 지역 관계자 - 섬 지역민 간 의사소통 및 주민 역량강화, 주민 갈등 해소 등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음

❖ 전남 지역 사례 검토 결과 및 시사점

- ☞ 일찍이 다도해로 유명한 권역인만큼 섬 관련 정책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섬 발전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2.44%로 매우 높음(인천광역시 0.65% 수준)
- ☞ 지역 내 한국섬진흥원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인천광역시와 함께 유일하게 ‘섬발전지원센터’를 운영 중임. 이때 전남의 섬발전지원센터는 인천시와 달리 섬해양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짐. 그러나 역설적으로 ‘섬발전지원센터’와 ‘섬해양정책과’의 역할 경계가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음 (조례에서 천명하고 있는 섬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은 인천시와 전남도가 매우 유사함)
- ☞ 무엇보다 ‘거주지’로서의 섬과 ‘방문지’로서의 섬이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ex. 주민과 함께 하는 섬 가꾸기를 진행하되, 외부인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꾸기가 추진됨)

[표 4-13] 인천-전남 섬 발전 관련 조례 비교

구분	인천	전남
법규명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전라남도 섬 발전 기본 조례
제정일	2021.11.08.	2021.12.23.
섬발전지원센터 관련 내용	<p>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p> <p>① 시장은 섬 마을의 자립기반 마련 등 섬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섬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2. 주민역량강화 3. 섬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4. 사업 지원 5. 네트워크 및 교류 협력 등 6. 그 밖에 섬 발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하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섬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p> <p>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섬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섬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섬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2. 섬 데이터의 관리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섬 개발사업의 지원 4. 섬 발전 관련 교류·협력 등 5. 그 밖에 섬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p>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V. 의견수렴

1. 주민 의견수렴
2. 관계자 의견수렴

1. 주민 의견수렴

1) 조사 개요

[표 5-1] 주민 의견수렴 개요

구분	내용
대상	인천 내 섬 거주민 9명 ('인천 섬 마을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 주민 대상) * 덕적도 2명, 소무의도 2명, 신시모도 3명, 자월도 1명, 장봉도 1명
일시	2023.12.08.(금)
방법	대면 조사 (간담회 방식)
내용	응답자 특성, 생활편의 만족도 및 개선방안, 문화/여가 만족도 및 개선방안, 공동체 만족도 및 개선방안, 지역 이미지 및 분위기 관련 의견

[표 5-2] 주민 의견수렴 조사지 설계

부문	문항	응답	내용(목적)
응답자 특성	성별, 나이, 거주지역, 직업	선택형	· 응답자 인구통계특성 파악
I. 생활 편의	섬 생활 만족도	5점 척도	· 정주환경 만족도 파악
	불편사항 및 해결방안	서술형	· 교통수단 부족, 휴식공간 부족 등 일상생활 관련 핵심 이슈 파악
II. 문화/여가	문화/여가 활동 만족도	5점 척도	· 섬에서의 문화적 삶 수준/인식 파악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	서술형	· '문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민 의견 파악
III. 공동체	지역 공동체성(관계 깊이)	5점 척도	· 주민의 지역 소속감 및 멤버십 수준 파악
	공동체 활성화 방안	서술형	· 관계성 증진을 위한 주민 수요 파악
IV. 지역 이미지/분위기	거주 섬의 특징(내부 이미지)	서술형	· '살고 싶은 섬'에 대한 주민 인식 파악
	외부 이미지	서술형	· '찾고 싶은 섬'에 대한 주민 인식 파악
	이미지 개선방안	서술형	· 주민이 생각하는 지역 이미지 개선방안 파악

2) 조사 결과

[표 5-3] 주민 의견수렴 결과

구분	내용 (5점 만점)	
생활편의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여건 개선 (교통수단 확충, 관광객 접근성 제고 관련 교통환경 조성(통행 제한 규정 완화 등)) · 수도공사 필요 (원활한 식수 공급) · 의료환경 개선 (병·의원 및 약국 확충) · 교육환경 개선 (자녀 교육) · 일손 부족 문제 해결 (젊은 인력 필요)
문화/여가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인프라 확충 필요 (절대적인 수 부족 및 노후화 심각) ·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주민 문화 프로그램 확보 필요
공동체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 리더 양성 필요 · 생산적 소통문화 정립을 위한 교육 필요 · 원주민과 이주민 간 소통 증진 프로그램 필요 · 환경 이슈 등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 여건 조성
지역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이미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지역,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성, 긍정적 주민 인심 등 · [외부 이미지]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 낙후된 관광인프라, 불편한 교통, (일부 섬에 존재하는) 배타적 태도 등 · [기타] 섬 브랜딩 및 홍보 확대 필요, 지역 이기주의 극복 필요

□ 가장 시급한 부문은 기초생활 인프라, 가장 열악한 부문은 문화/여가 인프라로 인식

- 응답자들은 기초생활 전반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특히 교통 불편에 대한 해결 수요가 가장 크게 나타남. 교통은 지역 내 이동과 내륙-섬 이동을 모두 아우르고 있으며, 이는 주민 생활편의 차원과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른 지역 활성화를 함께 기대하는 심리로 분석됨
- 생활편의 만족도가 3.6점, 공동체성 만족도가 3.0인데 비해 문화/여가 부문 만족도는 2.8로 가장 낮게 나타남. 특히 응답자의 상당수가 '문화/여가생활'의 범위 자체를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여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여가생활의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 특색 발굴 및 강화, 지역 브랜드 정립 및 홍보 확산에 대한 필요성 강조

- 응답자는 인천 섬의 특징으로 '아름다움', '깨끗함', '좋은 인심'을 꼽고 있으며, 섬에 대한 외부 이미지를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음 (노후도, 매력 요인 부족 등)
-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인천 섬 브랜딩 및 홍보 확대', '지역 이기주의 극복 및 올바른 소통문화 확산' 등의 대안을 제시함

2. 관계자 의견수렴

1) 조사 개요

[표 5-4] 관계자 의견수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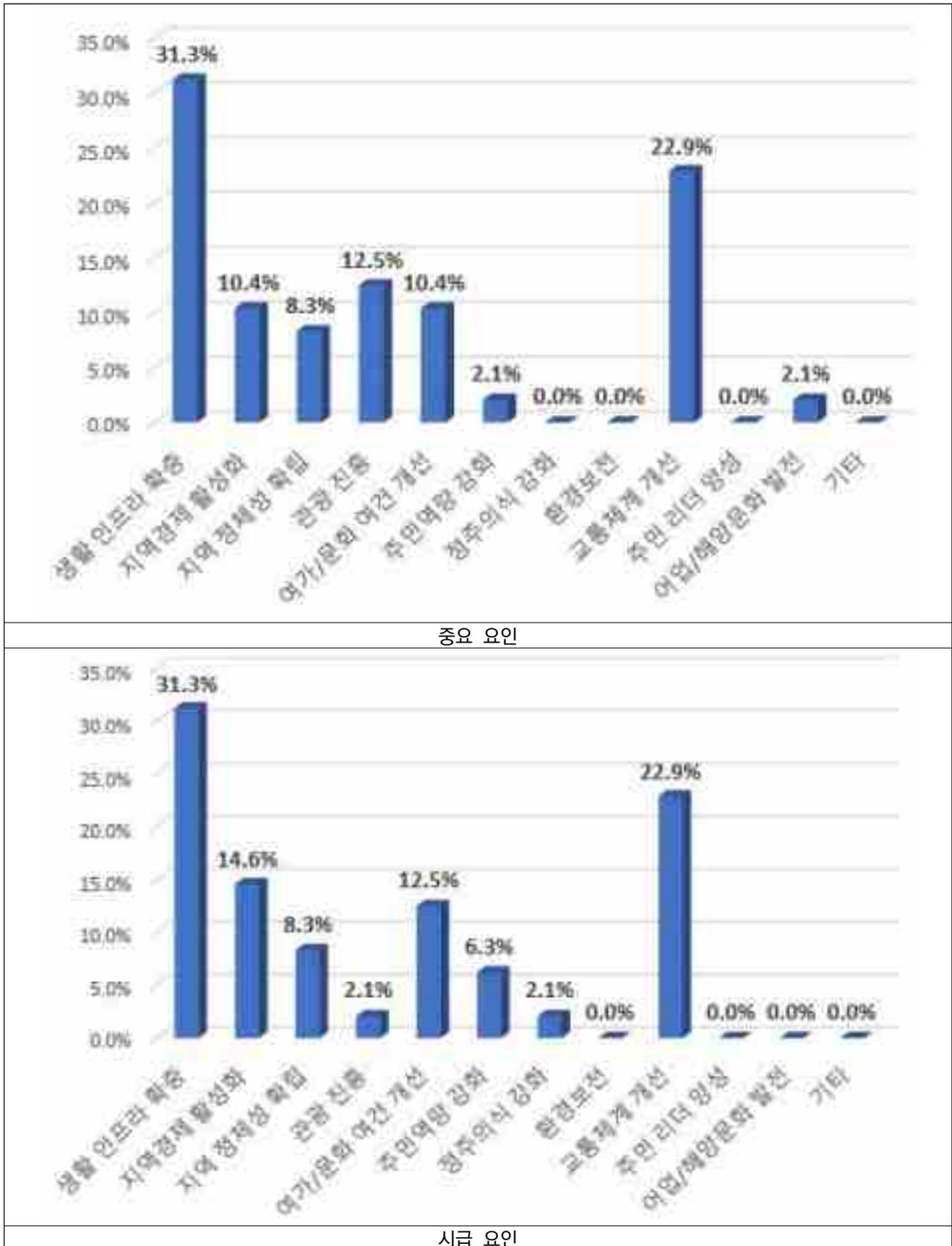
구분	내용
대상	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내 섬 발전 관련 사업 담당 공무원 24명
일시	2023.11.30.(목)~12.06.(수)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서면조사
내용	응답자 특성, 인천 섬 발전 관련 중요 요인과 시급 요인, 섬 발전 관련 주요 이슈, 섬 발전 정책 평가 및 보완사항, 기본계획 내 과제/사업에 관한 인식

[표 5-5] 관계자 의견수렴 조사지 설계

부문	문항	응답	내용(목적)
응답자 정보	이름, 지역, 소속 및 직위	선택형	· 응답자 인구통계특성 파악
인천 섬 관련 이슈	인천 섬 발전 관련 가장 중요한 요인 (중요도)	선택형	· 인천 섬 발전과 관련된 궁극적/본질적 요인 파악
	인천 섬 발전 관련 가장 시급한 요인 (시급도)	선택형	· 현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인천 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요인 파악
	섬 발전 관련 핵심 이슈	서술형	· 정책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인천 섬 발전 관련 핵심 이슈 파악
현 정책 평가	현 인천시 정책 만족도	5점 척도	· 시 정책의 적절성 및 효율성 파악
	현 인천시 정책 보완 필요사항	서술형	·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 파악
추진과제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 내 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도	5점 척도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41개 과제의 중요도와 시급도 개별 평가
추가 의견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 이외의 필요 과제	서술형	· 기본계획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중 인천 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조사 결과

[그림 5-1]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인천 섬 발전의 중요 요인 및 시급 요인 (n=24)



□ 생활 인프라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시급한 문제로 인식

-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인천 섬 발전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활 인프라 확충'(31.3%), '교통체계 개선'(22.9%), '관광 진흥'(12.5%), '여가/문화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8.3%) 순으로 나타남
- 인천 섬 발전 관련한 '가장 시급한 요인' 또한 '생활 인프라 확충'(31.3%)과 '교통체계 개선'(22.9%)이 가장 많이 거론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14.6%)와 '여가/문화 여건 개선'(12.5%)이 뒤를 이음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인천 섬 발전 관련 주요 이슈]

- ☞ (접근성) 인천시의 경우 가까운 덕적, 자월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 입도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나, 서해5도의 경우 최소 2~4시간이 소요되며 이마저도 한 번에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임에 따라 주말·공휴일에 가려고 해도 어려움. 또 기상 상황에 따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임. 아울러 인천시민의 경우 승선 티켓 가격을 할인받지만 외부 주민의 경우 티켓 가격도 저렴한 편은 아니고 지자체별로 관광을 내세우며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비해 접근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인천 지역 섬 관광을 올 이유가 굳이 있어 보이지 않음
- ☞ (교통) 여객선 운항횟수 적어 주민과 관광객 입출도 여건 열악. 다리 건설 필요. 해상택시 보급, 친환경 요트 코스 개발 등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 필요
- ☞ (인구/방문) 젊은 층을 섬으로 유인하기 위한 일자리가 없음. 주민 의료 필요 시 보건소 및 육지 병원 이용해야 해서 고령 귀향자 유인 어려움. 정주여건 확보 필요. 관광자원 부족.
- ☞ (지역성) 주민과 사업주체 간 의견 대립(이견 다툼), 개발방향과 지역정체성이 사라진 난개발 진행. 섬마다의 정체성과 개성 확보 필요. 폐가 등 유휴자원 활용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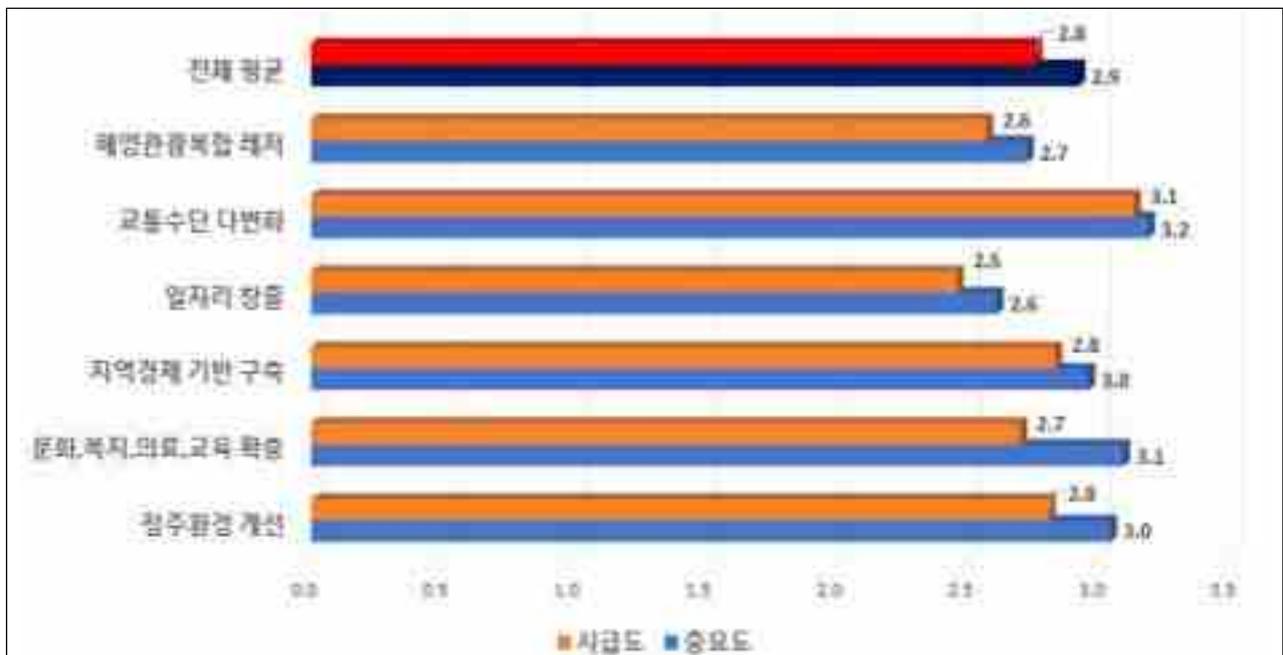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인천 섬 발전 정책 보완 방향]

- ☞ (방향) 인프라 부족한 섬의 인구 소멸은 순리이므로 경쟁력 있는 섬 집중 개발 필요
- ☞ (정책적 가치) 대표 정책 선택 및 역량 집중(집중도와 집행력 제고), 인천시 정책 중 '섬 발전 관련 정책'의 중요성 제고(공무원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 선결), 정책 홍보 확대
- ☞ (교통/접근성) 배에 의존하는 현재 운송수단 방식을 좀 더 다각화하거나 빠른 여객선을 증편하는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여객선 공영화 및 일 2회 이상 여객선 왕복 운항 실시. 연륙교 건설. 유람선 사업 활성화
- ☞ (기초생활기반시설) 멀쩡한 마트나 편의점도 없는 섬도 있어서, 섬에 들어가기 전 대부분의 관광객은 외부에서 사용할 물건을 준비해서 입도하기에,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갖추어야 마음 편히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경쟁력이 갖출 수 있음.
- ☞ (브랜딩) 섬 특징 부각 및 지역자원 활용 다각화, 섬 브랜드 체계 확립
- ☞ (공동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주체성 강화

□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 내 과제 중 ‘교통수단 다변화’와 ‘문화/복지/의료/교육 확충’ 중요

- 기초지역에서는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6개 과제 중 ‘교통수단 다변화’(3.1점)와 ‘지역경제 기반 구축’(2.8점), ‘정주환경 개선’(2.8점)을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요도는 ‘교통수단 다변화’(3.2점), ‘문화/복지/의료/교육 확충’(3.1점), ‘정주환경 개선’(3.0점), ‘지역경제 기반 구축’(3.0점)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인천 섬의 소멸을 막고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 없는 곳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지켜져야 함을 방증하며, 이는 국내 대부분의 섬 지역이 지닌 공통과제이기도 함
- 한편 중요도 부문에서 ‘문화/복지/의료/교육 확충’이 두 번째 요소로 꼽혔다는 사실은, 현대사회의 지역발전 패러다임, 즉 ‘문화적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성과 지역문화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섬 지역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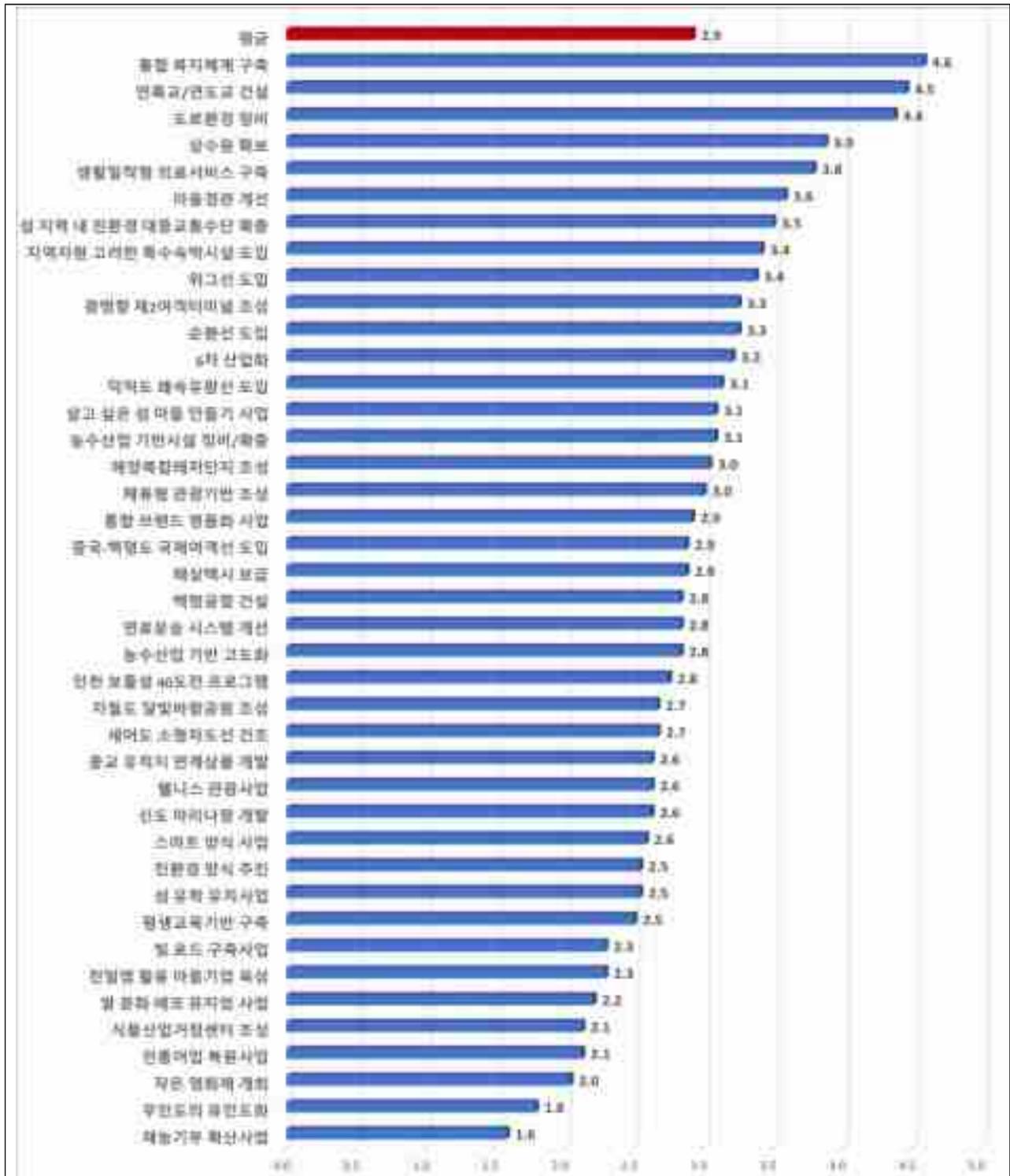
[그림 5-2]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기본계획 내 과제별 중요도·시급도 (n=24)



□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한 공감도는 사업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전략과제별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별 점수가 중요도의 경우 1.6점부터 4.6점, 시급도의 경우 1.5점부터 4.3점까지 분포해 사업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모든 섬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초인프라 조성’ 및 ‘지역성 제고’ 관련 사업에는 큰 지지를 보이는 반면, 지역발전 프로세스상 고도화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특정 섬에만 적용되는 사업, 교육과 산업 분야 사업의 경우는 상대적 공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5-3]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기본계획 내 사업별 중요도 (n=24)



[그림 5-4]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기본계획 내 사업별 시급도 (n=24)



VI. 제언

❖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2022-2026)」 비전체계 및 추진과제



구분		추진과제
살고 싶은 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섬 지역 도로환경 정비로 생활 편의성 제고(교통사고 방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안정적인 양질의 상수원 확보(수자원 확보·관리로 삶의 질 향상)
		마을환경 정비로 깨끗한 섬 이미지 창출(마을경관개선)
	문화, 복지, 의료, 교육 확충	무인도의 유인도화
		재능기부 확산사업 '씩 튀기기' 추진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체계 구축(백령복합커뮤니티센터)
삶의 터전인 섬	균형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 구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도모
		지역사회 평생교육기반 구축(학습등대)
	주민 소득 일자리 창출	섬 유학(특성화 학교) 유치사업 및 지원
		작은 영화제 개최(생활 속 문화환경 구축을 통한 문화의 일상생활화)
		농수산업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산 환경 조성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 고도화
		살고 싶은 섬 마을 만들기 사업(특성화공모사업 연계)
		스마트 양식 사업
		바이오플라크를 이용한 친환경양식 추진
		전통어업 복원사업(해선망)
섬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		
지속 가능한 섬	교통 수단의 다변화	통합 브랜드 명품화 사업
		피셔리 식품산업거점센터 조성
		천일염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위그선(수면비행선박) 도입 및 시범운영(백령 왕복 2시간 소요)
		해상택시 보급(법률 제·개정 건의) 및 친환경요트코스 개발
		순환선 도입(연료운반선, 도선 활용)
		섬 지역 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확충(자전거, 스마트모빌리티 등)
		세어도 소형차도선 건조
		연료운송 시스템 개선을 통한 해양안전 강화(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덕적도의 자(子)도간 쾌속유람선 도입
중국~백령도간 국제여객선 도입		
백령공항 건설		
연륙교 및 연도교 건설(내륙 및 섬 간 이동성 확보)		
광명항 제2여객 터미널 조성		

구분	추진과제
해양관광 복합 레저의 섬	해양복합레저단지 '시선(Sea-Sun) 조성 및 soft 관광프로그램 개발
	신도 마리나항 개발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및 해변승마
	지역자원을 고려한 특수숙박시설 도입
	인천 보물섬 40도전 프로그램
	빛 로드 구축사업
	인천 웰니스 관광사업 추진
	쌀 문화 에코 뮤지엄 사업
	종교 유적지 및 순례지 연계상품 개발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사업

1) 기본방향

□ '비전-방향-분야/전략' 체계를 '미션-비전-가치-방향-분야/전략' 체계로 재구조화

- <인천 섬 발전기본계획>의 비전체계는 '모두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인천 섬!'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방향, 4대 분야 및 전략으로 이루어졌음
- 본 연구는 비전체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미션' 항목을 추가했으며, 기존 계획에서 '방향' 항목에 들어가있던 요소를 '가치'로 전환하고, 전략 및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 방향 6개를 별도로 설정하였음

□ '살고 싶은 섬'의 구체적 방향성 제시 및 개념(범위) 확장 필요

- 기존 비전체계의 2가지 키워드는 '살고 싶은 섬'과 '지속가능성'인데, 이는 섬(지역)을 '거주 대상'으로 한정해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살고 싶은 섬'의 방향성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명확성이 결여됨 (거주지로서의 섬 + 방문지로서의 섬 + 대상지로서의 섬 고려 필요)
- 섬 또한 공간이자 지역이기 때문에 현 지역 발전의 핵심 패러다임인 '생태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인천 섬 발전의 미션을 단순히 '살고 싶은 섬'이 아닌 '살고 싶은 섬이 되기 위한 선순환 프로세스(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하였음. 또 개발이 아닌 재생의 관점,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발전, 탑-다운 방식이 아닌 버텀-업 방식의 지역 활성화 개념을 비전체계에 반영하였음
- 한편 비전의 경우 '살고 싶은 섬'에 '찾고 싶은 섬' 개념을 더하고, 이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지역 정체성'과 '지역 매력도'를 설정함으로써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음

□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관점(방향), 정책추진의 기반(체계) 마련 방향을 각각 제시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많은 과제가 단위사업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에 해당하는 논리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정책(사업)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이자 근거로 기능함
- 먼저 정책의 세부 내용을 디자인할 때 적용될 3가지 핵심 방향으로 ①지역적/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②관계적/연쇄적 지역 발전을 지향해야 하고(중앙-광역-기초 간 관계 포함), ③주민의 주체성과 수요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
-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고려될 방향으로는 ①무엇보다 주민과 관계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 ②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③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설정함

[표 6-1] 인천 섬 발전 비전체계 보완(안)

구분	As-Is	검토 결과	To-Be
미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추진의 당위성과 직결되는 미션 부재 (정책의 궁극적 목표 설정 필요) 	<p>지역 정체성 확립 및 매력도 증진을 통해, 섬 발전 선순환 프로세스(생태계) 구축</p>
비전	모두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인천 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목표인 '거주지로서의 섬'만을 상정하고 있어 '방문지로서의 섬' 함께 도모하는 비전 필요 	<p>모두가 살고 싶고, 모두가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인천 섬!</p>
가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향'으로 설정된 3개 키워드를 '핵심가치'로 조정 필요 (방향은 가치 구현을 위한 벡터값이어야 함) 	<p>살고 싶은 섬 / 찾고 싶은 섬 / 지속가능한 섬</p>
방향	살고 싶은 섬 / 삶의 터전인 섬 / 지속가능한 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섬 발전과 관련해 추진되는 모든 전략/사업을 관통하는 방향 설정 필요 사업의 내용적 측면과 추진방식 측면으로 구분해 각각 방향 설정 (정책 동향 및 사례조사 결과 반영) 	<p>[내용 측면] 지역적/문화적 관점의 접근, 관계적/연쇄적 발전 지향, 주민의 주체성과 수요에 기반한 정책</p> <p>[추진 측면] 인식 개선을 통한 공감도 증진 전제,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의 효과성/효율성 극대화</p>
분야 / 전략	<p>[정주환경] 지역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p> <p>[지역경제] 균형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p> <p>[문화관광] 해양관광 복합 레저의 섬</p> <p>[교통] 교통 수단의 다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인천 섬 발전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는 문화관광 분야 전략 범위 확대 필요 부문별 전략이 적절히 추진되기 위한 기초 토대로 '정책기반' 분야 추가 적용 필요 	<p>[정주환경] 지역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p> <p>[지역경제] 균형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p> <p>[문화관광] 지역문화 확립 및 관광활성화</p> <p>[교통] 교통 수단의 다변화</p> <p>[정책기반] 섬 발전 정책기반 입체화</p>

[그림 6-1] 인천 섬 발전 비전체계



2) 전략과제

□ 도출된 정책 방향성을 토대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49개 전략과제 검토해 최종 42개 과제 제안

- 새롭게 제시한 비전체계를 토대로 기존의 49개 전략과제를 가치성, 효과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각각 검토하고, '유지', '보완'(과제 내용 변경/추가), '확대'(대상과 내용의 범위 조정), '통합'(과제 간 통합), '재검토'(과제 삭제), '신규'로 구분하였음
- 최종적으로 5개 부문(분야), 13개 세부 분야, 42개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과제의 중요도와 시급도를 고려해 추진 시기를 각각 제안함

[표 6-2] 인천 섬 발전 전략과제 수정(안)

부문	과제	검토 결과	유형	수정(안)	
거주 환경	섬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주거환경 개선 및 전원마을 조성뿐 아니라 단계별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계속	보완	
	섬 지역 도로환경 정비	-	계속	유지	
	안정적 양질의 상수원 확보	노후시설 교체, 식수 공급방식의 고도화 등 현재 제시된 내용보다 다양한 대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	단기	확대	
	마을환경 정비로 깨끗한 섬 이미지 창출	-	단기	유지	
	무인도의 유인도화	-	장기	재검토	
정주 환경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체계 구축(백령복합커뮤니티센터)	센터 조성과 함께 인력 및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대상 지역 확대 및 거점 개발방식 적용 등도 고려될 필요 있음	단기	확대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 구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도모	-	중장기	유지	
	재능기부 확산사업 '씩 튀기' 추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대안 필요(재능기부에 따른 베네핏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타 주체/기관/사업과 어떻게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것인지 등)	중장기	보완	
교육 문화	지역사회 평생교육기반 구축(학습등대)	교육의 대상 확대(학령인구를 넘어 주민 전체 커버), 교육 영역 확대(일반적으로 간주되는 '평생교육 과목'을 넘어 주민 역량강화, 문화예술 교육 등과의 연계 필요), 교육청 등 평생교육 주관 부서/기관과의 긴밀한 논의 필요	중장기	확대	
	섬 유학(특성화 학교) 유치사업 및 지원	해양레저, 갯벌체험 등 테마의 식상함 보완 필요	중장기	보완	
	작은영화관 및 영화제 개최	문화예술 특정 장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여가'라는 차원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경험 기회 제공 필요 (문화의 개념은 확대 적용하되, 후술할 '지역문화' 카테고리에 반영)	중장기	조정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살고 싶은 섬 마을 만들기 사업	타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가 가장 필요한 과제(ex. 관광두레나 창업지	계속	보완

부문	과제	검토 결과	유형	수정(안)	
경제		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비경제 분야 사업과의 연계 등), 트랙 세분화 및 전문가 풀 확보 필요(ex. 마케팅 지원 등)			
	농수산업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생산 환경 조성	-	단기	유지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 고도화	-	단기	유지	
	주민 소득화	스마트 양식 사업	-	중장기	통합
		바이오플라크를 이용한 친환경 양식 추진	-	중장기	통합
		전통어업 복원사업(해선망)	실효성 증진 요인 필요(ex. 홍보관 설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등)	계속	보완
		섬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	6차 산업화 카테고리 통합(단위 사업으로 세분화 및 우선순위 결정 필요)	중장기	통합
		통합 브랜드 명품화 사업	지역문화 브랜딩 사업에 흡수	단기	통합
		피서리 식품산업거점센터 조성	6차 산업화 카테고리 통합(단위 사업으로 세분화 및 우선순위 결정 필요)	중장기	통합
	천일염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6차 산업화 카테고리 통합(단위 사업으로 세분화 및 우선순위 결정 필요)	중장기	통합	
문화관광	해양 리조트	해양복합레저단지 시선(sea-sun) 조성 및 soft 관광프로그램 개발	-	중장기	유지
		신도마리나 구축사업	-	중장기	유지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및 해변승마	-	단기	유지
		지역자원을 고려한 특수숙박 시설 도입	-	중장기	유지
	해양 문화	인천 보물섬 40도전 프로그램	지역(스팟) 콘텐츠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어형 프로그램의 실효성 매우 낮음(후순위 사업으로 변경 제안)	단기	재검토
		빛 로드 구축사업	-	중장기	유지
		인천 웰니스 관광사업 추진	-	중장기	유지
	섬 개발	쌀 문화 에코 뮤지엄 사업	쌀에 관한 상징성과 계획 중인 콘텐츠를 고려했을 때 시설 경쟁력 낮을 것으로 판단됨	중장기	재검토
		종교 유적지 및 순례지 연계 상품 개발	코스형 상품의 경우 이동시간에 경험할 콘텐츠(ex. 이색 교통수단, 자연경관, 종교 프로그램 등) 개발이 반드시 필요함	중장기	보완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사업	-	단기	유지
지역 문화	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및 브랜딩	주민공동체가 주도해 각 섬의 문화 정체성을 발굴하고, 전문가 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브랜딩(홍보마케팅 포함)함으로써 지역 멤버십 제고 및 지역 이미지 개선	-	신규	
	문화 인프라 조성 및 콘텐츠	문화적 방식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	신규	

부문	과제	검토 결과	유형	수정(안)	
	개발	기초 토대 마련 목표, 단독 과제로 추진되기보다 타 과제(사업)와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			
	문화예술 전문(매개)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문화적 방식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초 토대 마련 목표, 단독 과제로 추진되기보다 타 과제(사업)와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	-	신규	
	문화 및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	문화적 방식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초 토대 마련 목표, 단독 과제로 추진되기보다 타 과제(사업)와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	-	신규	
교통	교통수단	위그선(수면비행선박) 도입	-	중장기	유지
		해상택시 보급 및 친환경요트코스 개발	-	중장기	유지
		순환선 도입	-	중장기	유지
		섬 지역 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확충(자전거, 스마트모빌리티 등)	-	중장기	유지
		세어도 소형차도선 건조	-	중장기	유지
		연료운송 시스템 개선을 통한 해양안전 강화(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	단기	유지
		덕적도의 자도간 쾌속유람선 도입	-	단기	유지
		중국-백령도간 국제여객선 도입	-	단기	유지
	인프라 구축	백령공항 건설	-	중장기	유지
		연륙교 및 연도교 건설	-	계속	유지
광명항 제2여객 터미널 조성		-	중장기	유지	
정책 기반	추진 체계	섬 발전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및 센터 역할 재정립, 중앙-광역-기초 간 정책전달체계 재구조화,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섬 발전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체계 안정화 필요	-	신규	
	관리 체계	정책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 체계 마련	섬 발전 과제의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성과를 부문별로 진단 및 환류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신규
인천 섬 관련 연구/아카이브 체계 마련		인천섬발전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인천 섬 지역의 자연/인문/경제/산업 등 부문별 현황을 정기적/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카이빙 함. 이를 토대로 인천 섬 발전 정책의 방향성 및 전략을 수립(정부 및 한섬원 정책 기조 반영)하고, 그 결과를 기초단위에 공유하는 역할 수행	-	신규	

[표 6-3] 인천 섬 발전 42개 전략과제(안)

부문		과제	유형
정주 환경 (10)	거주환경 (4)	섬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중장기
		섬 지역 도로환경 정비	계속
		안정적 양질의 상수원 확보	단중기
		마을환경 정비로 깨끗한 섬 이미지 창출	단중기
	보건복지 (3)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체계 구축	단중장기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 구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도모	단중장기
		재능기부 확산사업 '씩 토크' 추진	계속
	교육여가 (3)	지역사회 평생교육기반 구축(학습등대)	중장기
		섬 유학(특성화 학교) 유치사업 및 지원	장기
수요 기반 여가 프로그램 개발		계속	
지역 경제 (6)	공동체 활성화 (3)	살고 싶은 섬 마을 만들기 사업	계속
		농수산업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생산 환경 조성	단중기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 고도화	중장기
	주민 소득화 (3)	스마트/친환경 양식 지원	중장기
		전통어업 복원사업(해선망)	계속
섬 자원의 6차 산업화	중장기		
문화 관광 (12)	해양 리조트 (4)	해양복합레저단지 시선(sea-sun) 조성 및 soft 관광프로그램 개발	중장기
		신도마리나 구축사업	중장기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및 해변승마	중장기
		지역자원을 고려한 특수숙박시설 도입	중장기
	해양문화 (2)	빛 로드 구축사업	중장기
		인천 웰니스 관광사업 추진	중장기
	섬 개발 (2)	종교 유적지 및 순례지 연계상품 개발	중장기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사업	단기
	지역문화 (4)	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및 브랜딩	중장기
		문화 인프라 조성 및 콘텐츠 개발	중장기
문화예술 전문(매개)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중장기	
문화 및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		계속	
교통 (11)	교통수단 (8)	위그선(수면비행선박) 도입	중장기
		해상택시 보급 및 친환경요트코스 개발	중장기
		순환선 도입	중장기
		섬 지역 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확충(자전거, 스마트모빌리티 등)	중장기
		세어도 소형차도선 건조	중장기
		연료운송 시스템 개선을 통한 해양안전 강화(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단기
		덕적도의 자도간 쾌속유람선 도입	단기
		중국-백령도간 국제여객선 도입	단기
	인프라 구축 (3)	백령공항 건설	중장기
		연륙교 및 연도교 건설	계속
광명항 제2여객 터미널 조성	중장기		
정책 기반 (3)	추진체계(1)	정책 관리체계 확립 및 네트워크 구축	단중기
		정책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 마련	중장기
	관리체계(2)	인천 섬 관련 연구/아카이브 체계 활성화	계속

3) 단계별 로드맵

[그림 6-2] 인천 섬 발전 단계별 로드맵

[1단계] 점&선 조성기 / 2024년~2025년	
'머무르기 쾌적한 섬'을 조성하는 시기	
보편성 확보	· 모든 섬이 정주여건 최소기준을 충족하도록 기초생활인프라 확충(복지적 관점)
사회적 합의	· 섬 발전 방향에 대한 담론 형성 및 지역 내 공감대 형성 (아젠다 도출 및 협의 지속 추진) - ex) 전방위적 발전 시도 vs 선택과 집중 지원
지역 활성화 토대 마련	·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주민과 관계자의 인식 개선 및 긍정적 경험(기억) 축적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성 발현 계기 마련
정책추진 토대 마련	· 인천섬발전지원센터를 포함한 주체별 R&R 재정립 (센터는 매개역할 수행) · 중앙-광역-기초 간 관계 정립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지역 리더(주민 리더 포함) 양성 · 인천 섬 현황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연구조사하고 아카이빙 할 토대 마련
* 핵심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 섬 지역 도로환경 정비, 안정적 양질의 상수원 확보, 마을환경 정비로 깨끗한 섬 이미지 창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 구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도모 · 지역경제: 농수산업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생산 환경 조성, 살고 싶은 섬 마을 만들기 · 문화관광: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사업 · 교통: 연료운송 시스템 개선을 통한 해양안전 강화, 덕적도의 자도간 쾌속유람선 도입, 중국-백령도간 국제여객선 도입, 연륙교 및 연도교 건설 · 정책기반: 정책 관리체계 확립 및 네트워크 구축, 인천 섬 관련 연구/아카이브 체계 활성화 	



[2단계] 면 조성기 / 2026년~2027년	
고유성과 정체성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	
보편성 안착	· 1단계 사업 지속추진 및 보편적 복지 지역 내 안착
지역 정체성 확립	· 섬별 색깔과 분위기를 찾고 정체성 확립 · 지역특화 자원 개발 및 브랜딩 추진 (인천 섬 브랜드, 섬별 브랜드 등) · 섬별 특화 사업이 기획 및 디자인되는 시기
지역경제 발전	· 섬 지역 산업경제 고도화 및 기술 접목 확대
네트워크 구축	· 1단계에서 구축한 공동체성이 발휘되며 협의체 기능 정상 작동 (문화적 지역 발전전략 모색 및 시도) · 민-관, 섬-섬, 내륙-섬 등 다각적 관계망과 문화안전망 구축
정책추진 체계 고도화	· 광역(인천섬발전지원센터)과 기초지역 간 스킨십 확대 및 센터 역할 공고화 (센터는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에 전파하는 역할 수행)
* 핵심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환경: 섬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사업, 수요 기반 여가 프로그램 개발, 재능기부 확산사업 '씩 토크' 추진 · 지역경제: 전통어업 복원사업, 살고 싶은 섬 마을 만들기 사업 · 문화관광: 지역 문화정체성 확립 및 브랜딩, 문화 인프라 조성 및 콘텐츠 개발, 인천 웰니스 관광사업 추진, 종교 유적지 및 순례지 연계상품 개발,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과 해변승마, 지역자원을 고려한 특수숙박시설 도입 · 교통: 순환선 도입, 섬 지역 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확충, 연륙교 및 연도교 건설 · 정책기반: 정책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 마련, 인천 섬 관련 연구/아카이브 체계 활성화 	



[3단계] 생태계 조성기 / 2028년 이후

다양성이 향상되며 재생산 사이클이 다각화되는 시기

- 지원정책의 다각화 및 다양화 시도 (대상, 내용, 구조, 방식 등)
- 주체/지역/정책 네트워크의 다각화 및 '중양-광역-기초', '공공-민간' 등의 R&R 유연화 (섬 발전 관련 사업의 분담 기준 안착)
- 인천섬발전지원센터의 고유사업 확대 및 인천시와 타 지역 간 네트워크 고도화
- 섬별 특화 사업 확대 추진, 산업 고도화, 섬 발전기금 조성 및 심의위 운영 가능성 모색 등

*** 핵심 추진과제**

- 정주환경: 섬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섬 유학 유치사업 및 지원, 지역사회 평생교육기반 구축, 섬 지역 도로환경 정비
- 지역경제: 스마트/친환경 양식 지원, 섬 자원의 6차 산업화,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 고도화
- 문화관광: 신도마리나 구축사업, 시선 조성 및 소프트 관광프로그램 개발, 빛 로드 구축사업, 문화 및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
- 교통: 위그선 도입, 해상택시 보급 및 친환경요트코스 개발, 세어도 소형차도선 건조, 백령공항 건설, 광명항 제2여객 터미널 조성
- 정책기반: 인천 섬 관련 연구/아카이브 체계 활성화, 정책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 마련

부록

2023년 기준 주요 공모사업 현황

❖ 검토 대상 선정기준

-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내 ‘보조사업 현황’ 중 지출목이 ‘자치단체이전’인 2023년도 공모사업들 검색 → 섬 관련 사업의 대표 주무부처인 행안부, 해수부, 문화부의 사업들을 추출한 후, 이 중 섬 지역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한 번 더 추출함 (지자체 공모사업 중 한 국관광공사 등의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은 제외함)
- ✓ 각 사업의 세부 기준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단위사업이 인천시 섬 지역 현황과 부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 담당자의 추가 검토가 필요함

[표] 섬 발전 관련 주요 공모사업 리스트(2023년 기준)

부처	분야	부문	사업명	지출세목
행안부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0003] 부처지역사업 연계 지원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5]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1]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2] 시도 생활공감정책 온-오프라인 활동 지원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4] 작은 섬 공도 방지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03]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1]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초인프라 조성/확충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05]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2] 특수상항지역개발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부자원 관리	[0003]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사업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3]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8]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8]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0001] 시스템 구축 지원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01] 마을기업 육성사업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	[0002]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조사연구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3]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0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부처	분야	부문	사업명	지출세목	
해수부	환경	해양환경	[0004]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02]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10] 연안정비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03] 해양보호구역관리(경상보조)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2] 해양보호구역관리(자본보조)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07] 해양쓰레기 정화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농림수산	수산·어촌	[0002] 2022 어촌뉴딜을 통한 혁신어촌 조성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12] 귀어학교 개설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21] 생계안정자금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5] 생분해어구보급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7]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2]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03] 어선안전장비지원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03] 어업활동지원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1]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13] 어촌에서 살아보기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17] 어촌유휴시설 활용 어촌특화산업육성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12] 어촌지도자 교육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14]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03] 어촌활력증진지원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19] 우수어촌계지원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0001]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1]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3]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4] 소외도서 향로운영 지원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문화	문화 및 관광	관광	[0006]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경상보조)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부처	분야	부문	사업명	지출세목
부			[0007]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자본보조)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01]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지원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5] 관광거점도시 육성(경상보조)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44]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5] 문화의 바다공간 조성(경상)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2] 산업관광 활성화(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20] 생태테마 관광자원화(지자체 경상)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12] 생활관광 활성화(지자체 보조)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3] 섬 관광 활성화(경상)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22]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지자체)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문화예술	[0023]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03]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지자체)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01] 문화도시 조성 지원(지역지원)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24]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0027]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016] 학교예술강사지원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연구진

연구책임

김준호 프로젝트이안 대표

연구원

류정아 프로젝트이안 이사

강문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2023년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인천 섬 발전 정책 비교분석 연구

